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OECD 사회지표

LGBT(성소수자) 문제를 집중 조명(A SPOTLIGHT ON LGBT PEOPLE)

OECD

OECD KOREA Policy Centre 번역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OECD 사회지표

LGBT(성소수자) 문제를 집중 조명(A SPOTLIGHT ON LGBT PEOPLE)

이 번역본은 OECD와의 합의 하에 출간되었으나 OECD의 공식 번역본은 아닙니다.
번역의 질과 원문과의 일관성은 온전히 번역본 저작자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불일치 시에는 원본만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ECD KOREA Policy Centre 번역

본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과 언급된 논의들이 반드시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 및 지도는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 국경과 경계의 결정, 영토와 도시 그리고 지역의 명칭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출판물의 원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영어로 발간되었습니다: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 2019 OECD

본 보고서 영문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 와의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 2019 OECD/Korea Policy Centre for this Korean edition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책임하에 제공하였습니다. OECD가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 Stéphane Carcillo.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참조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엄선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는 격년으로 발행되는 세계적 사회지표 현황을 개관하는 자료로 OECD가 아홉 번째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제1장은 성소수자의 수 및 그들의 사회복지·환경적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키는 모범적 사례를, 제2장에서는 한국독자가 OECD 사회지표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제3장은 사회적 위험과 정부효과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형운태 부본부장, 박유선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사회 정책 연구를 위하여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황승현

서 문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사회지표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의 아홉 번째 판이다. 앞서 나온 보고서들처럼 이번 보고서도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웰빙과 추세 변화에 관한 정량적 근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여덟 개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일부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고 몇 가지 새로운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보고서에 별도로 포함했다.

이 보고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LGBT)에 주목하여, LGBT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LGBT가 OECD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수용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OECD 국가 중 절반만이 자국 내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트랜스젠더에게 불임 수술,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또는 정신과 진단 없이 공식 문서에서 성별을 성 정체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3분의 1 미만이다. LGBT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은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강화는 OECD 회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제1장은 성소수자의 규모 및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증거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시한다. 또한 LGBT에게 보다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의 광범위한 사회적 결과를 비교한다. 제2장은 독자들이 OECD 사회지표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정부 효과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를 소개하고, 제4장부터 8장까지는 이러한 지표들을 더욱 상세히 다루고 있다. 지표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OECD웹사이트 (http://oe.cd/s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Pauline Fron, Maxime Ladaique, Veerle Miranda (project leader), Marie-Anne Valfort (제1장)와 Valerie Frey (제3장)가 작성했고 James Brown, Chris Clarke, Carrie Exton (Statistics and Data Directorate), Rodrigo Fernandez, Gaelle Ferrant (Development Centre), Elif Koksal-Oudot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그리고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Michael Förster, Gaetan Lafortune, Fabio Manca, Pascal Marianna, Marissa Plouin, Sarah Strapps와 Cecile Thoreau 이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Monika Queisser(Head of the OECD Social Policy Division)는 본 보고서의 작성을 감독하였다.

목 차

약어 및 관용기호 ····· 7
요 약 ····· 9
제1장 LGBT 과제 : 성소수자를 보다 잘 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13
서론 ····· 14
1.1.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구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15
1.2. LGBT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 21
1.3. LGBT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38
주 ····· 46
참고문헌 ····· 46
부록 1.A OECD 국가의 성적 자기 정체화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데이터 수집 ····· 53

제2장 OECD 사회지표 해석 ····· 59
2.1. 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 60
2.2. 지표의 선정과 설명 ····· 61
2.3. 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 64
참고문헌 ····· 65

제3장 사회적 위험과 정부 효과성에 대한 인식 ····· 67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우려 ····· 68
정부 효과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 70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 ····· 72

제4장 일반 지표 ····· 75
가구소득 ····· 76
출산율 ····· 78
이민 ····· 80
가족 ····· 82
인구 추이 ····· 84

제5장 자활 지표 ····· 87
고용 ····· 88
실업 ····· 90
기술 ····· 92
교육비 지출 ····· 94
은퇴 후 기대 여명 ····· 96

제6장 형평성 지표 ····· 99
불평등 ····· 100
빈곤 ····· 102
비경제활동 급여 ····· 104
사회 지출 ····· 106
구매 가능한 주택 ····· 108

제7장 보건 지표 ····· 111
기대여명 ····· 112
보건 지출 ····· 114
HIV/AIDS ····· 116
자살 ····· 118
흡연 및 음주 ····· 120

제8장 사회 통합 지표 ····· 123
삶의 만족도 ····· 124
기관에 대한 신뢰 ····· 126
여성에 대한 폭력 ····· 128
투표 ····· 130
온라인 활동 ····· 132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ilibrary
http://www.oecd.org/oecddirect/

StatLinks
이 보고서에는 인쇄 페이지를 통해 엑셀파일을 제공하는 StatLinks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표 또는 그래프 오른쪽 하단에 있는 StatLinks를 찾아보세요.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 주소를 인터넷 부라우저에 입력하면 관련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PDF버전을 보는 경우 링크를 클릭만 하면 관련 엑셀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약어 및 관용기호

OECD 회원국 ISO 코드

호주	AUS	한국	KOR
오스트리아	AUT	라트비아	LVA
벨기에	BEL	리투아니아	LTU
캐나다	CAN	룩셈부르크	LUX
칠레	CHL	멕시코	MEX
체코	CZE	네덜란드	NLD
덴마크	DNK	뉴질랜드	NZL
에스토니아	EST	노르웨이	NOR
핀란드	FIN	폴란드	POL
프랑스	FRA	포르투칼	PRT
독일	DEU	슬로바키아	SVK
그리스	GRC	슬로베니아	SVN
헝가리	HUN	스페인	ESP
아이슬란드	ISL	스웨덴	SWE
아일랜드	IRL	스위스	CHE
이스라엘	ISR	터키	TUR
이탈리아	ITA	영국	GBR
일본	JPN	미국	USA

기타 주요 경제국 및 G20 국가 ISO 코드

아르헨티나	ARG	인도네시아	IDN
중국	CHN	러시아 연방	RUS
콜롬비아	COL	사우디아라비아	SAU
코스타리카	CRI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인도	IND		

관례적 표시

.. 자료없음.

그림에서 OECD는 입수 가능한 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들의 비 가중평균을 의미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요 약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가 OECD 국가들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반적으로 LGBT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윤리적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성소수자(sexual and gender minorities)에 대한 포용성의 확립은 OECD 국가 정부들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첫 번째 장에서는 OECD 국가에 있는 성소수자의 규모와 LGBT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데이터 및 증거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LGBT에 대한 차별이 수백만 명의 경제적 전망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더욱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범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LGBT는 소수자 집단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인구총조사에서도 LGBT를 파악하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적이 없으며, 전국 단위의 몇몇 표본조사만이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추산치를 제공하고 있는 OECD 14개국에서 LGB(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의 비율은 성인 인구의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OECD 14개국에서 1,7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LGBT로 자기 정체화(self-identify)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며, 이는 칠레나 네덜란드의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치이다.

LGBT로 자기 정체화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 표본조사에서 자신을 LGBT라고 밝히는 숫자는 조사할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LGBT라고 공개하는 사례가 젊은 층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 추이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4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의 1.4%만이 자신을 LGBT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1980~1990년대 출생)에서는 그 비율이 8.2%에 이른다.

사회는 성소수자를 보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여전히 만연하다

LGBT에 대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다른곳 보다는 OECD 국가에서 그 태도가 지속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 OECD 국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1~10점의 수용도 척도에서 5점으로 나타나, 완전한 사회적 수용에서 절반 정도에 이르는 데 그쳤다. 그리고 OECD 국가들에서 응답자의 매우 소수만이 자신의 자녀가 다른 성별로 옷을 입거나 꾸미는 것에 대해 용인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불편함은 LGB에 대한 불편함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BT는 광범위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LGBT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 및/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개인적인 차별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보다는 LGB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보다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더 높다.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LGBT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50건의 연구 논문에서 OECD 전체 국가의 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LGBT와 비 LGBT 성인의 노동시장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LGBT는 고용상태 및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BT는 비LGBT보다 7% 덜 고용되고 노동소득은 4%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치는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실제 불이익의 최소치(lower bound)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해당 조사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LGBT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LGBT는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 명의 가상 구직자들이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비율을 비교하여 LGBT 구직자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측정되었다. 고용주는 이러한 구직자 중의 한 명을 LGBT로, 다른 한 명은 비LGBT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 구직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 게이/레즈비언 조직에서의 자원봉사 또는 업무 경험과 같은 이전 경력을 통해 전달될 때 이성애 구직자에 비교하여 취업 면접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1.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트랜스젠더 구직자 및 노동시장 바깥의 LGBT 개인들에 대한 커다란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BT는 정신건강 장애 발생의 위험이 더 크다

표본조사 데이터에서는 LGBT에 대해 광범위한 심리적 억압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이유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편견/낙인에 기인한다. 이성애 및 출생 시 성별과 성 정체성의 동일시함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간주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LGBT들은 이성애자나 시스젠더가 겪지 않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LGBT의 실태와 이들이 직면한 불이익을 국가 통계에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들을 포용하는 전제조건이다

인구총조사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국가 노동력, 건강 및 차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는 LGBT가 당면한 불이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LGBT는 소수이지만, 전국적 표본조사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이러한 민감 정보를 가장 잘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를 확산하여 다른 국가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LGBT에 대한 차별의 법적 금지와 LGBT에 대한 동일한 권리 보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의 개선에 필수적인 사안이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시행은 잠재적인 범법자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LGBT 포용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적 수용의 결과가 법적 변화에 반영된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환에 기꺼이 순응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동성 간의 결혼/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동성애의 수용성이 훨씬 빠르게 높아지며, 이는 법적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의식적 편견에 대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LGBT 포용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훈련은 개인이 무의식적 편향성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편견 제거를 위한 이와 같은 개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증거들의 수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 증거들은 개입이 짧게라도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간단한 방문형 개입을 통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호의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개입 효과는 3개월 후에도 지속되었다.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제1장

LGBT 과제 : 성소수자를 보다 잘 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서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개인(일반적으로 "LGBT"(박스 1.1)로 불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포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전에 범죄로 분류되었던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성행동은 모든 OECD 국가에서 합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절반만이 자국 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트랜스젠더에게 불임 수술,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또는 정신과 진단을 강요하지 않고 공식 문서에서 성별을 성 정체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3분의 1 미만이다. LGBT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일부 OECD 국가는 헌법에 동성 결혼 금지조항을 도입하였으며,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1] 일부 LGBT 개인이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올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LGBT에 향한 시선은 아직도 곱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차별은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수반한다. LGBT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한 방면을 통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학교에서의 LGBT 공포증과 괴롭힘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줄고, 노동시장에서 LGBT 인재를 제외하여 경제적 산출량을 감소하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LGBT의 생산성을 저해한다. 또한 LGBT의 소외 등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여 정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나아가 LGBT 차별은 제한적 성 역할 규범의 지속성을 통해 성 평등을 대체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의 확대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친다(Valfort, 2017[1]).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은 OECD 정부의 최우선적 정책 현안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OECD 국가에 있는 LGBT 규모와 LGBT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데이터 및 증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LGBT에 대한 차별이 수백만 명의 경제적 전망과 정신건강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게 더욱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범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질문을 다룬다.

-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구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이 장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OECD 국가에 있는 LGBT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LGBT로 자기 정체화(self-identify)하는 사람의 비율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LGBT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섹션에서는 LGBT 개인이 당면한 차별 피해에 대한 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이 섹션에서는 OECD 국가에서 LGBT에 대한 포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LGBT 차별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성 소수자들 가운데 정신건강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편견/낙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LGBT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마지막 섹션에서는 성소수자를 보다 더 포용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한다. LGBT의 실태조사 데이터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이익을 국가 통계에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에서부터,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과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사람들이 LGBT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또한 LGBT 포용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박스 1.1. **LGBT는 누구인가?**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그리고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약자다. LGBT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정의된다. 성적 지향은 한 개인이 이성, 동성, 또는 이성 및 동성에게 느끼는 깊은 감정적 및 성적 매력(sexual attraction), 그러한 매력을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지향성은 이에 따라 이성애자,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남성, 여성, 혹은 양성으로 느끼는 자신의 젠더에 대한 내적 자각, 자아의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cisgender)의 구별이 가능하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을 달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스젠더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과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LGBT 사람들은 "성 소수자"라고도 불린다.

LGBT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간성(intersex)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간성은 신체적, 호르몬 또는 유전적 특징 등이 이분법적인 구분(남성과 여성)에 들어맞지 않는, 완전한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간성을 추가한 비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인해 LGBT는 간성 사이에서 과대대표되고 있으며, 간성을 포함하기 위해 LGBT 약어에 종종 "I"가 추가되기도 한다. 호주에서 간성의 비대표 표본 272명 중, 52%는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정체화하였고, 8%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였다(Jones et al., 2016[2]).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에서 간성의 실태에 대한 질문은 포함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간성에 대한 상황은 이 장에서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간성을 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성이 소수자 집단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 현재까지는 두 개의 연구에서 의학 연구 논문의 메타 분석을 기반으로 간성 인구에 대한 포괄적인 추정치의 제공을 시도했다. 그들의 추정치는 전체 인구의 0.5%(van Lisdonk, 2014[3])에서 1.7%(Blackless et al., 2000[4])까지 다양하다.

1.1.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구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어떠한 인구총조사에서도 LGBT를 파악하는 성적 지향 및/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적이 없으며, 소수의 전국적 표본조사에서만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인구를 기반으로 한 조사 대부분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즉 응답자 파트너의 성별을 통해 LGBT 인구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사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어, LGBT 인구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국가 통계청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한 전국적 표본조사에 성적 자기 정체성(sexual self-identification)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국가는 OECD 중에서도 15개국뿐이다. 이러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이다. 개인에게 본인의 성적 자기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기타", "잘 모름", "응답을 거부함" 등)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인지하는 사람들을 파악해낼 수 있다. 미국은 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최소 10개 이상의 전국적 표본조사를 통해 성적 자기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와 관련된 추정치가 나와 있는 OECD 14개국에서,[2] LGB(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의 평균 비율은 성인 인구의 2.7%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다시 말해, 해당 OECD 14개국에서 최소 1,7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자기 자신을 LGBT로 정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은 실제보다 낮은 수치이며(섹션 1.1.2 참조), 이는 칠레나 네덜란드의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치이다.

그림 1.1. **상당한 규모의 소수가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한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정체화한 성인의 비율

주: 국가마다 다른 조사 방법으로 LGB 인구 추정치를 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정렬되지 않았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surveys reported in Annex Table 1.A.1.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7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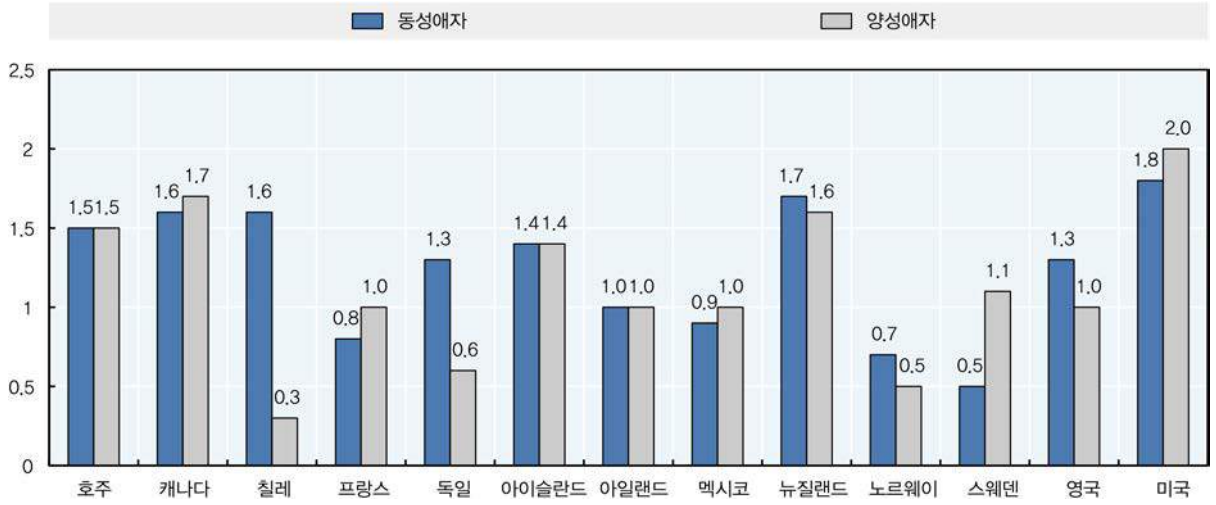
1.1.1. LGB 집중 분석

그림 1.1에 보고된 LGB 인구 추정치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칠레, 독일 및 스웨덴을 제외하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규모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GB 인구 내에서 동성애자의 비율은 프랑스의 44%에서 노르웨이의 58%까지 다양하다(그림 1.2).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LGB 정체성에 대해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LGB 하위 그룹 전반에 걸친 이질성을 감추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동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할 가능성이 작지만 양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성애가 여전히 표준 또는 기본 성적 지향으로 널리 인식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LGB의 비율 차이는 성적 자기 정체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LGB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설문 조사 방법(예: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인터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 등)은 LGB가 정체성을 숨기도록 하여 실제보다 상당히 작은 수치가 보고되도록 이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Valfort, 2017[1]).

그림 1.2.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규모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한 성인의 비율



주: 이탈리아에서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에 대한 LGB 인구의 분류가 나와 있지 않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surveys reported in Annex Table 1.A.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7983http://dx.doi.org/10.1787/888933937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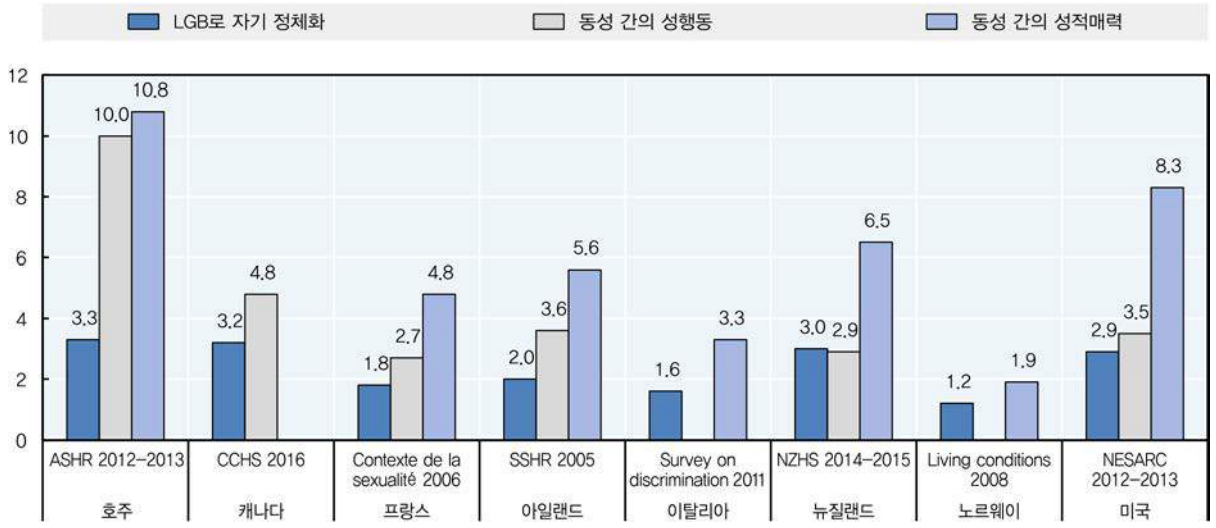
그림 1.1의 자료는 면담자가 아닌, 응답자가 성적 자기 정체화에 관한 질문을 완료한 설문 조사에서 비롯된 경우 LGB 인구의 추정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적용된다. LGB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미국의 전국적 표본조사 8개 중 4개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LGB의 비율은 4.6%로 나타난 반면,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인터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에만 의존하는 나머지 네 가지 조사에서는 LGB 비율이 2.9%로 더 낮게 나타났다.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을 통해서는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적 자기 정체화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객관적인 관점, 즉 성행동(sexual behaviour) 또는 성적매력(sexual attraction)에 근거하여 봤을 때(박스 1.2) LGB의 비율이 실제 비율보다 적게 추산된다. LGB 인구의 규모는 개인의 성적 자기 정체화가 아닌 개인의 성행동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70% 더 크게, 성적매력을 기준으로 삼을 때 두 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난다(그림 1.3).

LGB의 비율이 성적매력을 기준으로 조사시 최대치에 이르고 성적 자기 정체화를 기준으로 조사시 최소치에 이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적매력은 성행동보다 더 포괄적이며, 성행동은 성적 자기 정체화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동성 간의 성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간의 성행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B는 성관계 상대 또는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을 밝히도록 요청받는 경우보다 스스로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라고 정체화하도록 요청받는 경우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Coffman, Coffman and Ericson, 2017[5]).

그림 1.3. **성적 자기 정체화에 대한 질문은 성행동이나 성적매력에 대한 질문보다 LGB 인구 비율에 대한 낮은 추정치를 산출한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성적 지향에 따라 측정한 성인의 비율



주: 그림에서는 국가별로 하나의 조사만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출처: OECD calcul ations based the surveys reported in Annex Table 1.A.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002

박스 1.2. **설문 조사에서 성적 지향에 관해 질문하기**

응답자의 성적 지향은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을 통해 측정 할 수 있다(Williams Institute, 2009[6]).

- **성적 자기 정체화에 관한 질문**
  - ❖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다.
  - ❖ 일반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애자
    - 게이 또는 레즈비언(동성애자)
    - 양성애자
    - 기타
    - 잘 모름 / 응답을 거부함
  - ❖ OECD 15개국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에 성적 자기 정체화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부록 표 1.A.1).
- **성행동에 관한 질문**
  - ❖ 이는 응답자와 성관계를 가진 상대의 성별을 파악한다.
  - ❖ 일반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과거에[예: 몇 년도에] 누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 오직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 주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를 가진 여성 및 남성의 수가 거의 동일하다.
    - 주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 오직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 여성 또는 남성, 누구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 잘 모름 / 응답 거부

박스 1.2. **설문 조사에서 성적 지향에 관해 질문하기** (계속)

❖ 부록 표 1.A.1에 보고된 30개의 전국적 표본조사 중 10개의 조사에는 성행동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 **성적매력에 관한 질문**

❖ 응답자가 성적매력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을 파악한다.

❖ 일반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과거에[예: 몇 년도에] 누구에게 성적매력을 느꼈습니까?"

- 오직 여성에게만 매력을 느꼈다.
- 주로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다.
-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매력을 느꼈다.
- 대부분 남성에게 매력을 느꼈다.
- 오직 남성에게만 매력을 느꼈다.
- 여성 또는 남성, 누구에게도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 잘 모름 / 응답 거부

❖ 부록 표 1.A.1에 보고된 30개의 전국적 표본조사 중 10개의 조사에는 성적매력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1.1.2. 그렇다면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 인구의 추정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가 아는 한, OECD 3개국만이 전국 대표 표본조사에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이후부터, 칠레는 2015년 이후부터, 덴마크는 2017년 이후부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부록 표 1.A.2).

성소수자 집단에서 트랜스젠더는 LGB보다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이용 가능한 추정치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성인 인구 비율은 칠레의 0.1%에서 미국의 0.3%에 이른다(덴마크의 트랜스젠더 인구 추정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박스 1.3).

박스 1.3. **설문 조사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하기**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1단계 접근법 또는 다단계 접근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Williams Institute, 2014[7]).

- 1단계 접근법에서, 응답자는 본인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받으며(이때 "트랜스젠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예, 트랜스 여성(male-to-female transgender)입니다", "예, 트랜스 남성(female-to-male transgender)입니다", "예, 성 구별에 불응하는 트랜스젠더(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 중 어느 하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잘 모릅니다", "응답을 거부함". 이 접근법은 2013년부터 미국의 담배와 건강 인구영향 평가(The 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설문조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 다단계 접근법에서는 이상적으로 3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응답자에게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을 보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출생 증명서에 주어진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중 선택 가능)"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응답자에게 현재의 성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는다. "현재 스스로를 어떤 성별과 동일시합니까? ("남성", "여성", "남성 및 여성 모두", "남성 또는 여성 모두 아님", "잘 모름", "응답을 거부함" 중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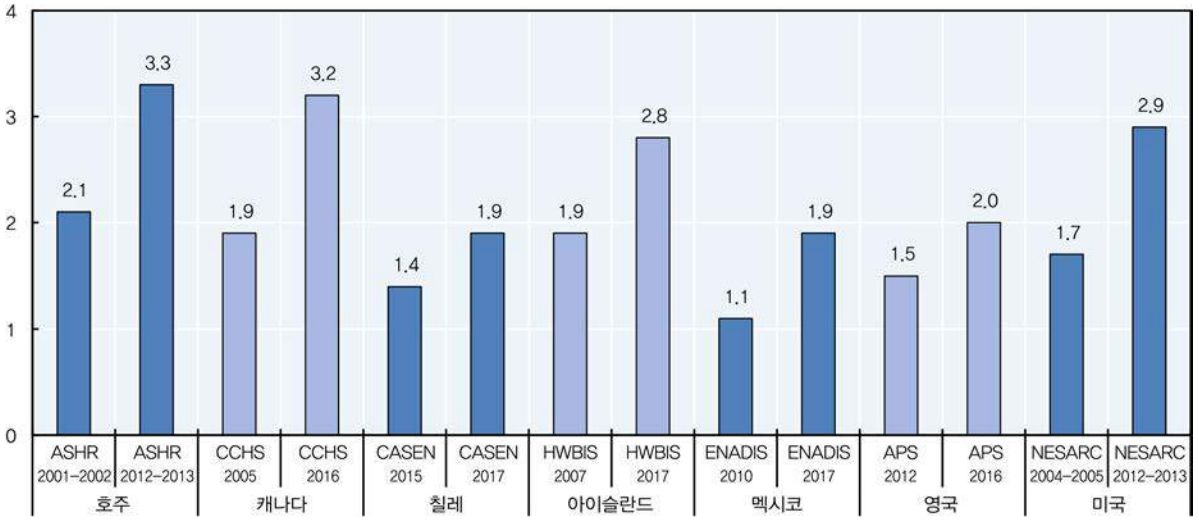
박스 1.3. **설문 조사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하기** (계속)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처음 두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 1단계 접근법과 동일한 질문("당신은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십니까?")을 해야 한다. 마지막 질문은 "출생 시 성별"과 "성 정체성"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의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또한 이 세 번째 질문은 단순히 잘못 보고하여 다른 답변을 하는 개인을 트랜스젠더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 접근법은 2017년부터 덴마크의 "Project SEXUS" 설문조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1.1.3. LGBT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하는 사람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이 LGBT에게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4는 LGB로 자기 정체화하는 사람들의 비율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여러 차례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 가능하도록 통합하여 LGB인구의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조사 두 차례 사이의 평균 기간은 7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서 비율은 약 50% 증가했다.

그림 1.4. **LGB로 자기 정체화하는 사람의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한 성인 비율의 변화



주: 그림에서는 국가별로 하나의 조사만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surveys reported in Annex Table 1.A.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021http://dx.doi.org/10.1787/888933938021

갤럽 일일 추적 여론조사는 LGBT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또 다른 놀라운 예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러한 전국적 표본조사에서 거의 2백만 명의 미국 성인에게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LGBT로 정체화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2년 3.5%에서 2017년 4.5%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1.5). LGBT라고 정체화하는 사례가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 추이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4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의 1.4%만이 LGBT로 자기 정체화하는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에서는 그 비율이 2.4%, X세대(1965~1979년생)에서는 3.5%, 밀레니얼 세대(1980년~1999년생)에서는 8.2%에 이른다.

그림 1.5. **LGBT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GBT로 정체화하는 미국 성인 비율의 변화

출처: https://news.gallup.com/poll/234863/estimate-lgbt-population-rises.asp.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040http://dx.doi.org/10.1787/888933938040

1.2. LGBT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지만, LGBT가 전면적으로 포용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Valfort, 2017[1]). 이 섹션에서는 먼저 OECD 국가 내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LGBT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그다음으로 LGBT 차별의 정도를 조사하고 그것이 LGBT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1.2.1. LGBT에 대한 태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륙 간 설문 조사는 1981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설문 조사는 최근 들어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처음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2012년이었다.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전국적 또는 국가 간 설문조사는 아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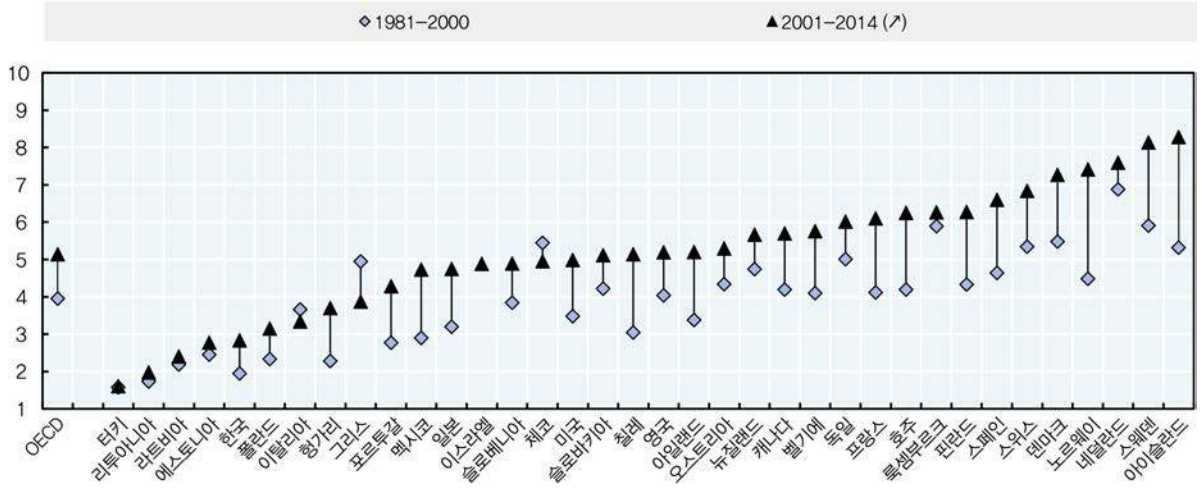
동성애에 대한 수용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진전

동성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성애 혐오증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경향을 띤 OECD 국가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수용이 절반 정도에 그쳐, 1~10점의 수용도 척도에서 평균 5점을 나타냈다(그림 1.6; 박스 1.4). 또한 이러한 평균은 국가 간의 심한 격차를 감추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8.3)는 터키(1.6)보다 점수가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3]

그림 1.6. **동성애에 대한 수용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1981–2000년과 2001–2014년 사이에 OECD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



주: 동성애에 대한 수용성은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측정된다. 여기서 1은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10은 사회적으로 항상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OECD compilation based on AsiaBarometer, European Values Survey, Latinobarometro and World Values Survey (see Box 1.4 for more detai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059http://dx.doi.org/10.1787/888933938059

박스 1.4. **국제적 설문조사에서의 동성애 수용성 측정**

대륙 간 또는 지역 간의 주요 설문 조사는 동성애의 수용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이유로든 동성애가 응답자에게 "정당화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동성애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 카드의 숫자 중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말해주십시오(카드는 1~10점의 척도일 경우, 1은 동성애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고 10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질문은 아시아바로미터(AsiaBarometer),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 라티노바로메트로 (Latinobarometro) 및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와 같은 국제적 설문 조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행동과 문제(예: 낙태, 이혼, 안락사, 매춘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응답자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아시아바로미터, 유럽가치조사, 라티노바로메트로 및 세계가치조사에 포함된 질문이다. 갤럽의 연간 대륙 간 설문 조사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세 번째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이 게이 또는 레즈비언에게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동성애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또한 이 질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섹션에서 동성애에 대한 수용은 동성애의 정당화에 대한 질문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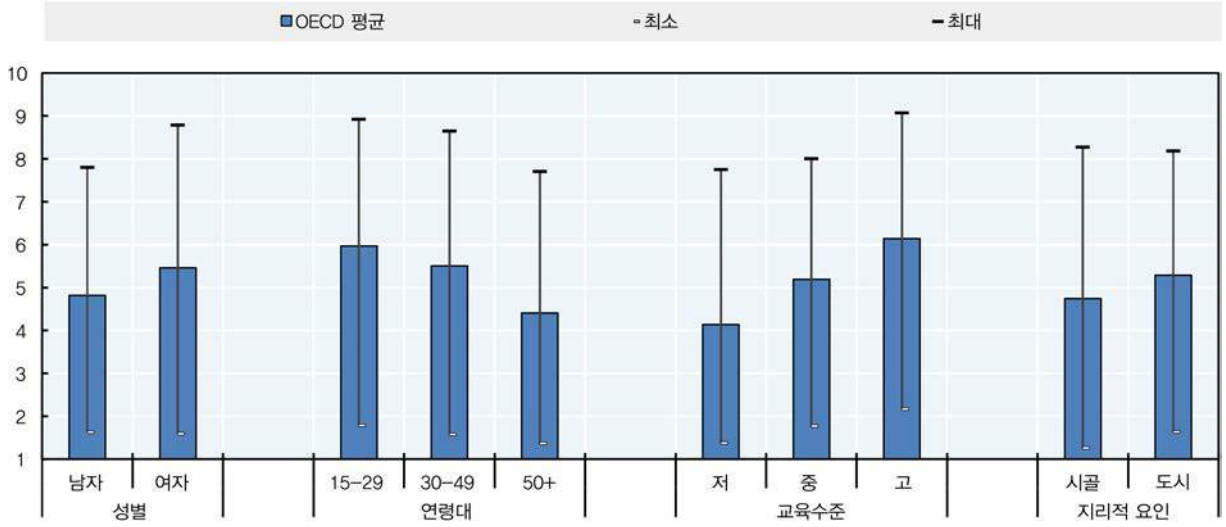
박스 1.4. **국제적 설문조사에서의 동성애 수용성 측정** (계속)

- 첫째, 동성애의 정당화에 대한 질문의 표현은 조사 전반에 걸쳐 동일하지만, 이 일관성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 질문은 아메리카바로미터(Americas Barometer)에서만 다음과 같이 "동성애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당신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두는 데 문제없다",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다", "잘 모름", "응답을 거부함" 중 선택 가능)" 다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동성애자" 또는 "게이" 등을 포함하는 목록에서 이웃으로 원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 둘째,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보다 동성애의 정당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해석하기가 더 쉽다. 후자의 경우, 응답자가 "동성애자" 또는 "게이" 항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응답자가 이러한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단지 금기사항, 즉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한 것일 수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여성, 젊은 층,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그림 1.7).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애에 더 개방적이라는 사실은 남성이 게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으로 설명된다(Kite and Whitley, 1996[8]). 남성의 레즈비언에 대한 수용도는 여성의 레즈비언 및 게이 모두에 대한 수용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림 1.7. **동성애에 대한 수용은 여성, 젊은 층,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OECD국가의 동성애에 대한 수용(2001–2014), 사회 인구학적 집단별



주: 동성애에 대한 수용은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측정된다. 여기서 1은 동성애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10은 항상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OECD compilation based on AsiaBarometer, EuropeanValues Survey, Latinobarometro and WorldValues Survey.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078

젊은 층 또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의 정당화" 척도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들은 6.0(1~10점의 수용도 척도)에 달하는 반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점수가 4.4로 떨어진다(그림 1.7). 이렇게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 한 개인이 나이가 들수록 수용도가 낮아지는 "연령 효과" 그리고 2) 젊은 세대가 사회적 변화에 노출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높은 수용을 띠게 되는 "코호트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연령 효과보다 코호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호트 내 분석 결과는 시간의 경과 및 광범위한 국가 간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Smith, Son and Kim, 2014[9]). 그러나 연령이 높은 코호트 집단은 동성애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시각의 확산에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태도 변화 분석을 통해 모든 코호트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수용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성년 초기에 형성되고 나이가 듦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Andersen and Fetner, 2008[10]).

교육 수준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점수(6.1)는 중등 미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점수(4.1)보다 2점 높다(그림 1.7).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교육을 통해 형성된 이성적 사고가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Ohlander, Batalova and Treas, 2005[11]).

마지막으로, 그림 1.7은 시골 지역보다 도시에서 동성애에 대한 수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Black, Sanders, 및 Taylor(2007[12]), 프랑스의 Rault(2016[13]), 독일의 Kroh, Kühne, Kipp, 및 Richter(2017[14]) 등과 같은 사례는 동성 커플이 도시 지역에 거처를 정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용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국가 간 조사는 지금까지 2012년과 2015년 EU 집행위원회가 수집한 차별에 관한 특별 유로 바로미터(Special Eurobarometer)에 의해 두 차례만 실시되었으며, 대륙 간 조사는 2016년 국제성소수자협회(ILGA)에 의해 실시되었다(박스 1.5).

박스 1.5. **국가 간 설문조사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용도 측정**

차별에 관한 특별 유로 바로미터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묻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포함한다.

- "[응답자의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가 최고위직의 선출직 공직자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1"은 응답자가 "전혀 편안하지 않다"를, "10"은 "완전히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이 질문은 2012년과 2015년에 모두 요청되었다).
-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은 2015년에 한한다)
-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은 2015년에 한 한다)

2016년 ILGA 설문조사에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된다.

- "당신의 아들이 항상 여자로 옷을 입거나 꾸민다면, 그것에 대해 용인하겠습니까?"
- "당신의 딸이 항상 남자로 옷을 입거나 꾸민다면, 그것에 대해 용인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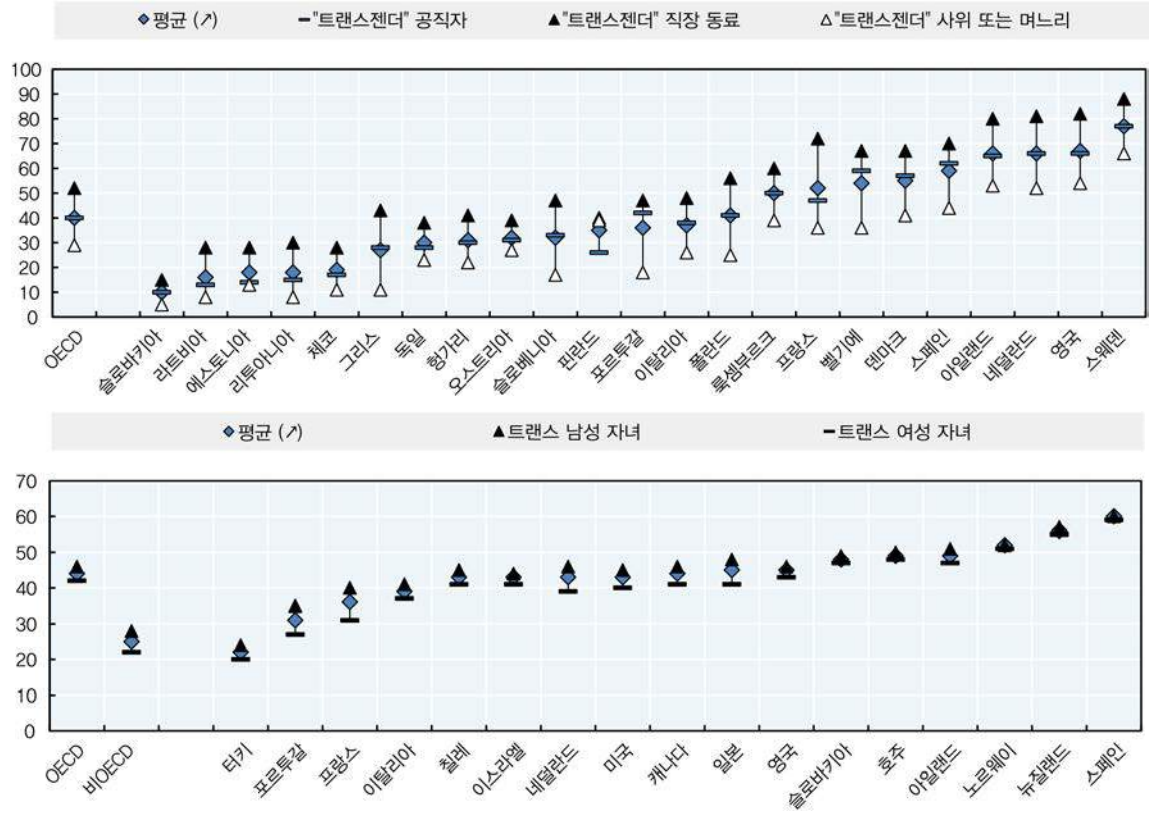
응답자는 "예", "아니요" 또는 "잘 모름"으로 대답할 수 있다.

차별에 관한 특별 유로바로미터는 OECD 유럽 23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한 반면, 2016년 ILGA의 조사 대상은 OECD 17개국에 불과하다. 두 조사 모두에서 국가 표본에는 평균 1,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트랜스젠더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유럽 국가 중에서, 응답자의 평균 40%만이 최고위직의 선출직 공직자, 직장 동료, 또는 사위/며느리가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라고 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그림 1.8, 패널 A). 2016년 ILGA 조사에 포함된 OECD 17개국 응답자의 절반 미만(44%)이 트랜스젠더 자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서 명확한 성별 상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트랜스젠더 자녀는 트랜스 남성인 경우보다 트랜스 여성인 경우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1.8, 패널 B).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용은 다른 국가보다 OECD 국가에서 여전히 더 높다. 2016년 ILGA 조사에 포함된 비OECD 37개국 중 트랜스젠더 자녀를 받아들인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그림 1.8.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안함이 낮게 나타난다**

패널 A: OECD 국가에서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안함(차별에 관한 2015 특별 유로바로미터를 기반으로 함)



주: 패널 A의 그림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7", "8", "9" 또는 "10"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보여준다. i) [응답자의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가 최고위직의 선출직 공직자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트랜스젠더" 공직자에 대한 편안함) ii)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트랜스젠더" 직장 동료에 대한 편안함) iii)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트랜스젠더" 사위/며느리에 대한 편안함) 패널 B의 그림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보여준다. i) 당신의 딸이 항상 남자로 옷을 입거나 꾸민다면, 그것에 대해 용인하겠습니까? (트랜스 남성 자녀에 대한 수용) ii) 당신의 아들이 항상 여자로 옷을 입거나 꾸민다면, 그것에 대해 용인하겠습니까? (트랜스 여성 자녀에 대한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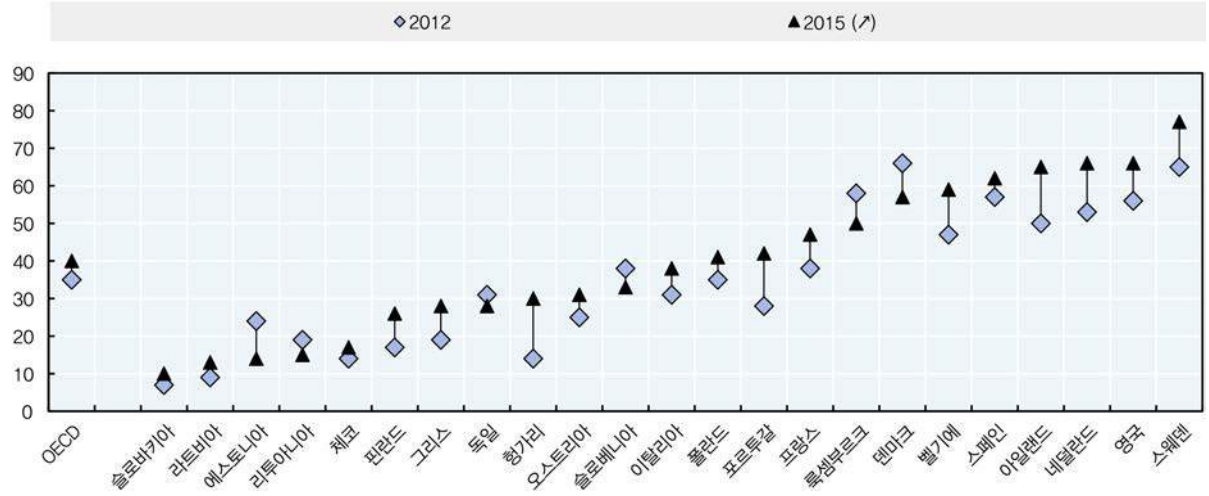
출처: 2015 Special Eurobarometer on Discrimination for Panel A and 2016 ILGA survey for Panel B.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097

차별에 관한 특별 유로바로미터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용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1.9).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2년 35%에서 2015년 40%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적 변화를 감추고 있다. 특히 OECD 유럽 23개국 중 6개국에서는 최고위직의 선출직 공직자가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국은 에스토니아(-10%), 덴마크(-9%), 독일(-3%), 리투아니아(-4%), 룩셈부르크(-8%) 및 슬로베니아(-5%)를 포함한다.

그림 1.9. **대부분의 국가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안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진다**

차별에 관한 2012년과 2015년 특별 유로바로미터를 기반으로 OECD 국가에서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안함의 변화



주: 이 그림은 2012년과 2015년 조사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7", "8", "9" 또는 "10"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가 최고위직의 선출직 공직자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하시오."

출처: 2012 and 2015 Special Eurobarometer on Discriminatio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116

동성애 혐오증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와 음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나이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여성일 경우에 트랜스젠더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특별 유로 바로미터에 따르면, 여성의 56%는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자가 최고위 선출직을 맡는 것에 대해 편안함이나 무관심을 보이는 반면 남성은 이 비율이 48%에 불과했다. 또한 15~24세 중 64%가 이에 대해 편안함이나 무관심을 보이는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5%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20세 이상에 교육을 마친 사람의 59%는 이에 대해 편안하거나 무관심할 것이며, 15세 이하에 교육을 마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44%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 또는 사위/며느리가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자라고 했을 때 편안함을 어느 정도 느낄지에 관한 질문에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된다. 유사한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려면 Norton & Herek (2013[15]) 및 Flores (2015[16]) 참조.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용과 동성애에 대한 수용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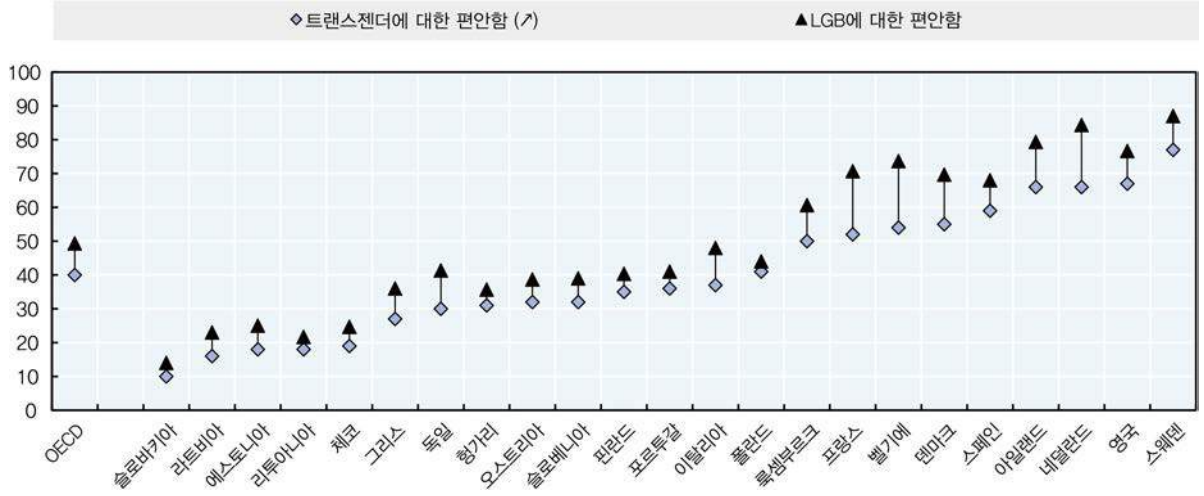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용과 동성애에 대한 수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이 본질주의적 관점을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는지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서 본질주의적 관점이란 사람들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성 정체성(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며 이러한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고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사이의 경계는 특히 애매 모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트랜스젠더가 자기 자신을 LGB로 정체화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Downing and Przedworski, 2018[17]).

이러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불편함은 LGB에 대한 불편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49%가 LGB에 대한 편안함을 보고한 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안함을 보고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그림 1.10).

그림 1.10.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안함은 LGB에 대한 편안함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차별에 관한 2015년 특별 유로바로미터를 기반으로 OECD 국가에서의 트랜스젠더 및 LGB에 대한 편안함



주: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안함"이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7", "8", "9" 또는 "10"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비율을 말한다. i) [응답자의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가 최고위직의 선출직 공직자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ii)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iii)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LGB에 대한 편안함"이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7", "8", "9" 또는 "10"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비율을 말한다. i) [응답자의 국가]에서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가 최고위직의 선출직 공직자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ii)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iii)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이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어느 정도일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알려주십시오. LGB에 대한 편안함의 측정 기준은 그림 1.6에 제시된 동성애 수용 측정 기준과 다르다.

출처: 2015 Special Eurobarometer on Discriminatio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135

1.2.2. LGBT는 차별받고 있는가?

일반 대중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수용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며, LGBT는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섹션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이성애자 및 시스젠더(cisgender, 트랜스젠더의 반의어)와 비교하여 실제로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증거를 살펴본다. 세 가지 유형은 LGBT가 인식하는 차별,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LGBT와 비LGBT 성인의 노동시장 결과 비교 및 무작위 실험으로 얻은 교훈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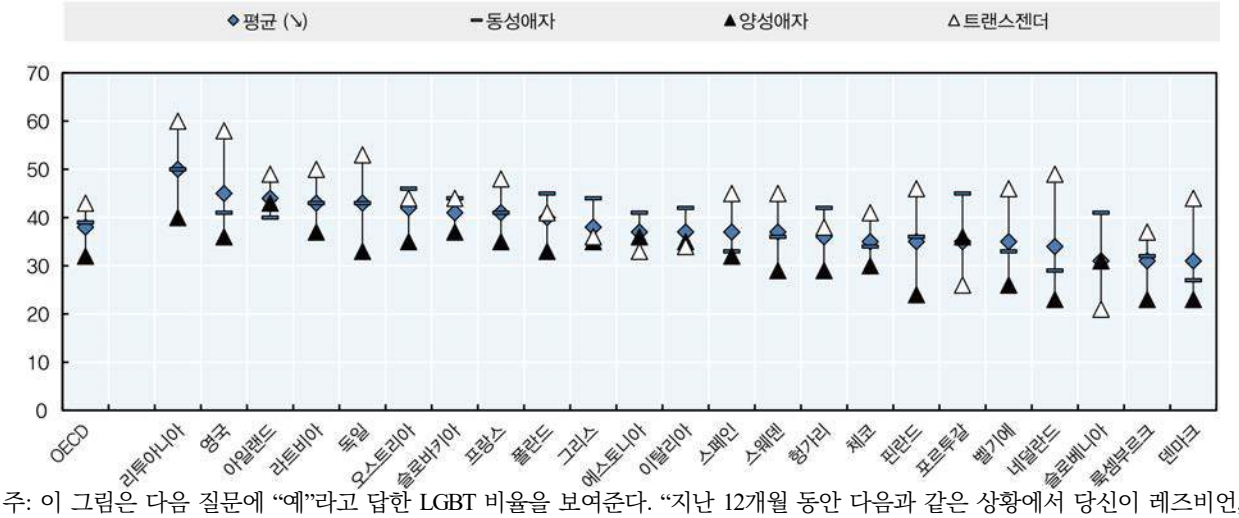
LGBT가 인식하는 차별

지금까지 LGBT가 느끼는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LGBT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가 간 설문조사는 단 한 차례 있었다. 이 조사는 2012년 유럽연합 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에 의해 실시됐다. EU 전역에서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또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93,079명 사이에서 익명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평균적으로, OECD 유럽국가의 LGBT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 및/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비율은 리투아니아의 50%에서 덴마크의 31%에 이른다(그림 1.11). 트랜스젠더보다 LGB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LGB보다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1.11. **LGBT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다**

2012년 OECD 국가에서 LGBT가 인식하는 차별



주: 이 그림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LGBT 비율을 보여준다.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차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i) 구직할 때 ii) 직장에서 iii) 임대나 구매할 주택 또는 아파트를 찾을 때(공공/민간 주택 기관 직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iv) 의료 종사자로부터(예: 접수원, 간호사 또는 의사) v) 사회서비스 직원으로부터 vi) 학교/대학 교직원으로부터(학생 또는 학부모로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 vii) 카페, 레스토랑, 바 또는 나이트클럽에서 viii) 상점에서 ix)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은행 또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x) 스포츠 또는 헬스클럽 (xi) 당신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이나 공식 문서를 제시할 때"

출처: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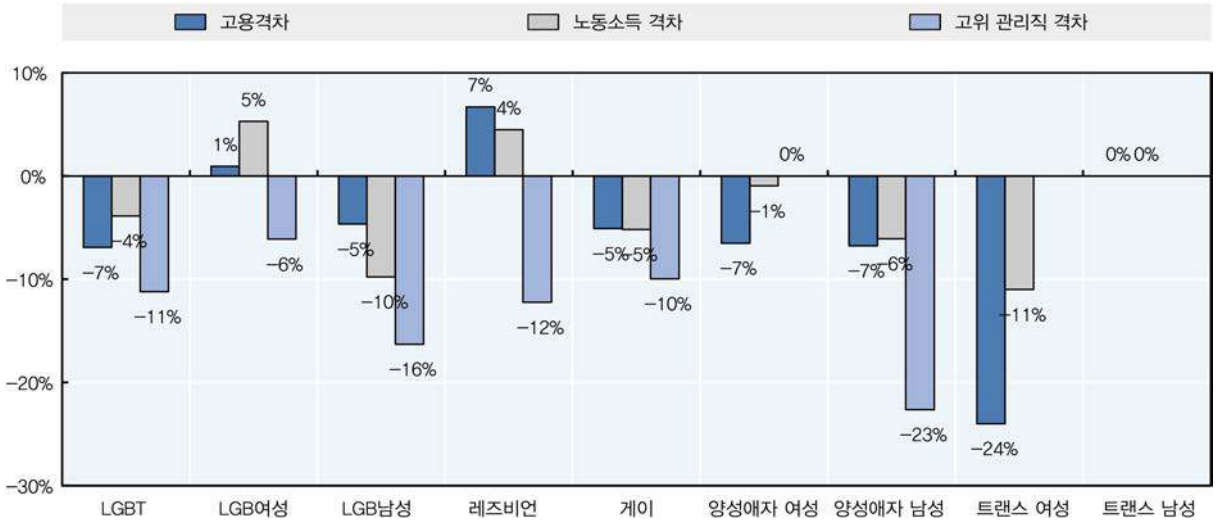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154

표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LGBT 및 비 LGBT의 노동 시장 결과 비교

표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LGBT는 비 LGBT에 비해 고용 상태 및/또는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BT는 비LGBT보다 7% 덜 고용되고 노동소득은 4% 낮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1.12). 또한 LGBT가 고위 관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11% 더 낮은 등 그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당면하는 LGBT의 차별 피해(박스 1.6)는 노동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림 1.12. **LGBT는 고용 상태, 노동소득 및 고위 관리직에 관한 격차를 경험한다**

LGBT 및 비LGBT 사이의 노동 시장 결과 격차



주: 격차가 0이면 LGBT와 비 LGBT 간의 노동 시장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격차는 조정되었는데, 이는 연령, 교육 수준, 인종/민족, 가구 내 자녀의 존재, 근무 시간, 직업 및/또는 업계 및 위치와 같은 광범위한 개인 특성의 영향이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치는 OECD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학술지 또는 토론 논문 시리즈에 발표된 46개의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OECD 11개국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을 포함한다. LGB 여성, 레즈비언 및 양성애자 여성은 이성애자 여성과 비교한다. LGB 남성, 게이 및 양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남성과 비교한다. 고용 격차의 경우, 트랜스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과 비교하며, 트랜스 남성은 시스젠더 남성과 비교한다. 노동소득 격차의 경우, 성전환 여성과 성전환 남성은 성전환하기 전의 본인과 비교한다. "LGBT" 범주는 성소수자의 각 하위 범주에 대해 산출된 격차의 평균을 나타낸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46 research papers (see the StatLink for a list).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173

박스 1.6. 학교에서의 동성애 혐오 및 트랜스젠더 혐오가 만연하고, 이는 LGBT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를 방해한다

학교에서의 동성애 혐오 및 트랜스젠더 혐오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UNESCO, 2016[22]). LGBT 학생의 피해 양상은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나누는 대화를 방해하는 것에서부터(예: 십 대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dyke", "faggot" 또는 "tranny" 등의 혐오 표현 사용) 언어폭력, 신체적 괴롭힘 또는 사이버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13~21세 학생들 사이에서 실시된 2017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전년도 조사에 따르면 LGBT 학생 70.1%가 학교에서 언어폭력(예: 욕 또는 위협)을 경험했으며, 28.9%는 신체적 괴롭힘(예: 밀치기), 12.4%는 폭행(예: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로 상처 입히기), 48.7%가 문자메시지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GLSEN, 2018[23]).

그러나 LGBT 학생들이 보고한 차별 피해는 또래들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LGBT 학생 중 31.3%가 비 LGBT 학생에게 제재되지 않은 공개적 애정 표현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정책과 관행 역시 존재한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42.1%는 선호하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으며 46.5%는 합법적인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되었다(GLSEN, 2018[23]).

설문조사에 기반한 실험 데이터는 학교가 LGBT 학생 및 부모 모두를 차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세르비아에서는 "여성스러운 소년"이 기초 교육에 대하여 받는 차별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

박스 1.6. **학교에서의 동성애 혐오 및 트랜스젠더 혐오가 만연하고, 이는 LGBT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를 방해한다** (계속)

수행되었다. 이 실험에서 게이로 인식되는 "여성스러운 소년"(15%)은 그렇지 않은 소년(5%)에 비해 초등학교 등록 거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최소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여성스러운 소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주저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두 배 더 발생했다. 여성스럽지 않은 소년의 경우, 이러한 주저는 종종 그들의 학업 성취와 징계와 연관되어 있었고, 반면에 여성스러운 소년들에게는 단지 그들의 여성성과 연관되어 있었다(Koehler, Harley and Menzies, 2018[24]). 스페인의 또 다른 실험은 학교가 학생의 사전 등록 기간 동안 동성애자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더 꺼리는지 여부를 조사했다(Diaz-Serrano and Meix-Llop, 2016[25]). 연구의 저자는 3가지 유형의 가상 커플(이성애자 커플 1쌍, 게이 커플 1쌍, 레즈비언 커플 1쌍)을 만들어 이 커플들의 면접과 방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학교에 보냈다. 결과는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상당한 차별, 특히 게이 커플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보여줬다. 레즈비언 커플과 이성애자 커플에 대한 회신율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성애자 커플에 대한 회신율은 게이 커플에 대한 회신율보다 50% 높았다(67% 대 45%).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에 한 연구는 미국의 청소년-성인 건강에 관한 장기 조사(US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 결과,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이끌림 또는 지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Pearson and Wilkinson, 2017[26]).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성소수자가 당면하는 실제 불이익이 하한치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LGBT는 LGBT 인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LGBT만이 해당 조사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한 남성 중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자들은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Barrett & Pollack (2005[19]); Pathela, et al. (2006[20])). 이러한 결과와 일치하게, 전국적 표본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성적 자기 정체화에 관한 질문에 "기타", "잘 모름" 또는 "응답을 거부함"이라고 응답한 개인의 비율은 교육 수준이 낮은 개인들 사이에서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1.12에 보고된 불이익의 평균치는 LGBT 하위집단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불균형을 감추고 있다. LGBT와 비 LGBT 개인 사이의 노동 시장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대조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집단은 동성애자 집단이다. 동성애자 여성은 이성애자 여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 프리미엄 혜택을 받는 반면, 동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간에 유급 및 무급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동성 커플 사이에서 가정 내 역할 분업(household specialisation)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Valfort, 2017[1]).[4]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남성보다 노동 시장에 덜 참여하고, 동성애자 여성은 이성애자 여성보다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양성애자 여성과 양성애자 남성 모두에게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현상은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자 중에서 트랜스 여성에게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과 게이의 고용 및 임금 불이익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적인 조사에 근거한 일련의 증거는 레즈비언과 게이 모두 노동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같은 남성 동성애자는 이성애자 남성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들은 총급여, 승진 전망 및 상사로부터 받는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 직업 또는 정신건강과 같은 중요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Valfort, 2017[1]). 스웨덴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모두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Hammarstedt, Ahmed and Andersson, 2015[21])

실험적 증거

설문조사에 근거한 증거가 LGBT에 대한 불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불이익은 LGBT 차별과 무관한 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스웨덴의 지역에서 레즈비언과 게이의 고용률이 낮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산성이 높은 레즈비언과 게이의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포용이 낮은 지역에서 이사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LGBT 차별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실험이 중요하다. 노동 시장에서 이러한 실험은 주로 "대응 연구"의 형태를 취한다. 이 연구들은 실제 구인 광고에 대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외에는 동일한 가상 구직자들의 이력서와 지원서를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가 이러한 가공의 구직자들을 취업 면접에 초대하는 비율의 차이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의 증거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OECD 국가에서 LGBT 구직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14가지의 대응 연구가 수행되어 학술지 또는 토론 논문 시리즈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10 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을 대상으로 주로 지난 10년 동안 수행되었다. 이 14가지 연구 중 13가지는 동성애자 구직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테스트한다. 이 중 트랜스젠더, 특히 트랜스 여성 구직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측정하는 대응 연구는 단 한 가지 뿐이었으며, 양성애자 구직자에 대한 차별을 조사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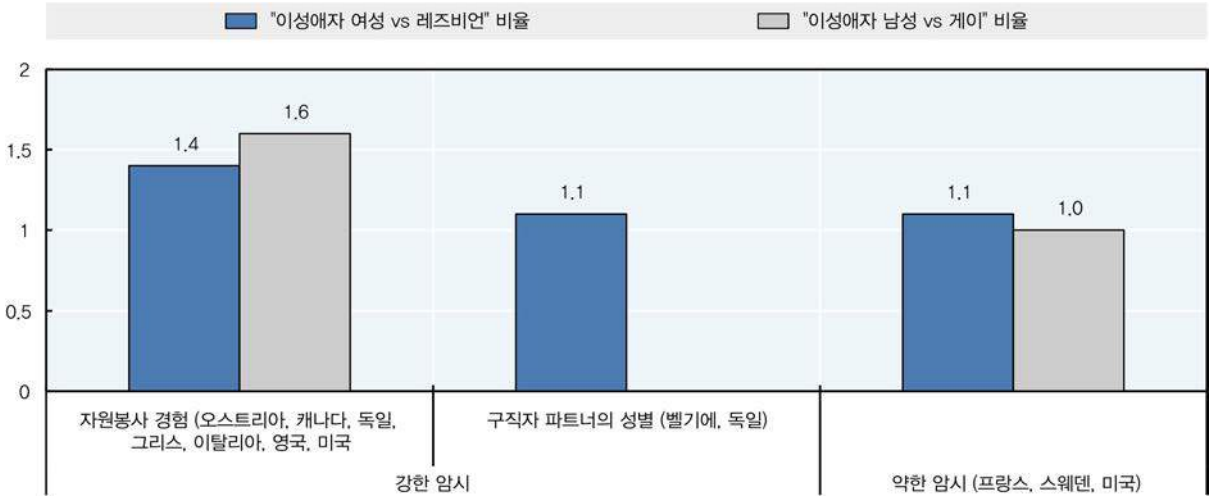
동성애자 구직자에 대한 차별을 실험하는 13가지의 대응 연구는 구직자의 성적 지향을 암시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이용한다. 이 13가지 연구 중 9가지에서 이용된 첫 번째 접근법은 동성애자 구직자가 게이/레즈비언 조직(예: 지역의 Gay People's Alliance, 게이 및 레즈비언 캠퍼스 연합 (gay and lesbian campus association)에서 자원봉사 또는 업무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성애자 구직자의 이력서에는 자선 단체(예: 스웨덴 적십자사, 환경 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또는 업무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라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다. 13가지 연구 중 2가지에서 이용되는 두 번째 접근법은 구직자 파트너(배우자/애인)의 성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력서에 파트너의 이름과 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 (예: 벨기에 또는 독일의 플랑드르 지역)에서 채택된다. 13가지 연구 중 3가지에서 이용되는 세 번째 접근법은 구직자의 파트너 성별을 지원서에 언급하거나, 페이스북 프로필에 나타나는 구직자의 성적 지향을 조작하거나, LGBT에게 제한되지 않는 Gay Games(성소수자를 위한 국제 종합 경기 대회)와 같은 LGBT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는 등 비교적 약한 암시를 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구직자의 성적 지향성이 게이/레즈비언 조직에서의 자원봉사 또는 업무 경험과 같은 이전 경력을 통해 전달될 때 이성애자 구직자에 비교하여 취업 면접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1.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3). 이와 대조적으로, 구직자 파트너의 성별을 통해 가상의 여성 구직자의 가족 전망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상 레즈비언에 대한

고용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용주들이 레즈비언 구직자를 차별하는 경향이 적은 이유는 이성애자 여성에 비해 레즈비언의 출산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Petit (2007[27]), 벨기에의 Baert, De Pauw, & Deschacht (2016[28])의 사례를 통해 가임 연령의 여성이 취업할 때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3. **동성애자 구직자는 이성애 구직자에 비해 취업 면접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1.5배 낮다**

이성애자 구직자와 가상의 동성애자 구직자 간의 취업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비율



주: 비율이 1이면 이성애자 구직자와 동성애자 구직자가 취업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비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13 correspondence studies (see the StatLink for a list).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192

가상의 이성애자 구직자 및 동성애자 구직자가 취업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비율의 차이와 동성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남부 및 중서부 지역(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주)에서 성소수자를 심하게 차별하는 반면, LGBT에게 더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진 서부 및 북동부 지역(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성애자 구직자와 동성애자 구직자를 대등한 입장에서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Tilcsik, 2011[29]). 반대의 가치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두 개의 독일 도시, 즉 뮌헨과 베를린에서 수행된 대응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뮌헨 시민은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베를린 시민은 진보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 뮌헨에서는 동성애자 구직자가 차별 받지만 베를린에서는 그렇지 않다 (Weichselbaumer, 2014[30]). 또한 노동 시장에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차별은 조사 대상이 된 직업 내 성비에 따라 달라진다. 스웨덴에서는 남성 중심 직업(예: 건설 노동자 또는 기계공)에 지원할 때 남성 동성애자가 차별 받는 반면, 여성 동성애자에게는 이런 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성 동성애자는 여성 중심 직업(예: 유치원 교사 또는 간호사)에 지원할 때 차별을 받지만, 남성 동성애자는 그렇지 않다(Ahmed, Andersson and Hammarstedt, 2013[31]). 영국에서는 구인 광고에서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성격적 특성이 강조되는 경우, 즉 이상적인 구직자는 "야심 있음", "자신감 있음", "리더 성향을 가짐" 등으로 묘사될 때, 남성 동성애자가 취업 면접에 초대될 가능성은 적다. 거꾸로 말하면, 구인 광고에서 여성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성격적 특성이 강조될 때, 즉 이상적인 구직자는 "상냥함", "발랄함",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 등

으로 묘사되는 경우에, 여성 동성애자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적다(Drydakis, 2015[32]).

일부 대응 연구는 고용 차별 외에도 임금 차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아테네에서 이러한 임금 불이익은 주로 레즈비언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이성애자 여성보다 6% 낮은 월급을 제시받았다 - (Drydakis, 2009[33]) 및 (Drydakis, 2011[34]).[5]

오직 한 개의 대응 연구만이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고용 차별에 대해 조사하였다(Bardales, 2013[35]). 이 연구는 텍사스에서 가상의 트랜스 여성 구직자와 가상의 시스젠더 여성 구직자가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지원한 다음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비율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스젠더 여성이 트랜스 여성보다 면접 연락을 받는 비율이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랜스 여성에 대한 강한 차별을 보여줬다. 이는 2008년 맨해튼의 소매업 분야에서 실시된 소규모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용주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을 때, 시스젠더 구직자에 대한 취업 제안율은 50%,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생물학적 성에 불응하는 트랜스젠더 구직자에 대한 취업 제안율은 8.3%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취업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시스젠더 지원자에 비해 6배 적게 나타났다(Make the Road New York, 2010[36]).

전반적으로, 대응 연구는 LGBT에 대한 상당한 차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실험적 증거에서는 노동 시장 밖에서도 LGBT에 대한 많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스 1.7). 이에 대해 노동 시장에서 "커밍아웃"을 한 LGBT 일부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고된 실험 결과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업무 환경에서 비 이성애자 또는 비 시스젠더로 인식되는 LGBT에게도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박스 1.7. **노동 시장 밖에 있는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차별의 실험적 증거**

다양한 현장 실험에서 노동 시장 밖에 있는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커다란 차별이 드러났다. 대응 연구에 의하면, 주택 임대 시장에서 동성애 커플은 이성애 커플에 비해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보여주겠다는 응답을 적게 받으며, 특히 게이 커플의 경우 집을 보여주겠다는 응답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Ahmed, Andersson, & Hammarstedt (2008[38]) 및 Ahmed & Hammarstedt (2009[39]), 캐나다의 Lauster & Easterbrook (2011[40]),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2013[41]), 세르비아의 Koehler, Harley, & Menzies (2018[24])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에서는 동성애 커플의 거의 5쌍 중 1쌍(18%)이 임대인에 의해 아파트 임대 거부를 당한 반면, 이성애 커플은 단 한 쌍도 거부당하지 않았다. 또한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강한 불균형을 숨기고 있다. 게이 커플 29%가 거부를 당한 반면, 레즈비언 커플은 8%만이 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차별 수준이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은 임대인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 세입자보다 여성 세입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Ahmed, Andersson and Hammarstedt, 2008[38]). 이러한 점에서, 여성 두 명을 세입자로 두는 이점이 레즈비언 커플을 세입자로 두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더 광범위하게 차별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David Jones가 동성 커플 또는 이성 커플로 하여금 침대 1개가 있는 방과 조식 제공이 가능한 호텔에 주말 예약을 위한 편지를 보내도록 했다(Jones, 1996[42]). 그의 결과에 따르면, 동성 커플, 즉 레즈비언 커플과 게이 커플에 비해 이성 커플의 예약 요청은 20% 더 많이 수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Walters와 Curran (1996[43])은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이 미국의 소매점에 들어갈 때 직원이 그들을 환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이성 커플은 동성 커플

박스 1.7. **노동 시장 밖에 있는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차별의 실험적 증거** (계속)

(레즈비언 커플, 게이 커플 모두)보다 환영받는 데 시간이 훨씬 짧게 걸렸으며, 심지어 동성 커플은 종종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거부당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배우들에게 동성애에 찬성하는 구호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하거나 구호가 없는 티셔츠를 입게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이 배우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잔돈을 부탁했다. 그 결과, 외관상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도움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Valfort, 2017[1]).

성소수자들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이 발견은 소위 "잘못 걸린 전화 기법(wrong number technique)"을 적용한 실험에서 비롯된다. 이 접근법에서, 피험자는 명백하게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어, 발신자로부터 실제 수신자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실험은 일반적으로 이성애 관계일 경우에 남성 발신자와 그가 연락을 취하려는 여자친구를 포함하고, 동성애 관계일 경우에 남자친구를 포함한다. 발신자는 자신의 차가 고장 났고 공중전화에서 잔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며, 피험자에게 자신의 파트너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한다. 그 결과, 이성애자로 지각된 사람이 동성애자로 지각된 사람보다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Valfort, 2017[1]).

다른 실험에서는 소위 "잃어버린 편지 기법(lost-letter technique)"을 사용한다. 이는 우편 발송되지 않은 다수의 편지를 도시의 거리에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편지는 봉투에 동봉되어 있고 주소가 쓰여 있으며 우표가 붙어 있지만, 아직 발송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이 편지 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편지를 부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파기하는 선택을 하게된다. 편지에 기관명을 다양하게 써서 그러한 "잃어버린 편지"를 충분한 양만큼 배포함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한 편지의 회수율을 얻을 수 있다. 이 기법의 초점은 잃어버린 편지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이 아니라 통제 집단 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 특정 기관에 반응하는 속도에 있다. 잃어버린 편지 기법은 일반적으로 LGBT 관련 기관에 대한 편지의 회수율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Valfort, 2017[1]).

증거에 따르면 동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하는 개인은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외부 관찰자에게 동성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Rule and Ambady, 2008[37]). 이와 유사하게,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은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다. EU에서는 트랜스젠더 3분의 2 가까이가 신체적 외모와 의복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로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유럽연합기본권청, 2014[18]). 게다가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그의 이름은 성별 표기를 변경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종종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갈등은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신분증명서 및/또는 졸업장을 요청하는 첫 번째 취업 면접에서 일반적으로 시작된다.

1.2.3. LGBT의 웰빙

LGBT가 직면한 심한 차별로 인해 그들의 웰빙 수준이 위협받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낙인이 정신건강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명한다. 그런 다음 LGBT 및 비 LGBT 개인의 건강 결과 차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사이에서 심리적 웰빙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낙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낙인과 정신건강

성소수자는 종종 낙인으로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 LGBT는 이성애와 시스젠더 정체성만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즉 출생 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할 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LGBT는 소위 소수자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이성애자 및 시스젠더가 겪지 않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Meyer, 2003[44]).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 및 자살 기도, 약물 사용 및 남용을 유발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만이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LGBT는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출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이에 따라 공적인 인격과 사적인 인격을 따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는 결국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건강 이상의 원인이 되어 LGBT의 신체 건강까지 해칠 가능성이 있다.

낙인은 여러가지 경로로 LGBT 건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 종사자로부터의 차별, 건강 보험 적용 범위에서의 제외, 위험한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 압박감 등이 있다(박스 1.8).

박스 1.8. **낙인은 소수자 스트레스를 넘어 LGBT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첫째, 의료 종사자 또한 LGBT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Sabin, Riskind, & Nosek(2015[45])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일관되게, LGBT는 의료 종사자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는 설문 조사 1년 전에 의료 서비스를 받은 적 있는 LGBT의 10%가 의료 종사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다(유럽연합 기본권청, 2014[18]).

둘째, LGBT는 의료 보험 격차를 경험한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고용인의 이성 배우자보다 동성 배우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작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지만, 민간 고용주들에게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를 동등한 기준으로 대우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2018년에 이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의 3분의 1 이상이 동성 배우자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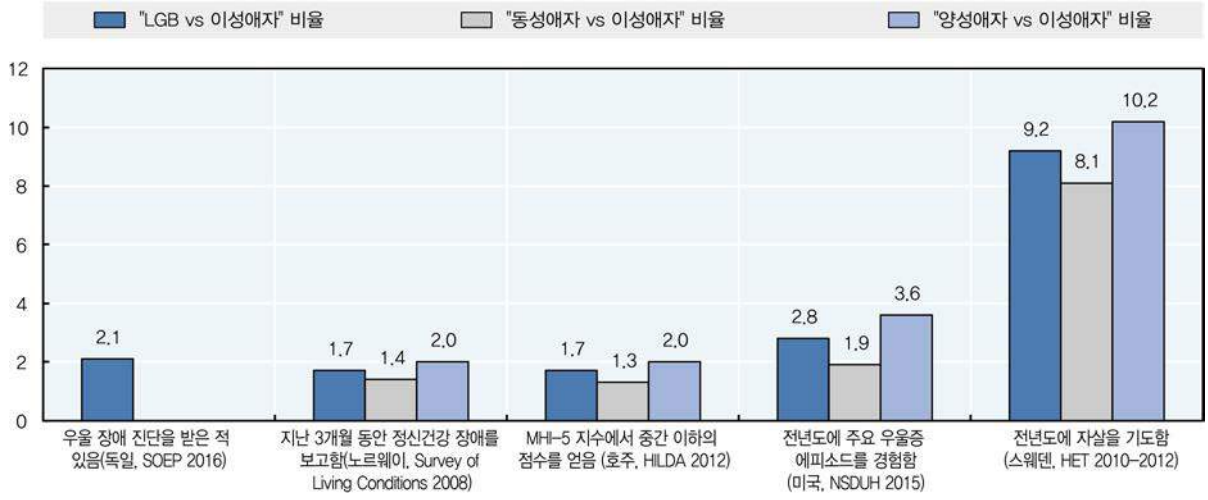
셋째, LGBT 가족 안팎에 따라다니는 낙인은 일부 LGBT가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압박한다. 최근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가 경험한 차별은 성노동자가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ppoliti and Botti, 2017[46]). 이러한 결과와 일관되게, 트랜스젠더는 성매매 종사자 사이에서 과대대표되고 있다(Valfort, 2017[1]).

LGBT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장애는 이성애자보다 LGB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생긴다(그림 1.14).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비LGB에 비해 LGB 응답자들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미국의 경우 조사 전년도에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depressive episode)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거의 3배, 스웨덴은 전년도에 자살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광범위한 개인 특성을 통제해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2015년 미국의 국가 약물남용 보건조사(NSDUH)의 결과도 LGB의 약물 사용과 남용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그림 1.15). 예상 할 수 있듯이, LGB는 이성애자보다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미국의 Saxena, et al. (2018[47])). 전체적으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삶의 만족도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낸다(그림 1.16).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 더 좋지 않은 정신건강 결과와 삶의 만족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의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경향, 즉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로부터 드러내지 않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미국의 Pew Research Center (2013[48]), EU의 유럽연합기본권청 (2014[18])).

그림 1.14. **정신건강 장애는 LGB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LGB와 비 LGB 개인 간의 다양한 정신건강 장애 가능성의 비율



주: 비율이 1이면 LGB와 비 LGB 사이의 다양한 정신건강 장애 가능성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은 조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개인 특성의 영향이 상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LGB의 정신건강에 대한 불이익은 이런 특성을 통제하는 연구에서 지속된다.
호주에서 수행된 조사 HILDA의 MHI-5 지수는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 시행 전 4주 동안 불안 및 기분 장애 증상의 빈도를 평가하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SOEP 2016 (Germany), Survey of Living Conditions 2008 (Norway), HILDA 2012 (Australia), NSDUH
2015 (United States) and HET 2010-2012 (Sw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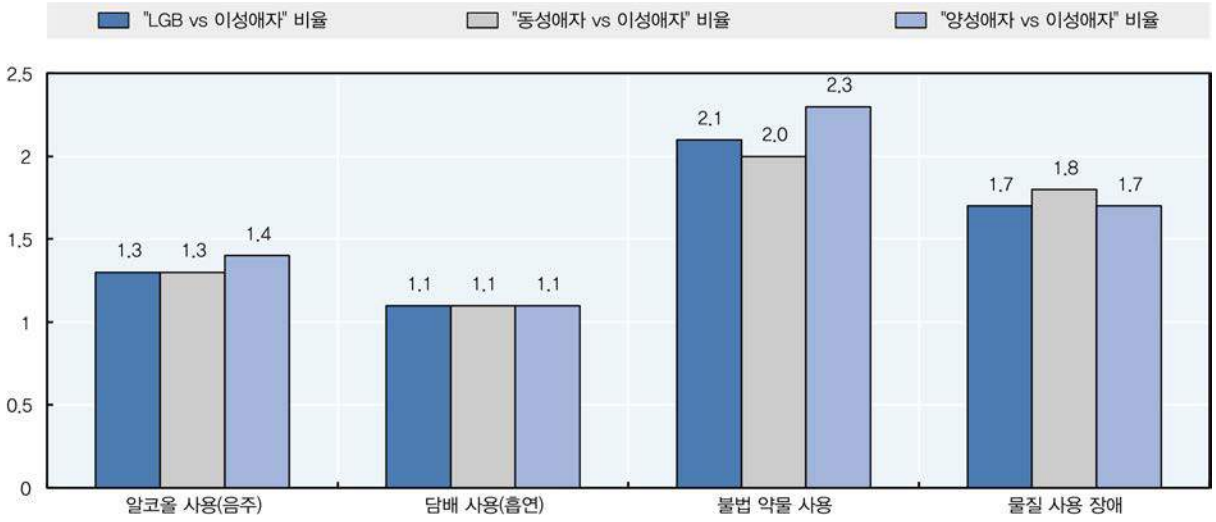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211

대표 표본은 트랜스젠더도 시스젠더보다 정신건강 장애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Downing and Przedworski, 2018[17]).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모든 범주의 트랜스젠더(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생물학적 성에 불응하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다. 평균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에 비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두 배이다: i) 우울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ii) 지난 30일 동안 스트레스, 우울증, 감정 문제를 포함하여 14일 이상 열악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했다. iii) 신체 상태, 정신 상태 또는 정서 상태로 인해 집중, 기억 및 결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시스젠더에 비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성전환자, 즉 호르몬 대체 요법과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도 예외는 아니다. 스웨덴의 행정 데이터에 따르면 성전환자는 비 성전환자보다 정신과 입원 치료에 거의 3배 더 많이 노출된다 (Dhejne et al., 2011[49]). 또한 그들은 자살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 더 높다. 특히 그들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8배나 된다.

그림 1.15. **미국의 LGB는 향정신성 물질 사용 및 남용 가능성이 더 높다**

LGB와 비LGB 간의 향정신성 물질 사용 및 남용 가능성 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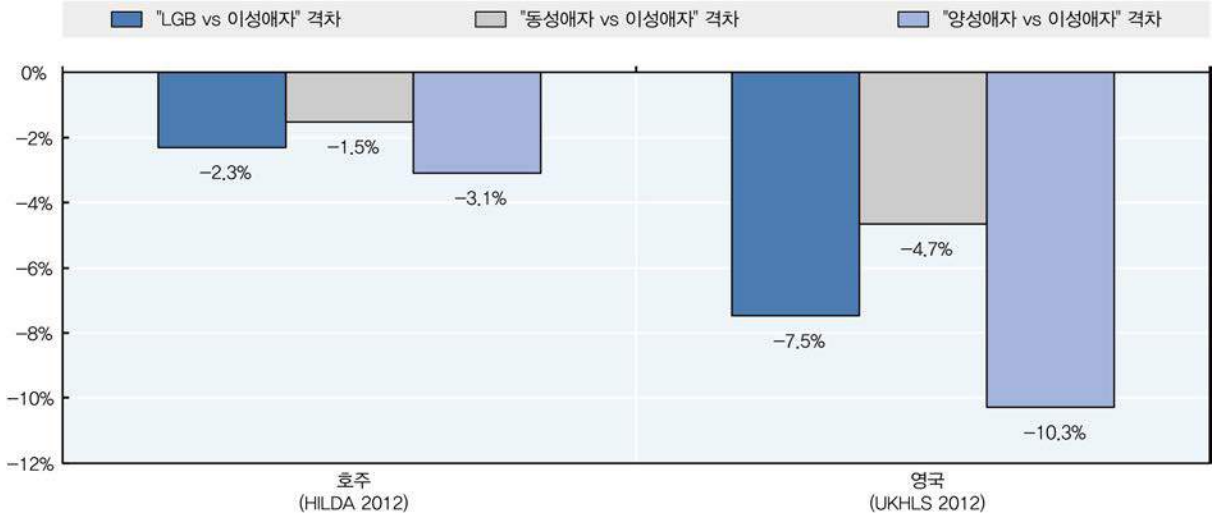
주: 비율이 1이면 LGB와 비 LGB 사이의 향정신성 물질 사용 및 남용 가능성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조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개인 특성의 영향이 상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 사용은 인터뷰 전 달의 흡연을 의미한다. 알코올 사용은 인터뷰 전 달의 알코올 섭취를 의미한다. 불법 약물 사용은 인터뷰 전년도에 마리화나, 크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코카인, 헤로인, 환각제, 흡입제, 메탐페타민과 처방 진통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및 진정제의 오용 등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향정신성 물질 사용 장애란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또는 둘 다)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장애를 나타낸다. 이러한 장애에는 건강 문제, 무능력 및 직장, 학교 또는 가정에서의 주요 임무 이행의 실패를 포함한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NSDUH 2015 (United States).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230

그림 1.16. **LGB는 삶의 만족도가 더 낮다**

LGB와 비LGB간의 삶의 만족도 격차



주: 격차가 0이면 LGB와 비LGB 간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격차는 조정되었는데, 이는 연령, 성별, 민족, 혼인 상태, 최고 학력, 고용 상태 및 종교와 같은 개인 특성의 영향이 상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HILDA 2012 (호주)에서는 응답자에게 0(완전히 불만족)부터 10(완전히 만족)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UKHLS 2012 (영국)에서도 비슷한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Perales (2016[50]) for HILDA 2012 (Australia) and on Booker, Rieger, & Unger (2017[51]) for UKHLS 2012 (United Kingd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249

낙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많은 연구 논문에서 LGBT의 정신건강에 낙인이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여러 연구가 동성 결혼을 순차적으로 채택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전역의 현황을 활용했다(Valfort, 2017[1]). 한 연구는 2004년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주에서 기분 장애, 불안 장애 및 물질 사용 장애에 시달리는 LGB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반면, 이 개정안이 없는 주는 그렇지 않았다. 200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된 후 12개월 동안 보건 서비스 이용에 중점을 둔 보완적 분석 결과, 남성 성소수자(여성은 표본이 없음)가 보건 서비스와 정신건강 진료 방문 및 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비슷한 결과는 미국 밖에서도 발견된다. 최근의 연구는 2017년 말 호주의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 시행한 국민 투표를 활용하고 "아니요"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을 낙인의 척도로 해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니요" 유권자 비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LGB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정신건강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 한다(Perales and Todd, 201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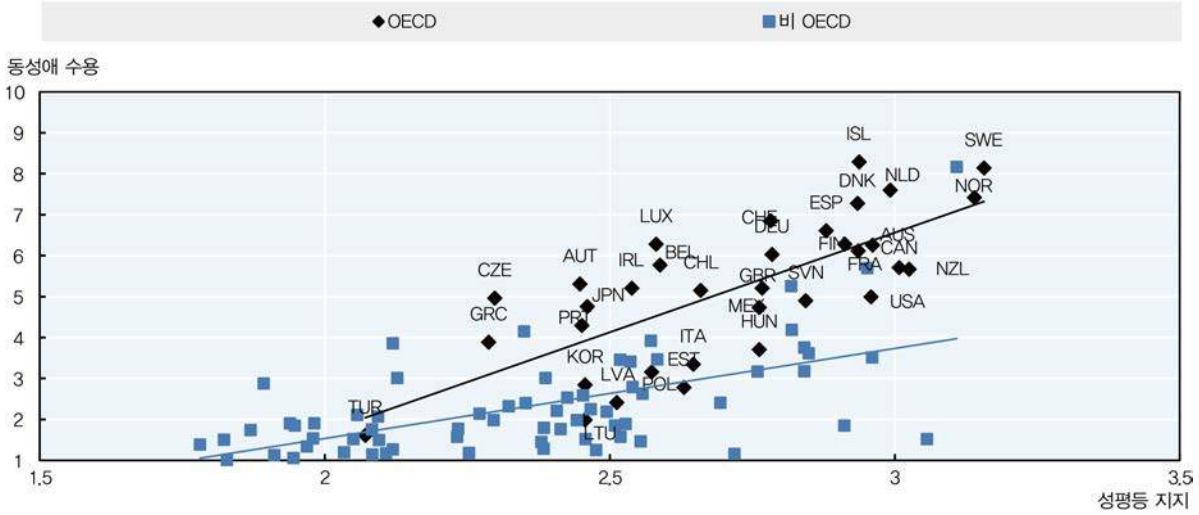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란 요인, 예를 들어 LGBTI 포용적 법률의 채택에 따라 변화하는 주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LGB 건강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이성애자로 구성된 통제 집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접근법은 낙인이 성 소수자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미국에서 LGB와 이성애 청소년 사이의 자살 시도 횟수의 감소는 동성 결혼을 채택하지 않은 주보다 동성 결혼을 채택한 주에서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LGB 포용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뚜렷하지 않은 추세였다. 동성 결혼 정책은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로 자기 정체화하는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를 거의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Raifman et al., 2017[53]).

1.3. LGBT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LGBT가 낙인찍히거나 차별당하거나 공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이유는 최소 3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필수요소이다. LGBT의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은닉할 것을 강요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에 해당한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인한다. 노동시장에서 LGBT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 생산량 및 생산성 감소, 다른 분야에서 더 나은 지출을 할 수 있음에도 사회 및 보건 서비스에 공공 지출이 확대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경로를 통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LGBT 포용 정책을 우선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측면 때문이다. LGBT 포용은 덜 제한적인 성 규범의 형성에 기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 평등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확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성애에 대한 수용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남녀평등을 적극 지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1.17).

그림 1.17. **동성애에 대한 수용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양성평등을 적극 지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성애 수용 및 성 평등 지지, 2001–2014



주: 동성애 수용은 다음 질문에 따라 측정된다. “동성애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 카드의 숫자 중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말해주십시오.”(카드는 1~10점의 척도일 경우, 1은 동성애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고 10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성 평등에 대한 지지는 유럽가치조사(EVS) / 세계가치조사(WVS)에서 실시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평균 답변이다. “직업이 부족한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에 대한 더 많은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1=동의함, 2=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음, 3=반대함),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 지도자로서 더 낫다.”(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반대함, 4=강하게 반대함), “대학교육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 더 중요하다.”(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반대함, 4=강하게 반대함).

“OECD” 그룹에는 성 평등 지지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이스라엘과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이 포함된다.

출처: OECD compilation based on AsiaBarometer, European Values Survey, Latinobarometro and World Values Survey.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268

1.3.1. LGBT 실태와 이들이 받는 불이익을 국가 통계에 가시적으로 표시

차별받는 LGBT가 상당한 소수집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LGBT에 대한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차별 피해에 대해 더 널리 알리는 것은, 특히 개인이 차별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 통제력을 갖게 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미국 경제학자 Joseph Price와 Justin Wolfers는 2002년 NBA (미국의 프로농구리그) 게임 중 인종 차별의 존재를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했다(Price and Wolfers, 2010[54]). 2007년 이 연구는 뉴욕 타임스 첫 페이지에 보도되고, 라디오 및 TV 쇼 등에서 스타 농구 선수가 의견을 표출하는 등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그것이 비판하는 인종 차별을 종식시켰다. 심판의 농구 선수의 인종에 따른 차별이 있었지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차별을 멈춘 것이다. 보충적 증거는 이러한 변화가 극적인 제도적 변화(특정 심판의 해고, 심판이 게임에 배정되는 방식의 변화 등)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오히려 심판이 편향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에 나섰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Pope, Price and Wolfers, 2018[55]). 이와 유사한 결과는 이탈리아 학교 교사 Alesina, Carlana, Ferrara, & Pinotti (2018[56])의 사례를 참조.

인구총조사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국가 노동력, 건강 및 차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는 LGBT가 직면한 불이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미 강조된 바와 같이, 오직 소수의 OECD 국가들(15개국)만이 한 개 이상의 전국 표본조사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했으며,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1개국으로 더 적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그러한 민감 정보를 가장 잘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를 확산하여 다른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21년 인구총조사에 성적 자기 정체화에 관한 질문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 통계청은 인구총조사에 앞서 2017년 시험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는 영국 및 그 밖의 국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박스 1.9).

박스 1.9. **영국의 2017년 인구총조사에 관한 시험 조사에서 얻은 교훈**

영국은 2021년 인구총조사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인구총조사는 처음으로 성적 자기 정체화에 관한 다음의 질문을 포함하는 자기기입식(self-completed) 온라인 질문지가 될 것이다. "다음 중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적으로 답변 가능)" 여기에 다음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성애자", "게이 또는 레즈비언", "양성애자", "기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인구총조사 준비의 일환으로 영국은 2017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 조사는 총 208,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험 집단은 성적 자기 정체화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받았고 통제 집단이 받은 설문지에는 이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험 조사에 이어서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조사에 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평가 조사에서는 시험 조사에 응한 1,839명과 시험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991명을 대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두 가지 조사의 목적은 대중의 수용 가능성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영국 통계청은 위의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i) 성적 자기 정체화 질문 자체에 대한 무응답률이 높은지, ii)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와 비교 가능한 추정치를 산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대중의 수용 가능성

성적 지향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 응답률은 38.6%로 나타났다. 설문에 이 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응답률은 39.0%이었다. 이는 0.4% 차이로, 이전 인구총조사에서 새로운 민감한 질문을 시험할 때 통계청이 설정한 임계값과 일치하는 최대 허용 오차 2%보다 작은 차이이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한 조사 이탈률(조사를 중단한 사람)은 1,500명 중 1명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이 질문이 다른 질문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성적 지향 질문은 민족 관련 질문과 비슷한 온라인 조사 이탈률을 나타냈다. 이 두 가지 모두 종교 및 국가 정체성 질문보다 조사 이탈률이 낮다.

데이터 품질

데이터 품질은 항목 무응답 수준(시험 조사에 응했지만 성적 자기 정체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출처(즉, 연간인구조사)와의 비교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성적 자기 정체화 질문에 대한 항목 무응답 수준은 8.4%로, 이는 선택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에 대해 영국 통계청이 설정한 임계값 10%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연간인구조사에서의 유사 질문에 대한 무응답 수준보다 높은데, 아마도 연간인구조사에서는 시험 조사와는 달리 "잘 모름"이라는 선택지도 주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그 질문에 "응답을 거부함" 선택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항목 무응답 비율이 높은 것에도 불구하고 시험 조사에서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로 정체화한 인구(2.4%)는 2016년 연간인구조사의 추정치(2.0%)와 비슷했다.

박스 1.9. **영국의 2017년 인구총조사에 관한 시험 조사에서 얻은 교훈** (계속)

전반적으로 인구총조사의 시험 조사 결과는 2021년 인구총조사에 성적 자기 정체화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응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수준은 수용 가능한 데이터 품질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시험 조사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는 품질을 개선하고 항목 무응답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일부 대중은 그 정보가 요구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보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설문 안내 사항을 통해 그 질문의 의도를 설명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응답에 비밀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할 계획이다.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58]).

또 다른 전략은 LGBT 인구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 전국의 응답자를 대표하는 표본 크기를 크게 정하고 LGBT의 낙인, 차별 및 공격 피해에 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비 LGBT와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인종 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반LGBT 척결을 담당하는 부처 간 기구(inter-ministerial body)가 2018년 여론 조사 회사 IFOP에 대표 표본 12,13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응답자 994명(8.2%)이 LGBT로 자신을 정체하였고, 대다수(53%)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평생 한 번 이상은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는 LGBT 및 비 LGBT 응답자 간의 고용 및/또는 건강 불균형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성소수자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LGBT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017 년 영국 정부는 LGBT에게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108,000명 이상이 조사를 완료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전국적 조사로 기록되었다. 영국은 LGBT 권리를 증진한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LGBT 응답자들은 여전히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영국에서 LGBT로 사는 것에 대해 편안하다고 답했으며, 트랜스젠더의 편안하다는 응답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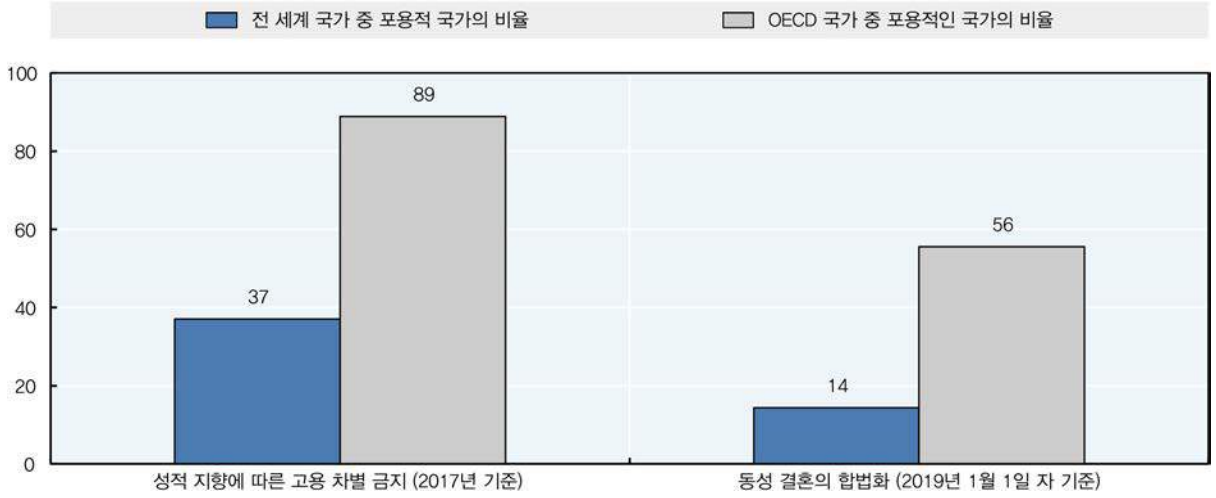
1.3.2.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시행

LGBT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LGBT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LGBT 포용성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법이 그들을 차별과 박해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성소수자가 직면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LGBT 차별을 금지하는 회사에서는 LGBT 직원이 차별을 덜 느끼고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더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BT 직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 높은 직무 몰입도, 직장 내 인간관계 개선,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증진된 건강 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의 노동 소득 불이익은 그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지자체나 기업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Valfort, 2017[1]).

그러나 성소수자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37%)만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ILGA, 2017[59])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장애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는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났다.[7]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의 비율은 더 낮다(14%). OECD 국가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LGBT 포용적 법률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적어도 자국 내 일부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경우는 OECD 국가 중 일부(56%)에 불과하다 (그림 1.18). 게다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법은 완전히 시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정, 직장, 거리, 온라인 등에서 반 LGBT 범죄에 대한 보고, 기록 및 제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18. **성 소수자들이 완전한 법적 인정을 받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와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 중 포용적 국가의 비율 및 OECD국가 중 포용적 국가의 비율



주: 2017년 기준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OECD 32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을 포함한다. 2019년 1월 1일 자 기준 (적어도 자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OECD 20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을 포함한다.
출처: ILGA (2017[59]) and OECD research on national laws.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287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시행은 잠재적인 범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LGBT 포용성을 향상시킨다. 사람들은 사회적 수용의 결과가 법적 변화에 반영된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환에 기꺼이 순응할 것이다(Tankard and Paluck, 2017[60]). 동성 결혼 또는 동성 부부의 입양법은 동성애에 대한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럽의 Hooghe & Meeusen (2013[61]) 및 Takács, Szalma, & Bartus (2016[62]) 참조. 동성애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에 더불어, 법적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정책을 채택한 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유럽의 국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수용이 훨씬 빠르게 높아졌다. 이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는 Kreitzer, Hamilton, & Tolbert (2014[64]) 및 Flores & Barclay (2016[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3.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

차별은 무의식적인 편견에서 비롯된다(Kahneman, 2013[66]). 무의식적 편견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전에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섣불리 판단해 버린다. 또한 무의식적인 편견은 고정관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약점은 과대평가하고 장점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는 그 반대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무의식적 편견은 LGBT를 포함한 소수 집단이 대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데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훈련은 LGBT 포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 훈련은 사람들이 무의식적 편향성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특히 채용 담당자,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 재단 Workplace Pride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LGBT 포용 훈련 자료를 개발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평등과 시민권(Equality and Citizenship)”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채용 및 인사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의무화했다. 영국의 정부평등국은 직장에서 고용주와 직원이 LGBT 차별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한 교육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 무의식적 편견을 조기에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혐오성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편견 제거를 위한 개입도 중요하다. 현재 OECD 유럽국가의 절반이 학생 간 LGBT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사용을 줄이고, LGBT 포용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교사를 교육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박스 1.10).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특정 도시나 지역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편견 제거를 위한 개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이 짧게라도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있다(Broockman and Kalla, 2016[67]). 이 결과는 그 주제에 대한 독특한 무작위 현장 실험에서 비롯되었다. 마이애미 데이즈 카운티 위원회(Miami-Dade County Commission)가 주택, 고용 및 공공 편의시설에 대한 차별로부터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한 후, 2014년 플로리다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험이 수행되었다. LGBT 협회는 이 조례 제정이 시민 투표에 부쳐지고 폐지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이애미 데이즈 유권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방문했다. 그 결과, 이 짧은 방문형 개입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트랜스젠더에게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방문 후 3개월이 지나도 그 효과는 여전히 가시적이었다.

박스 1.10. 유럽 OECD 회원국의 LGBT 포용적 교육 정책

2018년 기준, 27개 유럽 OECD 국가 중 14개국이 학생 간 LGBT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사용을 줄이고, LGBT 포용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사에게 교육하고 있다. 14개국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다.

벨기에

120개 LGBT 협회의 상부 기구인Qavaria는 교원양성대학 및 사범학교에서 강의를 제공하지만 이는 필수 과목은 아니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오르후스의 지방정부는 “Normstormerne”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와 상급 교육 기관(higher institutions of learning)에 규범 비판적인 LGBT 과정을 제공한다.

프랑스

교육부는 “공공 교육의 보완 협회”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가 시민사회단체(예: SOS 호모포비에)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반 LGBT적 편견을 줄이고 학교 교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러한 개입 및 교육은 선택 사항이다.

독일

몇몇 연방 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를란트에서 LSVD-Saar(“독일의 레즈비언 및 게이 연맹”)는 동성애자 청년들이 학생들과 LGBT 포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학교 기반 수업을 제공한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Schule unterm Regenbogen”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LGBT 인식에 관한 교사 연수를 제공한다. 베를린 주 정부는 LGBT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사를 위한 연수 및 교육 자료와 학생을 위한 학교 워크숍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아이슬란드

전국 퀴어 조직인 Samtökin ’78은 레이캬비크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어 광범위한 LGBT 학교 교육을 대가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하프나르피에르뒤르 지방정부와의 새로운 계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광범위한 교사 연수 및 또래 간 학생 교육을 대가로 재정이 지원된다. 75개 중 2개 지방정부에 불과하지만, 이 둘은 가장 큰 지방정부이다.

아일랜드

LGBT 청년을 지원하는 전국적 조직인 BeLonG To Youth Services는 전문 교육 서비스 기관에 비의무적 교육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국립교육심리서비스(NEPS) 교사를 위한 전문 개발 서비스(professional development service)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탈리아

여러 시민사회단체(Arcigay, Famiglie Arcobaleno, Arcilesbica, Agedo, Rete degli Studenti Medi, Progetto Alice, Scosse, Uaar, Unar)는 학교 캠페인 또는 워크숍을 만드는 활동 등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 협회들은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교과 활동 또는 교과 외 활동을 만들도록 지원받는다.

룩셈부르크

시민사회단체와 Institut de Formation de l'Education Nationale (IFEN)은 학교에서 LGBT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사회교육적 교직원 연수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시민사회단체(예: COC 네덜란드 또는 EduDivers)는 LBGT 인식에 관한 교사 연수에 적극적이다. 이 연수는 선택적이다.

박스 1.10. **유럽 OECD 회원국의 LGBT 포용적 교육 정책** (계속)

노르웨이

현재의 행동계획 안전, 다양성, 개방성(Safety, diversity, openness (2016))은 LGBT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서의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 심리적 학교 환경에 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LGBT 청소년 NGO인 Rede Ex Aequo는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와 포스터 및 엽서를 통한 인식 제고 캠페인 등 구체적인 1년 프로젝트도 받았다. 2017년 ILGA Portugal은 공공 자금의 지원으로 지방정부, 기타 NGO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제휴와 함께 학교 환경에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는 2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웨덴

모든 교사는 기본 교육과학 60학점을 달성해야 한다. 이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특히 국가교육청은 LGBT 학생을 포용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교육을 제공한다. RFSL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워크숍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교사에게 역량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스위스

제네바 교육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제네바의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 양성애 혐오 및 트랜스젠더 혐오를 예방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영국

일부 대학이나 학교는 종종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교사 연수를 제공한다. 영국의 Stonewall은 대학에 연수를 제공한다. LGBT Youth Scotland는 스코틀랜드의 교원양성대학 8개 중 6곳과 협력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강의, 워크숍, 세미나를 거치며 LGBT 포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기관 대부분의 연수는 의무적이지 않지만, 여기에 매년 약 1,500명의 연수생이 참여한다. 이는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출처: IGLYO (2018[68]).

주

1. 헝가리에서는 2012 년부터 헌법상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의회가 2014년 6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뉴욕 타임스에 유출된 메모 초안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생식기에 따라 전적으로 그리고 불변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법적 정의 조항 제정을 제안한다.
2. 덴마크에서 2017년 시작된 Project SEXUS의 추정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 동성애에 대한 수용이 감소한 OECD 국가는 체코, 그리스 및 이탈리아 3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패턴은 통계상의 인위적인 결과일 수 있다. 3 개국은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단 하나의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반면,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평균 두 개 이상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2001-2004년 기간의 추정치는 훨씬 더 낮은 평균 관측치 수를 기반으로 한다(다른 OECD국가의 N=3,044와 대조적으로 체코, 그리스 및 이탈리아의 N=1,444).
4.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간 자녀 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어도 이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5. 이러한 대응 연구는 가상의 구직자가 채용 담당자의 면접 초대 전화를 받았을 때 채용 담당자에게 월급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통해 임금 차별을 조사한다. 이 실험 설정은 면접 전에 채용 담당자가 제시하는 임금 차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만, 채용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6. www.kff.org의 “Access to employer-sponsored health coverage for same-sex spouses: 2018 update” 참조.
7. www.worldpolicycenter.org/ 참조.

참고문헌

Ahmed, A., L. Andersson and M. Hammarstedt (2013), “Are Gay Men and Lesbians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Hiring Proces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9/3, pp. 565-585, http://dx.doi.org/10.4284/0038- 4038-2011.317.* [31]

Ahmed, A., L. Andersson and M. Hammarstedt (2008), “Are lesbians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rental housing market? Evidence from a correspondence testing experiment”,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Vol. 17/3, pp. 234-238, *http://dx.doi.org/10.1016/j.jhe.2008.06.003.* [38]

Ahmed, A. and M. Hammarstedt (2009), “Det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on the Internet”, *Economica*, Vol. 76/303, pp. 588-597, *http://dx.doi.org/10.1111/j.1468-0335.2008.00692.x.* [39]

Aksoy, C. et al. (2018), *Do Laws Shape Attitudes? Evidence from Same-Sex* Relationship *Recognition Policies in Europe, www.iza.org* (accessed on 6 February 2019). [63]

Alesina, A. et al. (2018), “Revealing Stereotypes: Evidence from Immigrants in Schools”, *http://dx.doi.org/10.3386/w25333.* [56]

Andersen, R. and T. Fetner (2008), “Cohort Differences in Tolerance of Homosexuality: Attitudinal Chang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1981-2000”,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2/2, pp. 311-330, *http://dx.doi.org/10.1093/poq/nfn017.* [10]

Baert, S., A. De Pauw and N. Deschacht (2016), “Do Employer Preferences Contribute to Sticky Floors?”, *ILR* Review, Vol. 69/3, pp. 714-736, *http://dx.doi.org/10.1177/0019793915625213.* [28]

Bajos, N., M. Bozon and N. Beltzer (2008), *Enquete sur la sexualite en France : Pratiques, genre et sante*, La Decouverte, *www.cairn.info/enquete-sur-la-sexualite-en-france--9782707154293.htm%22%22* (accessed on 6 February 2019). [70]

Bardales, N. (2013), *Finding a Job in a Beard and a Dress: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ransgender AntiDiscrimination Laws, www.semanticscholar.org/paper/Finding-a-Job-in-%E2%80%9C-a-Beard-and-a-Dress-%E2%80%9D-%3A-the-of-%E2%88%97-Bardales/b260619b3c78c224663689a6aae11785ed4aedde* (accessed on 5 February 2019). [35]

Barrett, D. and L. Pollack (2005), "Whose Gay Community? Social Class, Sexual Self-Expression, and Gay Community Involve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46/3, pp. 437-456, *http://dx.doi.org/10.1111/j.1533-8525.2005.00021.x*. [19]

Black, D., S. Sanders and L. Taylor (2007), "The Economics of Lesbian and Gay Famil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1/2, pp. 53-70, *http://dx.doi.Org/10.1257/jep.21.2.53*. [12]

Blackless, M. et al. (2000), "How sexually dimorphic are we? Review and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Human Biology*, Vol. 12/2, pp. 151-166, *http://dx.doi.org/10.1002/(SICI)1520-6300(200003/04)12:2<151::AID-AJHB1>3.0.CO;2-F*. [4]

Booker, C., G. Rieger and J. Unger (2017), "Sexual orientation health inequality: Evidence from Understanding Society , the UK Longitudinal Household Study", *Preventive Medicine*, Vol. 101, pp. 126-132, *http://dx.doi.org/10.1016/jypmed.2017.06.010*. [51]

Broockman, D. and J. Kalla (2016), "Durably reducing transphobia: A field experiment on door-to-door canvassing", Science, Vol. 352/6282, pp. 220-224, *http://dx.doi.org/10.1126/science.aad9713*. [67]

Coffman, K., L. Coffman and K. Ericson (2017), "The Size of the LGBT Population and the Magnitude of Antigay Sentiment Are Substantially Underestimated", *Management Science*, Vol. 63/10, pp. 3168-3186, *http://dx.doi.org/10.1287/mnsc.2016.2503*. [5]

D'Ippoliti, C. and F. Botti (2017), "Sex Work among Trans People: Evidence from Southern Italy", Feminist *Economics*, Vol. 23/3, pp. 77-109, *http://dx.doi.org/10.1080/13545701.2016.1177656*. [46]

Diaz-Serrano, L. and E. Meix-Llop (2016), "Do schools discriminate against homosexual parents? Evidence from a randomized correspondence experi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53, pp. 133-142, *http://dx.doi.org/10.1016/j.econedurev.2016.06.001*. [25]

Downing, J. and J. Przedworski (2018), "Health of Transgender Adults in the U.S., 2014-2016",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55/3, pp. 336-344, *http://dx.doi.org/10.1016/jMmepre.2018.04.045*. [17]

Drydakis, N. (2015),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Kingdom's labour market: A field experiment", *Human Relations*, Vol. 68/11, pp. 1769-1796, *http://dx.doi.org/10.1177/0018726715569855*. [32]

Drydakis, N. (2011), "Women's Sexual Orienta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in Greece", *Feminist* Economics, Vol. 17/1, pp. 89-117, *http://dx.doi.org/10.1080/13545701.2010.541858*. [34]

Drydakis, N. (2009),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Labour Economics*, Vol. 16/4, pp. 364-372, *http://dx.doi.org/10.1016/j.labeco.2008.12.003*. [33]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4), *EU LGBT survey - European Unio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survey - Main results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4/eu-lgbt-survey-european-union-lesbian-gay-bisexual-and-transgender-survey-main* (accessed on 5 February 2019). [18]

Flores, A. (2015),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rights: Perceived knowledge and secondary interpersonal contact",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Vol. 3/3, pp. 398-416, *http://dx.doi.org/10.1080/21565503.2015.1050414*. [16]

Flores, A. and S. Barclay (2016), "Backlash, Consensus, Legitimacy, or Polariz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9/1, pp. 43-56, *http://dx.doi.org/10.1177/1065912915621175*. [65]

GLSEN (2018), *2017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www.glsen.org/article/2017-national-school-climate-survey-1* (accessed on 5 February 2019). [23]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8), *National LGBT Survey, 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national-lgbt-survey* (accessed on 6 February 2019). [57]

Greaves, L. et al. (2017), "The Diversity and Prevalence of Sexual Orientation Self-Labels in a New Zealand National Samp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46/5, pp. 1325-1336, *http://dx.doi.org/10.1007/s10508-016-0857-5*. [72]

Gulloy, E. and T. Normann (2010), *Sexual identity and living conditions. Evaluation of the relevance of living conditions and data* collection, Statistics Norway, *www.ssb.no/a/english/publikasjoner/pdf/rapp_201038_en/rapp_201038_en.pdf* (accessed on 6 February 2019). [73]

Hammarstedt, M., A. Ahmed and L. Andersson (2015), "Sexual Prejudice and Labor Market Outcomes for Gays and Lesbians: Evidence from Sweden", *Feminist Economics*, Vol. 21/1, pp. 90-109, *http://dx.doi.org/10.1080/13545701.2014.937727*. [21]

Hooghe, M. and C. Meeusen (2013), "Is Same-Sex Marriage Legislation Related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Vol. 10/4, pp. 258-268, *http://dx.doi.org/10.1007/ s13178-013-0125-6*. [61]

IGLYO (2018), *Inclusive Education Report, www.education-index.org/wp-content/uploads/2018/01/LGBTQI-Inclusive-Education-Report-Preview.pdf* (accessed on 6 February 2019). [68]

ILGA (2017), *State-Sponsored Homophobia, http://ilga.orgorcontactinfo@ilga.org* (accessed on 6 February 2019). [59]

Jones, D. (1996),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in Hotel Reservation Policies",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31/1-2, pp. 153-159, *http://dx.doi.org/10.1300/j082v31n01_09*. [42]

Jones, T et al. (2016), *Intersex: Stories and Statistics from Australia*, Open Book Publishers, *http://dx.doi.org/ 10.11647/obp.0089*. [2]

Kahneman, D. (2013), *Thinking, Fast and Slow*, Farrar, Straus and Giroux. [66]

Kite, M. and B. Whitley (1996),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 Persons, Behaviors, and Civil Rights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2/4, pp. 336-353, *http://dx.doi.org/10.1177/0146167296224002*. [8]

Koehler, D., G. Harley and N. Menzies (2018),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n Education and Housing: Evidence from Two Field Experiments in Serbia*, The World Bank, *http://dx.doi.org/10.1596/1813- 9450-8504*. [24]

Kreitzer, R., A. Hamilton and C. Tolbert (2014), "Does Policy Adoption Change Opinions on Minority Rights? The Effects of Legalizing Same-Sex Marriag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7/4, pp. 795-808, *http://dx.doi.org/10.1177/1065912914540483*. [64]

Kroh, M. et al. (2017), *Income, Social Support Networks, Life Satisfaction: Lesbians, Gays, and Bisexuals in Germany, www.diw.de/sixcms/detail.php?id=diw_01.c.592846.de* (accessed on 5 February 2019). [14]

Lauster, N. and A. Easterbrook (2011), "No Room for New Families? A Field Experiment Measuring Rental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and Single Parents", Social *Problems*, Vol. 58/3, pp. 389-409, *http://dx.doi.org/10.1525/sp.2011.58.3.389*. [40]

Layte, R. et al. (2006), *The Irish Study ofSexual Health and Relationships, www.ucd.ie/issda/static/documentation/esri/isshr-report.pdf* (accessed on 6 February 2019). [71]

Make the Road New York (2010), *Transgender Need Not Apply: A Report on Gender Identity Job Discrimination, www.maketheroadny.org/pix_reports/TransNeedNotApplyReport_05.10.pdf* (accessed on 5 February 2019). [36]

McCabe, S. et al. (2017),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and Tobacco Use Disparities in the United States", Nicotine *& Tobacco Research, http://dx.doi.org/10.1093/ntr/ntx283*. [77]

Meyer, I.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9/5, pp. 674-697, http://dx.doi.org/10.1037/0033-2909.129 .5.674*. [44]

Norton, A. and G. Herek (2013),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People: Findings from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of U.S. Adults", *Sex Roles,* Vol. 68/11-12, pp. 738-753, *http://dx.doi.org/ 10.1007/s11199-011-0110-6*. [1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 *2017 Census Test Report, www.ons.gov.uk/census/censustransformationprogramme/2017censustest/2017censustestreport*(accessed on 6 February 2019). [58]

Ohlander, J., J. Batalova and J. Treas (2005), "Explaining educational influences on attitudes toward homosexual rel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4/4, pp. 781-799, *http://dx.doi.org/10.1016/j.ssresearch.2004.12.004*. [11]

Pathela, P. et al. (2006), "Discordance between Sexual Behavior and Self-Reported Sexual Identity: A Population-Based Survey of New York City Me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 145/6, pp. 416-425, *http://dx.doi.org/10.7326/0003-4819-145-6-200609190-00005*. [20]

Patterson, J. and J. Jabson (2018), "Sexual orientation measurement and chronic disease dispariti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9-2014", *Annals of Epidemiology*, Vol. 28/2, pp. 72-85, *http://dx.doi.org/10.1016/jMnnepidem.2017.12.001*. [76]

Pearson, J. and L. Wilkinson (2017), "Same-Sex Sexuality and Educational Attainment: The Pathway to College",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64/4, pp. 538-576, http://dx.doi.org/10.1080/00918369.2016.1194114. [26]

Perales, F. (2016), "The Costs of Being "Different": Sexual Identity and Subjective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27/2, pp. 827-849, *http://dx.doi.org/10.1007/s11205-015-0974-x.* [50]

Perales, F. and A. Todd (2018), "Structural stigma an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ustralian LGB populations: Exploiting geographic variation in the results of the 2017 same-sex marriage plebiscit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208, pp. 190-199, *http://dx.doi.org/10.1016/j.socscimed.2018.05.015.* [52]

Petit, P. (2007), "The effects of age and family constraints on gender hiring discrimination: A field experiment in the French financial sector", *Labour Economics*, Vol. 14/3, pp. 371-391, *http://dx.doi.org/ 10.1016/j.labeco.2006.01.006.* [27]

Pew Research Center (2013), *A Survey of LGBT Americans, www.pewsocialtrends.org/2013/06/13/a-survey-of-lgbt-americans/* (accessed on 5 February 2019). [48]

Pope, D., J. Price and J. Wolfers (2018), "Awareness Reduces Racial Bias", *Management Science*, Vol. 64/11, pp. 4988-4995, *http://dx.doi.org/10.1287/mnsc.2017.2901.* [55]

Powdthavee, N. and M. Wooden (2015), "Life satisfaction and sexual minorities: Evidence from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116, pp. 107-126, *http://dx.doi.org/10.1016/j.jebo.2015.04.012.* [75]

Price, J. and J. Wolfers (2010), "Racial Discrimination Among NBA Refere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5/4, pp. 1859-1887, *http://dx.doi.org/10.1162/qjec.2010.125A.1859.* [54]

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2014), *Utvecklingen av hälsan och hälsans bestämningsfaktorer bland homo- och bisexuella personer. Resultat frön nationella folkhälsoenkäten Hälsa pa lika villkor., www.bufdir.no/bibliotek/Dokumentside/?docld=BUF00002262* (accessed on 6 February 2019). [74]

Raifman, J. et al. (2017),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State Same-Sex Marriage Policies and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AMA Pediatrics*, Vol. 171/4, pp. 350-356, *http://dx.doi.org/10.1001/jamapediatrics.2016.4529.* [53]

Rault, W. (2016), "Les mobilites sociales et geographiques des gays et des lesbiennes", Sociologie N° 4, vol. 7, pp. 337-360, *https://journals.openedition.org/sociologie/289A#quotation* (accessed on 5 February 2019). [13]

Richters, J. et al. (2014), "Sexual identity, sexual attraction and sexual experience: The Second Australian Study of Health and Relationships", Sexual Health, Vol. 11/5, pp. 451-460, *http://dx.doi.org/ 10.1071/sh1A117.* [69]

Rule, N. and N. Ambady (2008), "Brief exposures: Male sexual orientation is accurately perceived at 50m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4/4, pp. 1100-1105, *http://dx.doi.org/10.1016/ j.jesp.2007.12.001.* [37]

Sabin, J., R. Riskind and B. Nosek (2015), "Health Care Providers'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Lesbian Women and Gay 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5/9, pp. 1831-1841, http:// *dx.doi.org/10.2105/ajph.2015.302631.* [45]

SAMHDA (2016), *Sexual Orientation and Estimates of Adult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Results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www.samhsa.gov/data/report/sexual-orientation-and-estimates-adult-substance-use-and-mental-health-results-2015-national*(accessed on 6 February 2019). [78]

Saxena, A. et al. (2018), "LGB Health Disparities: Examining the Status of Ideal Cardiovascular Health From the 2011-2012 NHANES Survey | Circulation", *Circulation*, Vol. 137/AP001, *www.ahajournals.org/doi/abs/10.1161/circ.137.suppl_1.p001* (accessed on 5 February 2019). [47]

Scott, J. (ed.) (2011), "Long-Term Follow-Up of Transsexual Persons Undergoing Sex Reassignment Surgery: Cohort Study in Sweden", PLoS ONE, Vol. 6/2, p. e16885, *http://dx.doi.org/10.1371/journal.pone.0016885*. [49]

Smith, T., J. Son and J. Kim (2014), *Public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nd Gay Rights across Time and Countries - Williams Institutewilliams Institute*, Williams Institute,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research/international/public-attitudes-nov-2014/* (accessed on 5 February 2019). [9]

Takacs, J., I. Szalma and T. Bartus (2016), "Social Attitudes Toward Adoption by Same-Sex Couples in Europ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45/7, pp. 1787-1798, *http://dx.doi.org/10.1007/s10508-016-0691-9*. [62]

Tankard, M. and E. Paluck (2017), "The Effect of a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Gay Marriage on Social Norms and Personal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Vol. 28/9, pp. 1334-1344, *http://dx.doi.org/10.1177/0956797617709594*. [60]

Tilcsik, A. (2011), "Pride and Prejudice: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Openly Gay Me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7/2, pp. 586-626, *http://dx.doi.org/10.1086/661653*. [29]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3), *An Estimate of Housing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 HUD USER, www.huduser.gov/portal/publications/fairhsg/discrim_samesex.html*(accessed on 5 February 2019). [41]

UNESCO (2016), *Out in the Open: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Violenc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express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4756* (accessed on 5 February 2019). [22]

Valfort, M. (2017), *LGBTI in OECD* Countries: A Review,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 d5d49711-en*. [1]

van Lisdonk, J. (2014), *Living with intersex / DSD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social situation of persons with intersex/DSD*,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www.scp.nl/english/Publications/Publications_by_year/Publications_2014/Living_with_intersex_DSD* (accessed on 5 February 2019). [3]

Walters, A. and M. Curran (1996), "Excuse Me, Sir? May I Help You and Your Boyfriend?",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31/1-2, pp. 135-152, *http://dx.doi.org/10.1300/j082v31n01_08*. [43]

Weichselbaumer, D. (2014), "Testing for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s of Different Marital Status: A Field Experiment",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Vol. 54/1, pp. 131-161, *http://dx.doi.org/10.1111/irel.12079*. [30]

Williams Institute (2014), *Best Practices for Asking Questions to Identify Transgender and Other Gender Minority Respondents on Population-Based Surveys,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research/census-lgbt-demographics-studies/geniuss-report-sept-2014/* (accessed on 5 February 2019). [7]

Williams Institute (2009), *Best Practices for Asking Questions about Sexual Orientation on Surveys,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research/census-lgbt-demographics-studies/best-practices-for-asking-questions-about-sexual-orientation-on-surveys/* (accessed on 5 February 2019). [6]

부록 1.A

OECD 국가의 성적 자기 정체화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데이터 수집

표 1.A.1. **공공 기관의 전국적 표본조사를 통해 성적 자기 정체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OECD 국가 목록**

국가	설문조사명	제공 기관	설문조사 유형	표본 크기	빈도	성적 자기 정체화 정보가 수집된 연도	설문조사 방법	LGB 인구의 추정치
호주	호주 건강및관계연구 (Australian Study of Health and Relationships: ASHR)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UNSW Sydney),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라트로브대학교 (LaTrobe University), 서식스대학교 (University of Sussex)	종단적	N=20000	2001–02년 및 2012–13년	2001–02년 이후	CATI	ASHR 2012–13: 3.3%
	종합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 GSS)	호주 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횡단적	N=15000	2002년 이후 4년마다	2014년 이후	CAPI	GSS 2014: 2.4%
	호주 가계·수입·노동역학조사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	멜버른 연구소 (Melbourne Institute)	종단적	N=17000	2001년 이후 매년	2012년 및 2016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HILDA 2016: 3.4%
캐나다	캐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CCHS)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StatCan)	횡단적	N=65000	2001년과 2007년 사이에 2년마다, 2007년 이후 매년	2003년 이후	CAPI 및 CATI	CCHS 2016: 3.2%
	종합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 GSS)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 StatCan)	횡단적	N=25000	1985년 이후 매년	2004년 이후	CATI	GSS 2016:3.4%
칠레	사회경제수준조사 (Encuesta de Caracterizacion Socioeconomica Nacional: CASEN)	사회개발부 (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	횡단적	N=250000	1990년 이후 2/3년마다	2015년 이후	CAPI	CASEN 2017: 1.9%
덴마크	프로젝트 섹서스 (Project SEXUS)	Statens Serum Institut (역학연구과) 및 Aalborg University (성과학연구센터)	종단적	N=200000	2017년 이후 3~4년마다	2017년 이후	SAQ	LGB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프랑스	Enquete “Contexte de la sexualite”	국립에이즈연구소 (Agence nationale de recherches sur le sida et les hepatites virales: ANRS)	횡단적	N=12364	2006년	2006년	CATI	1.8%

국가	설문조사명	제공 기관	설문조사 유형	표본 크기	빈도	성적 자기 정체화 정보가 수집된 연도	설문조사 방법	LGB 인구의 추정치
독일	사회경제패널 (Socio-Economic Panel: SOEP)	독일경제연구소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IW)	횡단적	N=30000	1984년 이후 매년	2016년 이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SOEP 2016:1.9%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건강및웰빙조사 (Health and Well-Being of Icelanders Survey: HWBIS)	보건국 (Directorate of Health)	종단적	N=10000	2007년 이후 5년마다	2007년 이후	SAQ	HWBIS 2017: 2.8%
아일랜드	성건강및관계연구 (Study of Sexual Health and Relationship: SSHR)	Crisis Pregnancy Agency	횡단적	N=7668	2005년	2005년	CATI	2.0%
이탈리아	성별, 성적 지향 및 민족별 차별에 대한 조사	이탈리아 통계청 (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Istat)	횡단적	N=5863	2011년	2011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1.6%
멕시코	국가차별 조사 (Encuesta Nacional sobre Discriminacion en Mexico: ENADIS)	Wave 2005 및 2010을 위한 차별방지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to Prevent Discrimination: CONAPRED), wave 2017을 위한 멕시코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y Geografia: INEGI)	횡단적	N=50000과 N=150000 사이	2005, 2010년 및 2017년	2010년 이후	CAPI	ENADIS 2017:1.9%
뉴질랜드	뉴질랜드 태도 및 가치 연구 (New Zealand Attitudes and Values Study: NZAVS)	오클랜드대학교 (University of Auckland), 빅토리아대학교(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캔터베리대학교 (University of Canterbury), 오타고대학교 (University of Otago) 및 매시대학교 (Massey University) 등의 뉴질랜드 대학교	종단적	N=20000	2009년 이후 매년	2014년 이후	SAQ	NZAVS 2014:3.5%
	뉴질랜드 건강실태조사 (New Zealand Health Survey: NZHS)	뉴질랜드 보건부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횡단적	N=10000	1992년과 2011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2011 년 이후 매년	2014년 이후	SAQ	NZHS 2014: 3.0%

국가	설문조사명	제공 기관	설문조사 유형	표본 크기	빈도	성적 자기 정체화 정보가 수집된 연도	설문조사 방법	LGB 인구의 추정치
	종합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 GSS)	뉴질랜드 통계청 (Statistics New Zealand: Stats NZ)	횡단적	N=8000	2008년 이후 2년마다	2018년 이후	CAPI	LGB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노르웨이	생활환경조사 (Survey of Living Conditions)	노르웨이 통계청(Statistics Norway)	횡단적	N=6457	2005년 이후 2/3년마다	2008년	CAPI 및 CATI	1.2%
스웨덴	국민건강조사 (Health on equal terms: HET)	공중보건기관(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의 협조)	횡단적	N=20000과 N=40 000 사이	2004년 이후 매년, 2016년 이후 2년마다	2005년 이후 (2007년 및 2008년 제외)	SAQ	HET 2005–2012:1.6%
영국	연간인구조사 (Annual Population Survey: APS)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횡단적	N=320000	2004년 이후 매년	2012년 이후 매년	CAPI 또는 CATI	APS 2016: 2.0%
	영국가구종단연구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UKHLS)	Understanding society	종단적	N=50000	2009년 이후 매년	2012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UKHLS 2012: 2.6%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횡단적	N=5000	1988년과 1999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1999년 이후 매년	1988년 이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NHANES 2009–14: 4.6%
	국립알코올및관련문제역학조사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NESARC)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횡단적	N=40000	정기적: 2001–02년, 2004–05년 및 2012–13년	2001–02년 이후	CAPI	NESARC 2012–13: 2.9%
	전국가정현황조사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SFG)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횡단적	N=10000과 N=20000 사이	2006년 이후 매년	2006년 이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NSFG 2011–15: 5.4%
	종합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 GSS)	국가여론조사센터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NORC)	횡단적	N=2000과 N=3000 사이	1972년 이후 매년 (1979,1981,1992 년 제외), 1994년 이후 2년마다	2008년 이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GSS 2008–16: 4.2%

국가	설문조사명	제공 기관	설문조사 유형	표본 크기	빈도	성적 자기 정체화 정보가 수집된 연도	설문조사 방법	LGB 인구의 추정치
	친밀한 파트너와 성폭력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횡단적	N=40000	2010년 이후 계속	2010년 이후	CATI	NISVS 2010: 3.0%
	국가성인흡연조사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NATS)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횡단적	N=75000	2009년 이후 정기적으로	2013년	CATI	2.8%
	국민건강면접조사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횡단적	N=87500	1957년 이후 매년	2013년 이후	CAPI	NHIS 2013–14: 2.8%
	담배와 건강 인구영향 평가 (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PATH)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담배제품센터(Center for Tobacco Products: CTP) 및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종단적	N=45971	2013년 이후 매년	2013년 이후	SAQ	LGB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국가 약물남용 보건조사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약물남용·정신보건관리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횡단적	N=70000	1971년 이후 매년	2015년 이후	CAPI 및 SAQ (성적 자기 정체화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SAQ 사용)	NSDUH 2015: 4.3%
	국립범죄피해조사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법무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횡단적	N=160000 (12세 이상)	1972년 이후 매년	2016년 이후	CAPI 및 CATI	LGB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주: 성적 자기 정체화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는 표본은 일반적으로 전체 표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조사 방법으로는 CAPI(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인터뷰),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 및 SAQ(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포함한다.

출처: OECD, based on country responses to the 2018 OECD questionnaire on statistical sources to identify LGBT people, as well as: Richters et al. (2014[69]) for ASHR 2012-2013, contactwith ABS for the Australian GSS 2014, Perales & Todd (2018[52]) for HILDA 2016, contact with StatCan for CCHS 2016 and the Canadian GSS 2016, dataset analysis for CASEN 2017, US GSS 2008-2016 and NATS 2013, contact with Morten Frisch, project leader of Project SEXUS, Bajos, Bozon, & Beltzer (2008[70]) for the 2006 Enquête "Contexte de la sexualité' in France, Kroh, Kühne, Kipp & Richter (2017[14]) for SOEP 2016, contact with Iceland's Directorate of Health for HWBIS 2017, Layte et al. (2006[71]) for SSHR 2005, contact with Istat for the 2011 Survey on discriminations by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ethnic origin, contact with INEGI for ENADIS 2017, Greaves et al. (2017[72]) for NZAVS 2014, contact with the New Zealand's Ministry of Health for NZHS 2014, Gull0y & Normann (2010[73]) for the 2008 Survey of Living Conditions in Norway, 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2014[74]) for HET 2005-2012, contact with ONS for APS 2016, Powdthavee & Wooden (2015[75]) for UKHLS 2012, Patterson & Jabson (2018[76]) for NHANES 2009-2014, McCabe et al. (2017[77]) for NESARC 2012-2013, contact with CDC for NSFG 2011-2015, NISVS 2010 and NHIS 2013-2014, and SAMHDA (2016[78]) for NSDUH 2015.

표 I.A.2. **공공 기관의 전국적 표본조사를 통해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OECD 국가 목록**

국가	설문조사명	제공 기관	설문조사 유형	표본 크기	빈도	성 정체성 정보가 수집된 연도	설문조사 방법	성 정체성을 파악하는 접근법	트랜스젠더 인구 추정치
칠레	사회경제수준조사(Encuesta de Caracterizacion Socioeconomica Nacional: CASEN)	사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	횡단적	N=250000	1990년 이후2/3년마다	2015년 이후	CAPI	2015 년과 2017 년의 "성 정체성" 질문이 각각 다른 2단계 접근법 (2015년에는 선택 가능한 답변으로 "남성" 및 "여성"이 있으며, 2017년에는 "트랜스젠더"도 포함됨)	2015년 2.7%, 2017년 0.1%
덴마크	프로젝트 섹서스(Project SEXUS)	Statens Serum Institut (역학연구과) 및 Aalborg University (성과학연구센터)	종단적	N=200000	2017년 이후 3~4년마다	2017년 이후 3~4년마다	SAQ	3단계 접근법	트랜스젠더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미국	국가성인흡연조사(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NATS)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횡단적	N=75000	2009년 이후 정기적으로	2013년	CATI	2단계 접근법("성 정체성" 질문의 선택 가능한 답변으로 "남성" 및 "여성"이 있음)	0.3%
	담배와 건강 인구영향 평가(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PATH)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담배제품센터 (Center for Tobacco Products: CTP), 및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종단적	N=45971	2013년 이후 매년	2013년 이후	SAQ	1단계 접근법	트랜스젠더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국립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법무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횡단적	N=160000	1972년 이후 매년	2016년 이후	CAPI 및CATI	2단계 접근법("성 정체성" 질문의 선택 가능한 답변으로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및 "이 중 없음"이 있음)	트랜스젠더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주: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는 표본은 일반적으로 전체 표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조사 방법으로는 CAPI(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인터뷰),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 및 SAQ(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포함한다.

출처: OECD, based on country responses to the 2018 OECD questionnaire on statistical sources to identify LGBT people, as well as dataset analysis for CASEN 2015, CASEN 2017 and NATS 2013.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제 2 장

OECD 사회지표 해석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1. 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한눈에 보는 사회 2019는 OECD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흐름을 다루고 그동안의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중 하나는 현재 정책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결과를 평가, 비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표는 사회적 대응을 개관하고 정책 조치가 사회 발전을 심화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눈의 보는 사회 2019는 OECD국가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LGBT)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LGBT에 대한 지표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지표들은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사용되었던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New York] 여기에서는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분류했다.

- "사회적 영역": 일반적 지표를 의미한다. 물론 정책 목표가 항상 사회적 상황을 직접 이해하는데 관련 있는 정보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영역 지표의 예는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등이다.
- "사회적 상태":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한다. 이상적으로는 선별된 지표들이 쉽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국가가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한다" 등이다.
- "사회적 대응":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도 예가 될 수 있으며 NGO와 가족, 범위를 넓히면 시민사회 활동도 그 예가 된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사용된 틀은 지표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자활(self-sufficiency)"
- "형평성(equity)"
- "보건(health status)"
-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련 OECD 간행물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은 사회적 웰빙과 발전에 대해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자 일련의 웰빙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하여 ***How's Life***는 좀 더 광범위한 성과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 지표는 제외하고 있다. 그 외에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는 정책분석과 권고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사회지표의 수집과 발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표를 수집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했다.

- 국가 간 지표 비교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영역별로 최고의 비교 정보를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기 제시된 지표들은 "절대적" 비교성이 있는 지표들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한편, 독자들은 사용된 자료의 성격과 비교성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

-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는 최소 몇 개 국가인가? 이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들만을 포함한다.
-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분류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사회적 지표는 국가 차원에서 연령, 성별, 가족 유형 등 사회적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는데, 즉, 제시된 분류는 해당 지표에 따라 다르며 이미 나와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고려해 결정했다.

제3장부터 8장까지는 주요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지표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OECD에서 간행된다(예: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Health Statistics). 그 외 지표들은 필요할 경우 수집했다. 일부 지표는 기존 지표를 약간 변형하여 만들어졌다.

2.2. 지표의 선정과 설명

2.2.1. 사회적·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OECD는 2018년에 새로운 국가 간 설문 조사인 *Risks That Matter* 조사를 시작했다(제3장 참조). 이 조사는 OECD 21개국에서 이루어지며 18세에서 70세 사이의 22,000명을 대표표본으로 사용한다. OECD 21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미국을 포함한다.

이 조사의 설문지는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응답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공공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만족, 선호하는 사회 보호 정책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질문은 양자택일형 응답(binary-response) 또는 척도형 응답(scale-response)의 방식을 취하는 폐쇄형 질문(fixed-response question)이다. 설문은 각국의 언어로 진행된다.

표 2.1. **지표 목록**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우려
정부 효과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

2.2.2. 일반 사회적 영역 지표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할 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성과가 낮거나 또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분야에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측면은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가족, 인구추이 등 일반지표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지표들에 대해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한다(제4장 참고).

표 2.2. **일반지표 목록**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가족
인구 추이

2.2.3. 자활 지표

자활은 기본적인 사회정책 목표이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 선정된 자활지표는 제5장에서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유급 고용은 소득과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유급 고용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므로 유급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실업상태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부양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기술 역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된 사회적 대응은 교육에 대한 공공, 민간지출이다. 은퇴 후 기대수명은 노년층의 고용 기회, 연금 수급 연령 및 노년층의 자활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대응이다.

아래 표는 OECD 국가들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자활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선정해 열거한 것이다.

표 2.3. **자활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고용	교육비 지출
실업	은퇴 후 기대수명
기술	

2.2.4. 형평성 지표

형평성은 또 다른 공통의 사회정책 목표이다. 형평성 성과는 주로 자원에 대한 접근성으로 측정된다.

형평성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제6장). 이것은 결과의 평등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무엇이 공정한 기회나 결과의 배분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형평성 측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사회적 상태 형평성 지표는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으로 국한했다.

소득불평등은 사회 전체에 걸쳐 형평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정책은 소득분포의 하위층에 위치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평등 외에 빈곤지표도 사용했다. 보장된 최저소득급여를 고려함으로써 저소득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확보 가능한 생활수준을 보여준다.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는 생산연령 국민에 대한 현금이전이 주요 소득안전망이 된다. 급여수급(Living on benefits) 지표는 좀 더 일반적인 소득불평등과

빈곤지표를 보완한다. 모든 OECD 국가는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비상사태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사회지출로 요약된다. 형평성 지표는 자활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합치면 국가의 사회적보호제도가 충분한 급부를 제공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자활 촉진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빈곤 위험을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표 2.4. **형평성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소득 불평등	사회적 지출
빈곤	
실업급여	
저렴주택	

2.2.5. 보건지표

보건상태는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보건상태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건을 사회정책의 중심 목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제7장).

사회적 여건과 보건상황 간의 연계는 잘 확립되어 있다. 실제로 교육적 성과, 공중 보건 지표, 보건의료에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여명으로 측정되는 건강상태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여했다. 효과적인 공중 보건 지표에도 불구하고, HIV/AIDS 전염은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주요 공중 보건 문제로 남아 있다. 자살률은 보건과 사회적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지출은 보건상황 관련 우려에 대한 보건의료 제도상 정책 대응의 좀 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체 인구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보건지표는 흡연 및 음주로 둘 다 수많은 해로운 건강 및 사회적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상 문제는 때로는 보건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상호 연관된 사회적 상황 - 실업, 빈곤, 부적절한 주택 등 - 에 뿌리를 둘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상 개입의 효과성은 지출 수준 자체보다는 의료보험의 낮은 적용범위나 본인부담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다른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건상황과 개입에 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지표는 OECD 보건 통계(OECD Health Statistics)와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5. **보건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기대수명	보건지출
HIV/AIDS	
자살률	
흡연 및 음주	

2.2.6. 사회통합 지표

사회통합은 국가 사회정책의 매우 중요한 목표로 내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별로 없지만 광범위한 증상은 사회통합이 부재한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사회통합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서로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나타난다(제8장).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활 여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기관 신뢰와 투표 참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가기관을 신뢰하는지와 사회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지표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지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며, 그러한 폭력이 지속적이고 만연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된다. 온라인 활동은 사회통합 지표의 또 다른 중요 요소로 온라인 유대감 또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포함한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통합 사안에 관해 관련성 있고 비교 가능한 대응 지표를 직접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정책의 다른 측면(자활, 형평성, 보건)과 관련된 정책 역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2.6. **사회통합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삶의 만족도	
기관 신뢰	
여성에 대한 폭력	
투표	
온라인 활동	

2.3. 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 보고서의 제3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는 다섯 개 영역에서는 선정된 다섯 개 지표 각각에 대해 한 페이지의 설명과 한 페이지의 차트를 제시하고 있다. 차트와 설명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패턴을 따른다. 연구 기간 선정은 부분적으로는 자료의 한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다음에 대해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1) 장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비교하기 위해 지난 세대에 걸친 변화, (2) 지난 경제 위기(일반적으로 2007-08년) 이후의 기간을 조사하여 최근 경제적 변동이 사회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의 및 측정” 섹션은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문제를 논하고 있다. 각 지표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OECD 웹사이트(http://oe.cd/sag) 또는 각 지표의 우측 하단에 있는 “StatLink”를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더 많은 국가의 자료가 나와 있다).

참고문헌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 how_life-2017-en.*

United Nations (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New York.

3. 사회적 위험과 정부 효과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우려
정부 효과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우려

OECD 회원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OECD의 Risks That Matter 조사는 사람들이 단기(향후 1~2년 동안) 또는 장기적(향후 10년 이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위험 인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질병에 대한 우려와 생활비 마련에 대한 우려가 크다. 조사 대상 21개국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향후 1~2년 동안 그들 또는 그들의 직계 가족이 직면하게 될 가장 우려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위험 3가지 중 하나로 "질병 또는 장애"를 지목했다(그림 3.1). 이는 벨기에, 핀란드 및 프랑스와 같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일부 국가를 포함한 21개 국가 중 14개 국가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이다(OECD, 2019).

당연히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커진다. 이는 노년층 응답자 대부분에게 가장 큰 단기적 우려 요소이다. 반면 청년층은 저렴한 주택 마련에 대한 우려가 크다(ibid).

많은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단기적 우려 요소는 빈곤이다. **일하고 있더라도 모든 응답자의 40~50%는 생활비 마련에 대한 단기적 우려가 있다.** 이 대답은 특히 저소득층과 세계 금융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그리스 (70.5%), 이탈리아 (55.9%), 멕시코 (6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 특히 멕시코에서는 개인의 생명·신체 안전이 주요 우려 요소이기도 하다(ibid).

장기적으로는 노후의 연금과 재정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한다.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약 72%가 그들 또는 그들 가족이 직면할 가장 큰 장기적 우려 요소 3가지 중 하나로 노후 재정 상황을 지목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어섰다(그림 3.2). 노년층 응답자들이 가장 큰 우려 요소 중 하나로 노후 재정 상황을 지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청년층에서도 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이동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 대상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부모의 60%(자녀와 동일한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부모)는 가장 큰 장기적 우려 요소 3가지 중 하나로 자녀가 자신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와 편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꼽는다. 이는 노후의 재정 안정(73%)에 이어 부모 세대가 두 번째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다(OECD, 2019). 노동 시장에서 많은 청년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오늘날, 청년층의 응답자는 자신의 미래 전망에 대해 우려가 클 가능성이 크다. 조사 대상 21개국에서 평균적으로, 18세에서 29세까지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우려 요소 3가지 중 하나로 부모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지위와 편리한 삶을 얻는 것이라고 답했다(ibid).

정의 및 측정

그림 3.1과 그림 3.2는 OECD 2018년 Risks That Matter 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사람들의 장·단기적 우려를 이해하기 위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그들 또는 그들의 직계 가족에 가장 큰 3가지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7가지 위험 목록에서 선택하도록 요청받았다(질병/장애, 실직, 저렴한 주택 마련, 생활비 마련, 보육서비스/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범죄/폭력, 이 중 없음). 응답자는 위험 요소 선택지 중 0~3개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단기는 "향후 1~2년 동안"으로 정의되었고, 장기는 "향후 10년 이상"으로 정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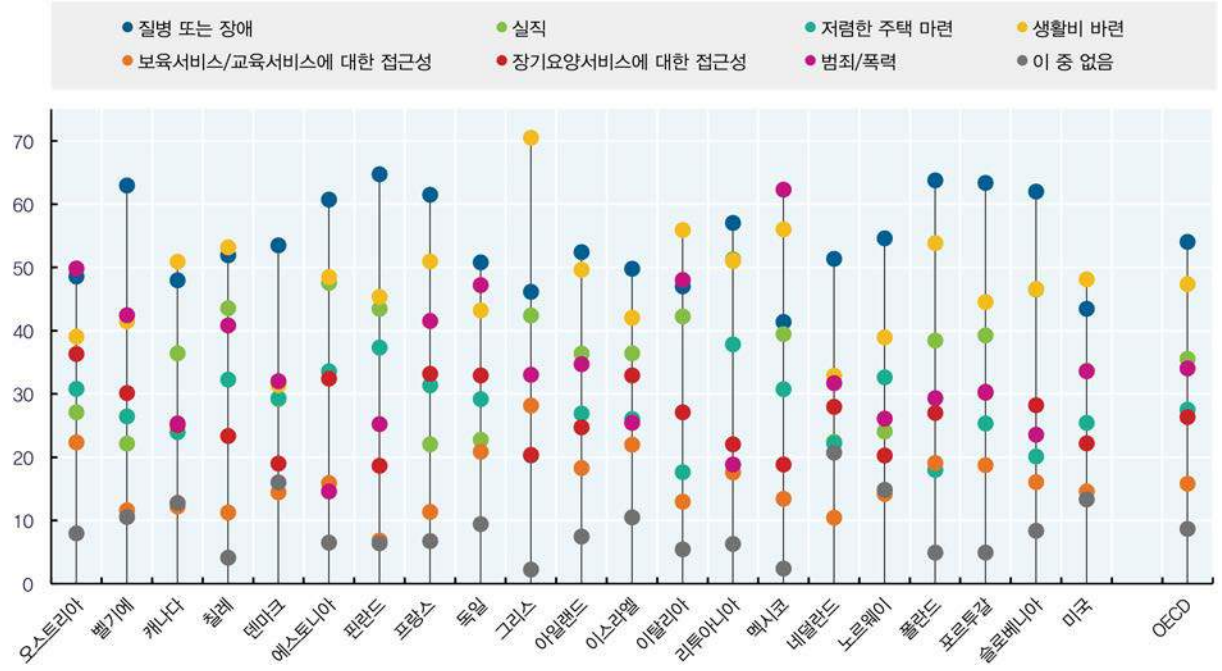
이 조사는 인터넷과 전화로 모집한 표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표본 추출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및 종사상 지위를 추출 기준으로 하고, 할당표본추출법을 변형한 형태를 기반으로 한다. 이 5가지 표본 추출 기준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된 표본을 수정하기 위해 가중치가 사용된다. 표본은 국가당 1000명을 선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참고문헌

OECD (2019), *Risks that Matter: Main Findings from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3.1. 사람들은 질병과 생활비 마련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응답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가장 큰 단기적(향후 1~2년) 위험 요소 3가지를 고르게 한 경우에 각 위험을 지목한 응답자 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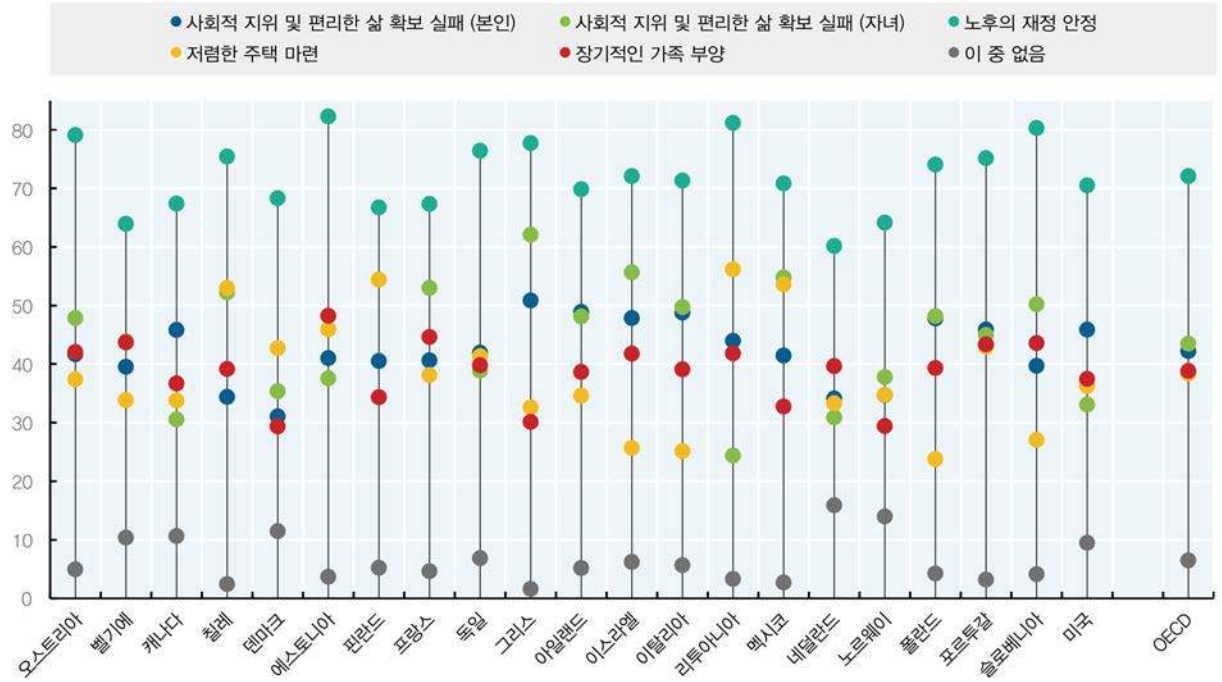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306

3.2. 많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연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응답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가장 큰 장기적(향후 10년 이상) 위험 요소 3가지를 고르게 한 경우에 각 위험을 지목한 응답자 비율, 2018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325

정부 효과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OECD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0% 이상을 공중보건, 주택 및 가족 서비스, 공적 연금과 같은 노년 부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소득 지원 등의 사회정책에 사용한다. 재분배와 빈곤에 관한 연구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회정책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Risks that Matter* 조사에 따르면 공공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프로그램이 모든 집단에 대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며, 정책이 항상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5명 중 1명만이 필요할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21개국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쉽다는 데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그림 3.3). 공공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캐나다(34%가 필요한 경우 쉽게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함), 네덜란드(38%) 및 노르웨이(35%)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 기여금을 고려할 때, 공공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 기여금을 고려할 때 나는 공공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평균 59%로 가장 일반적이었다(그림 3.4).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에서는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그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OECD 2019).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21개국에서 평균적으로 3분의 2의 응답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공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강하게 동의한다(ibid).

이러한 불공정하다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듣고 있지 않다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Risks that Matter* 조사 대상국 중 4개국(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정부가 공공 혜택 정책을 설계하거나 개혁할 때 나 같은 국민 개개인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그림 3.5).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난다(그림 3.5). 이러한 감정은 사회 집단 전반에 퍼져 있으며 단지 "사회적 낙오자"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 대한 환멸감이 젊은 층에서 가장 크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18~29세의 응답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작다(ibid).

불공정하다는 인식과 환멸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빈민층을 위한 재분배 정책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빈곤에 처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 21개국 중 17개국에서 가장 많은 답변은 "사회의 불공정함"이었다. 포르투갈 응답자 71%, 멕시코 응답자 68%가 불공정함을 빈곤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같은 답변을 지목했다(OECD, 2019). 이와 함께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유층 증세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스, 독일, 포르투갈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이 비율이 75% 이상으로 올라간다(ibid).

정의 및 측정

그림 3.3, 그림 3.4 및 그림 3.5는 OECD 2018년 Risks That Matter 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그림 3.3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3.4는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 기여금을 고려할 때 나는 공공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3.5의 경우, "정부가 공공 혜택 정책을 설계하거나 개혁할 때 나 같은 국민 개개인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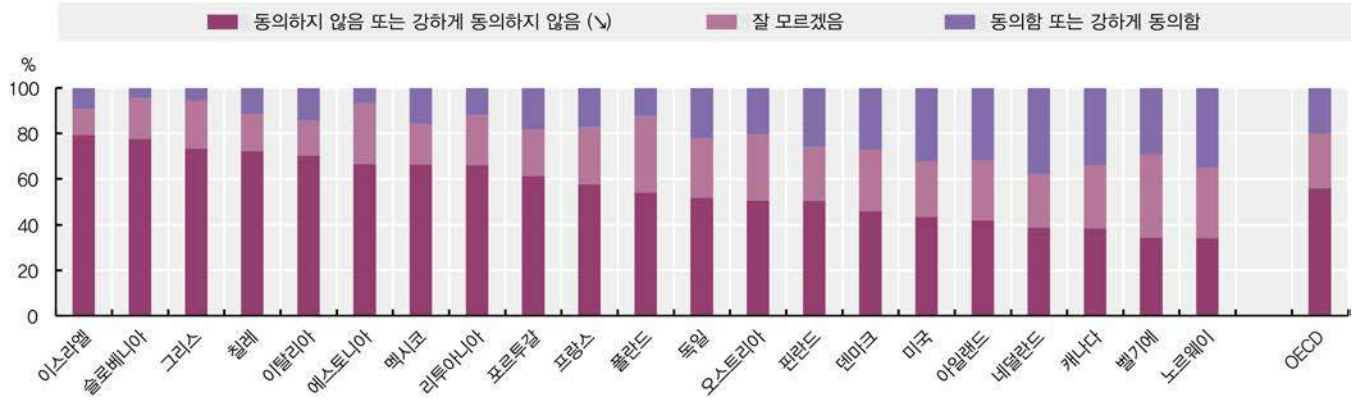
세 가지 질문 모두에 답변 선택지로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동의함", "강하게 동의함"이 있다.

참고문헌

OECD (2019), *Risks that Matter: Main Findings from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3.3. 필요한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필요한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분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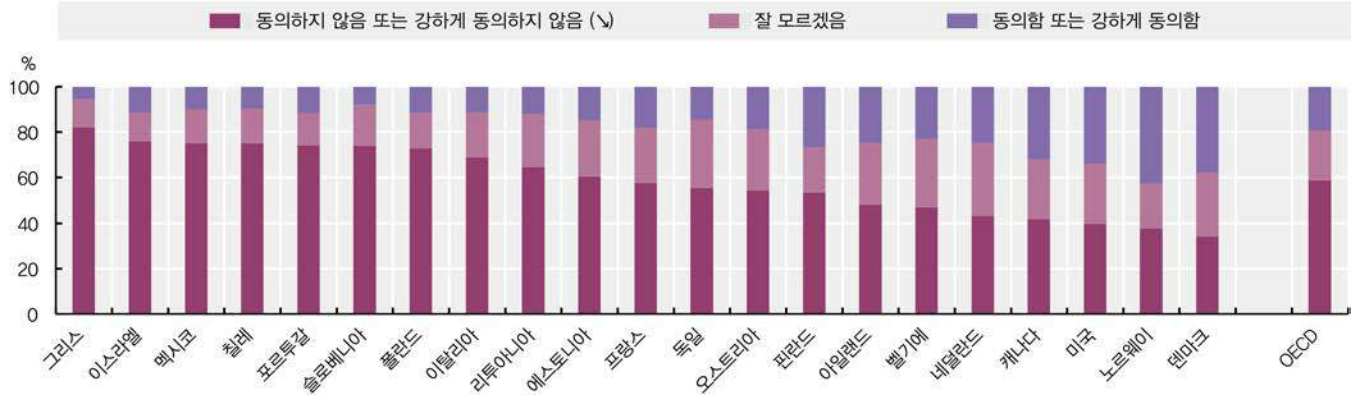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18),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344

3.4. 많은 사람은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 기여금을 고려할 때 공공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 기여금을 고려할 때 나는 공공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분포, 2018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363

3.5. 대부분의 국가에서 응답자는 정부가 공공 혜택 정책을 설계할 때 국민 개개인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공 혜택 정책을 설계하거나 개혁할 때 나 같은 국민 개개인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분포, 2018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382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수준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한다'나 '더 적은 역할을 해야 한다'의 비율보다 높다(그림 3.6). 심지어 국민들의 사회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덴마크와 프랑스에서도 45%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이 비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간다.

특정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회 집단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연금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놓인 정책으로 꼽힌다. 조사 대상 21개국에서 응답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3가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평균 54%는 더 나은 연금 제도를 지목했고 48%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지목했다(OECD, 2019).

사람들은 더 나은 연금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 조사 대상 21개국 중 19개국에서 응답자들은 증세와 다른 프로그램 축소가 필요하더라도 정부가 연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평균 약 40%는 더 나은 연금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 소득의 2%를 추가적으로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그림 3.7).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51%)였으며, 포르투갈(49%), 그리스 및 칠레(48%)가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정책 분야 확대에 대한 지지는 적은 편이지만,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더 나은 주거, 교육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OECD, 2019).

여러 국가 중에서 덜 부유한 국가의 응답자는 구직 서비스나 창업 자금과 같은 노동 시장 지원정책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 부유한 국가의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주거 서비스를 많이 지목한다(ibid).

부의 평등적 분배가 실현된 국가(egalitarian country)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사람들은 교육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은데(그림 3.8),** 이는 아마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 칠레와 같이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교육을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정의 및 측정

그림 3.6, 그림 3.7 및 그림 3.8은 2018년 OECD Risks That Matter 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그림 3.6의 경우, 응답자에게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적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선택 가능한 답변에는 "모름"도 포함한다.

그림 3.7의 경우,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더 잘 공급받고 이용하기 위해 소득의 2%를 세금/사회 기여금으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는 원하는 공공 서비스 및 혜택이 여러 가지인 경우 모두 선택하거나 하나도 없는 경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3.8의 패널 A의 경우, 응답자에게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물었다. 그들은 지원에 관한 선택지 9가지 중에서 0~3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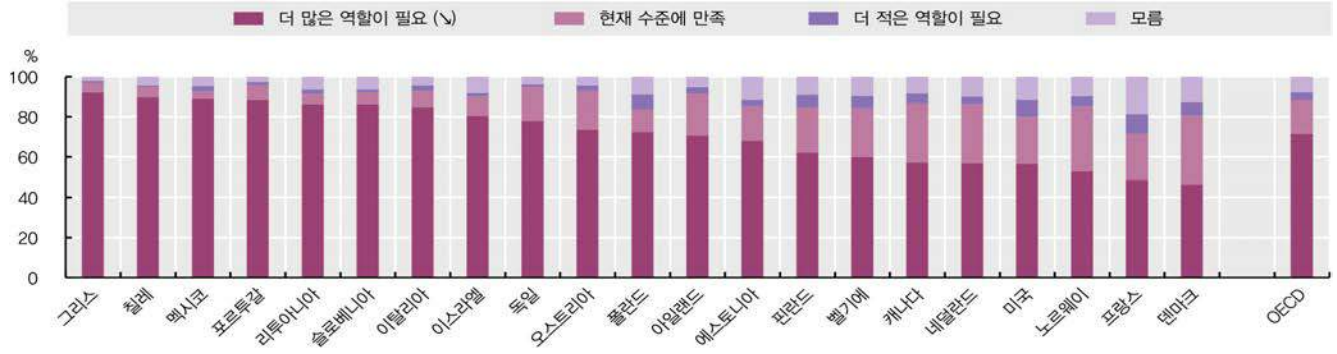
패널 B의 경우, 다양한 공공 서비스 및 혜택을 더 잘 공급받고 이용하기 위해 소득의 2%를 세금/사회 기여금으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는 원하는 공공 서비스 및 혜택이 여러 가지인 경우 모두 선택하거나 하나도 없는 경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멕시코(2014년)를 제외하고, 지니 계수에 관한 데이터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은 OECD 소득분포 데이터베이스(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의 가처분소득(세금과 이전을 고려한 후)에 기반한다.

참고문헌

OECD (2019), *Risks that Matter: Main Findings from the 2018 OECD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3.6.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적 안정 및 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또는 더 적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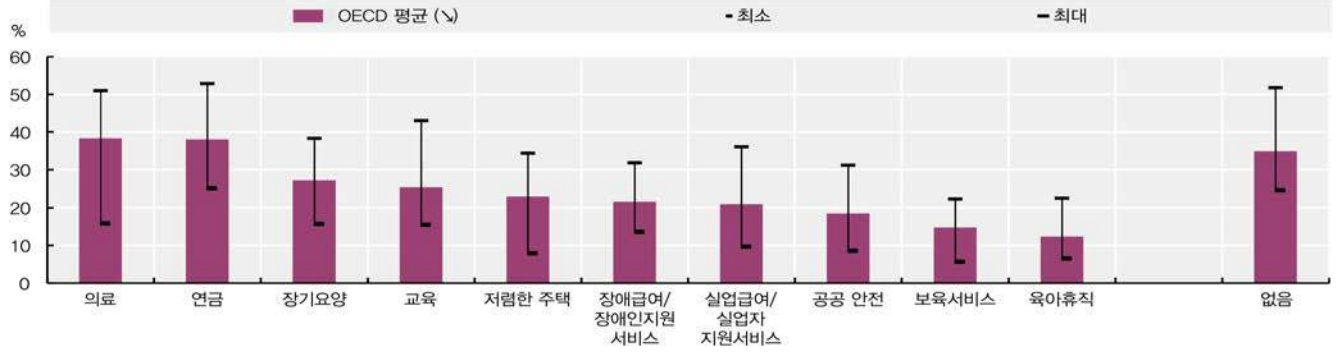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401

3.7. 약 40%가 더 나은 연금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더 잘 공급받고 이용하기 위해 소득의 2%를 세금/사회 기여금으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비율, 비가중 국가 간 평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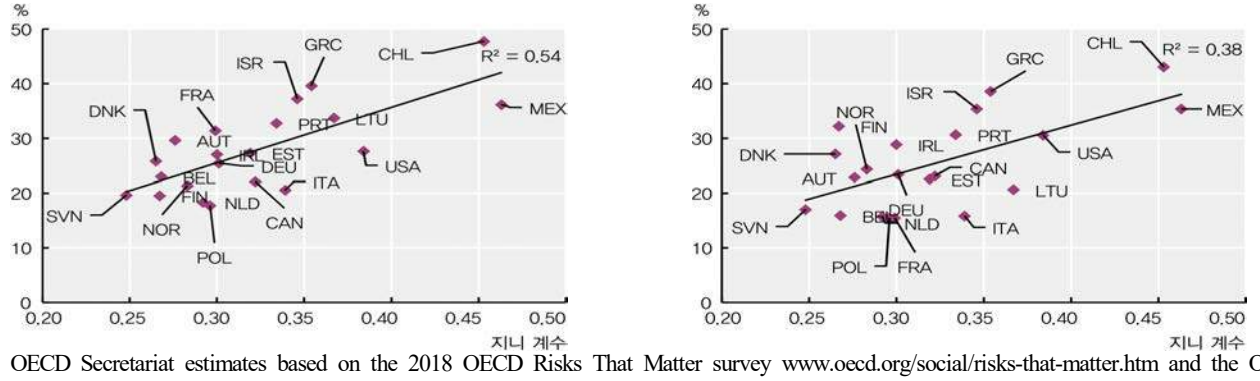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420

3.8.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응답자는 공교육을 우선순위에 둔다

패널 A. 소득 불평등 및 가장 필요한 지원 하나로 "교육"을 선택하는 비율

패널 B. 소득 불평등 및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겠다고 답한 비율



출처: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and th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439

4. 일반 지표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가족
인구 추이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

가처분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이는 물질적인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빈곤 및 불평등 측정에 사용된다. 구매력지수를 사용하여 각국 통화를 미 달러로 변환하면 국가 간 유의미한 비교를 할 수 있다.

2016년 룩셈부르크의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은 멕시코보다 8배, 스페인보다 약 2배 높았다(그림 4.1). 중위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는 칠레, 멕시코, 터키와 많은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가 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및 스위스는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3개국이다.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보다 신흥 경제국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장기 자료가 나와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80년대 이후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하위층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층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4.2).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 기간에 공적현금이전과 개인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포 내 소득 증가는 이전 수십 년보다 상당히 둔화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추세의 이면에는 국가별 차이가 숨어있다. 예를 들어, 금융 위기의 결과로 그리스의 중위소득은 1985년보다 2016년에 10% 더 낮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에서는 중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중산층은 사회적·정치적 안정 뿐 아니라 경제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OECD 전체 인구의 평균 61%가 중간소득계층에 속하며, 여기에서 중간소득계층이란 소득이 각국의 중위소득 75%에서 두 배 사이인 가구로 정의된다**(그림 4.3). 이 비율은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의 절반 정도에서 북유럽 국가 및 일부 유럽 대륙 국가의 약 70%에 이른다. OECD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은 인구의 최대 30%를 차지하며, 고소득층은 인구의 9%를 차지한다.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신흥 경제국에서는 고소득층이 인구의 20~25%를 차지한다.

정의 및 측정

연간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자료는 OECD 소득분포 데이터베이스(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출처로 한다. 가처분소득은 공적현금이전 수급 및 직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후 시장소득(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다. 정부와 민간기관이 가구에 제공한 현물서비스, 소비세, 주택 소유로 인한 귀속임대료 소득 흐름은 배제했다. 세금을 제하고 복지 급여를 더하면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눈 균등화 규모로 서로 규모가 다른 가구의 욕구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한 후 조정된 소득을 가구 내 각 구성원에게 배정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각국 통화로 표시된 소득 지표를 민간소비환율을 위한 구매력지수를 사용해 미 달러로 변환했다. 이러한 구매력지수는 미국에서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것을 각 국가에서 구입하는 데 필요한 해당 국가 통화 금액을 나타낸다. 소득과 구매력지수 추정치 둘 다 통계적 오류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간 차이가 5% 미만인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여기서 중산층(middle class)은 소득이 각국의 중위소득 75%에서 두 배 사이인 가구로 정의한다.

참고문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OECD (2019, forthcoming),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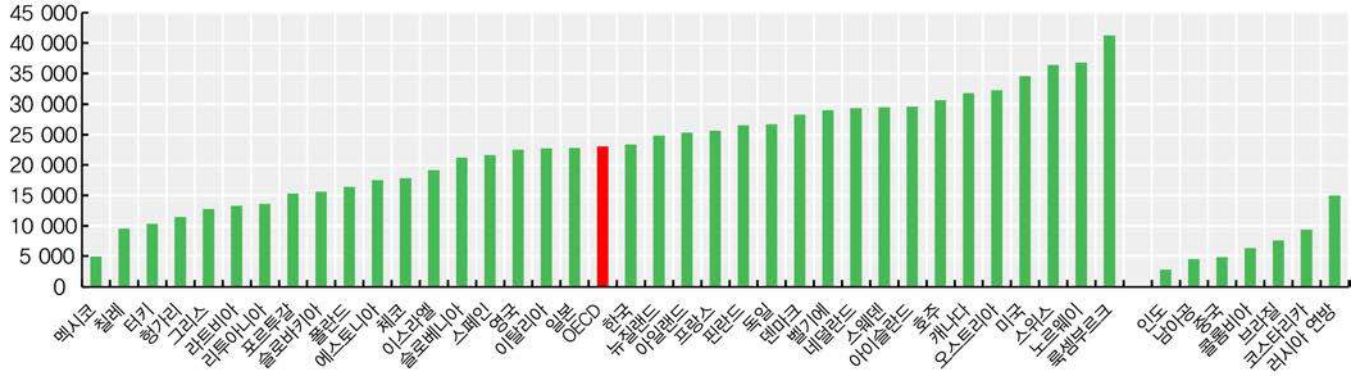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1: 콜롬비아의 자료는 임시적이며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세 납부 전,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후 소득이다.

그림 4.2: OECD-17은 장기 소득 자료가 있는 OECD 17개국을 말한다. 여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이 포함된다. 2012년부터 가구 소득의 표준 방법론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자료가 조정되었다.

4.1. 각국의 중위소득은 미화 4,900달러부터 41,200달러까지 분포하며 최대 8배 차이를 보였다

연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 2016년, 미 달러 구매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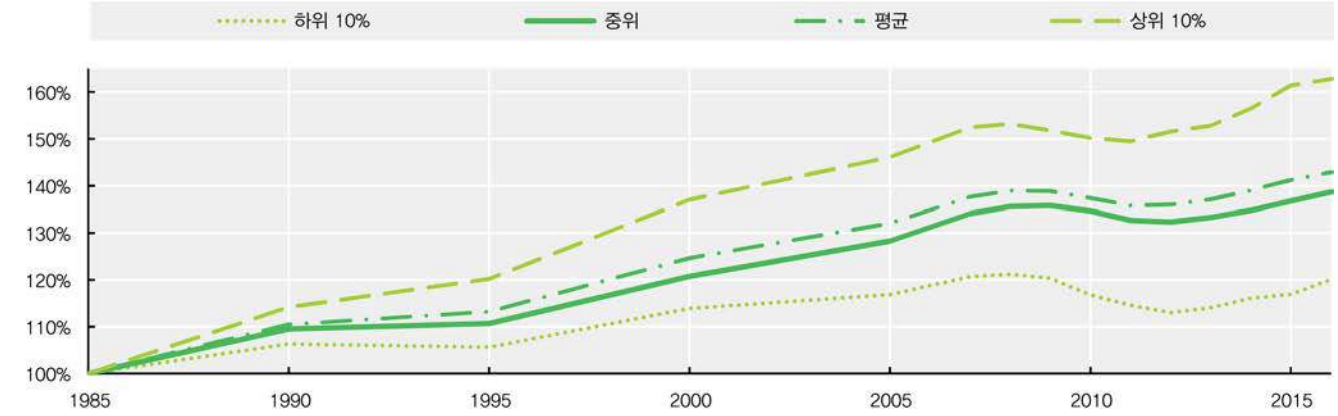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458

4.2. 중위소득은 상위층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했다

소득 분포별 실질 소득 증가, OECD 17개국 평균 (1985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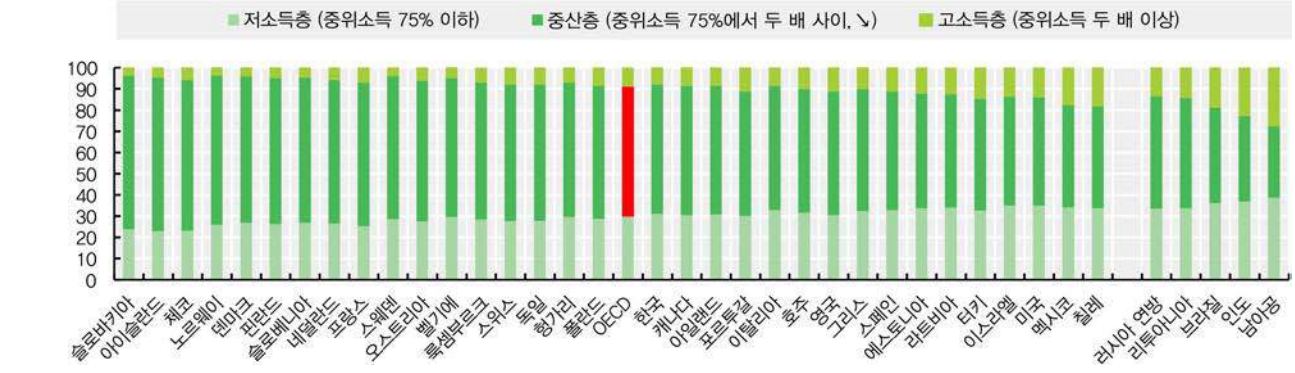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477

4.3. 대부분의 사람은 중산층에 속한다

소득집단별 인구 비율, 2014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496

출산율

합계출산율은 평균적으로 여성 한 사람이 평생동안 연령별 출산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갖게 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영아기와 아동기의 사망률을 감안했을 때, 인구는 합계출산율이 2를 약간 넘어야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 간 OECD 지역에서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1970년 가임기 여성 한 명당 평균 2.8명에서 2016년 1.7명을 기록했다(그림 4.4). 출산율 하락은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서 특히 -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3명 이상 - 두드러졌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평균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이러한 회복세가 2009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단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2016년,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수준을 훨씬 밑돌아 OECD 전역에서 평균 1.7이었으며(그림 4.4)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았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출산율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멕시코와 터키 여성보다 평균 자녀 한 명을 더 두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대체율을 초과하는 곳은 이 세 개 국가뿐이었다(여성 한 명당 자녀 2.1명).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OECD에서는 각각 네번째,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영어사용 국가 및 북유럽 국가 또한 대개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남유럽, 일본 및 한국이었는데, 한국의 경우 여성 한 명당 평균 한 명의 자녀가 있다.

출산율은 OECD 국가보다는 핵심 파트너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에서 출산율이 대체율을 웃돌았다. 1995년에서 2016년 사이 러시아에서 출산율이 증가한 반면, 다른 핵심 파트너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했다.

여성의 교육 및 고용률 증가, 노동 시장 진입 지연, 증가하는 주택문제 및 일부 국가의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가족들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등이 모두 출산율 감소에 일조했다. 가정을 꾸리는 시기를 늦추는 현상이 연령별 출산율 추세에 반영되어 있다. **2000년부터 30대 미만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상의 출산율은 상승하고 있다**(그림 4.5). 지난 수년간 30-34세의 평균 OECD 출산율은 25-29세 출산율을 앞질렀으며 35-39세의 출산율도 20-24세를 앞질렀다. 또한 OECD 국가 3분의 2에서 이미 그렇듯이 40-44세 출산율은 청소년 출산율을 곧 앞지를 전망이다. 청소년 출산율은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청소년 천 명당 출생아 수 3명 미만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멕시코에서는 여전히 60명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정 꾸리는 시기를 늦추는 현상은 여성의 초산 평균 연령 증가에도 나타난다. 이는 자료가 나와 있는 30개 OECD 국가 전체에 나타나 있다(그림 4.6). **1995년부터 2016년 사이 OECD 평균 초산 연령은 26.0세에서 28.9세로 거의 3년 증가했다.** 2016년, 평균 초산 연령은 미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약 27세로 가장 낮았고, 일본, 한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30세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정의 및 측정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 중 여성 한 사람이 갖는 예상 자녀 수이다 (즉, 각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일치한다고 가정). 출산율은 5년의 간격을 두고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산출된다. 순 이주는 없고 사망률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면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 ("대체수준").

연령별 출산율은 일정 연도의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이다. 여기에서는 5년 단위의 연령집단으로 제시했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구 등록자료나 기타 행정기록을 참조한다. 이 자료는 UN과 Eurostat 권고안에 따라 조정하였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Eurostat 인구 통계 및 UN 세계 출산 데이터 2017(United Nations World Fertility Data 2017)을 바탕으로 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를 출처로 한다.

참고문헌

OECD (2018),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http:// oe.cd/f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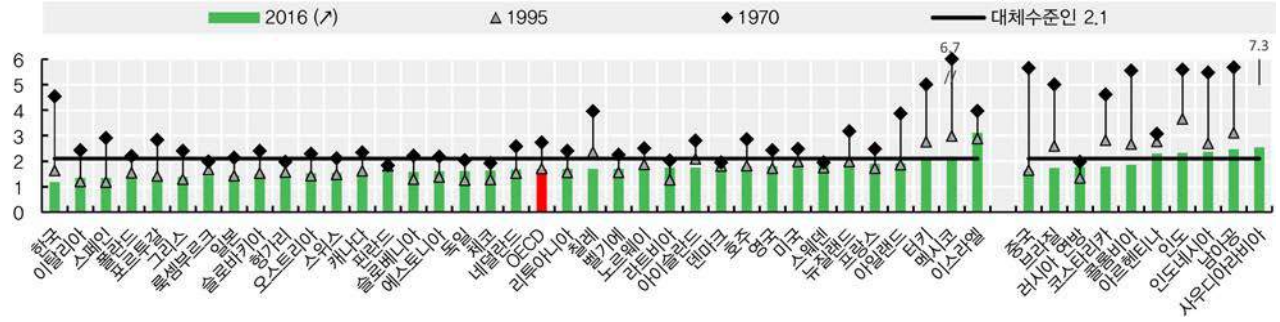
OECD (2018),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http://oe.cd/fdb.*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6: 영국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국한된 자료이다. 캐나다는 2016년이 아니라 2011년, 프랑스와 스웨덴은 1995년이 아니라 1998년, 슬로바키아는 1995년이 아니라 1999년, 라트비아는 1995년이 아니라 2000년이다. 독일은 1995년 자료가 없다. 호주,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양쪽 연도 자료가 모두 없다.

4.4 OECD 전역의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을 밑돈다

15–49세 여성의 자녀 수, 1970년, 1995년,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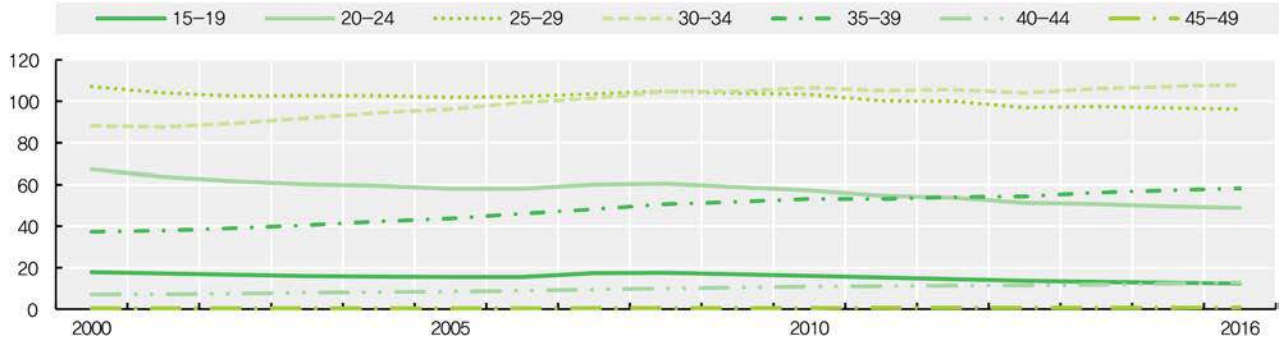


출처: OECD (2018),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http://oe.cd/fdb.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515

4.5. 30대 미만의 출산율 하락과 30대 이상의 출산율 상승

5년 단위 연령별 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 2000년에서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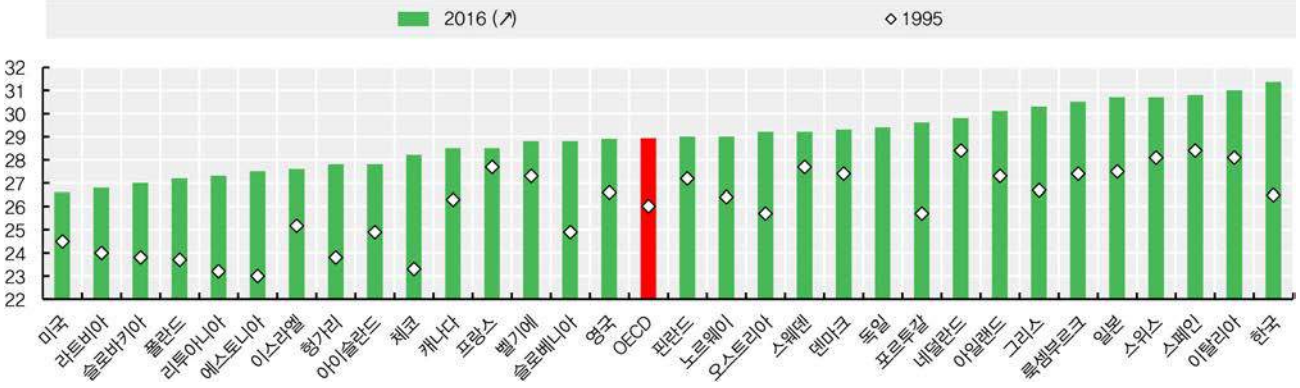


출처: OECD (2018),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http://oe.cd/fdb, based from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ec.europa.eu/eurostat/web/population-demography-migration-projections/population-data/database) and United Nations World Fertility Data 2017 (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dataset/fertility/wfd2017.shtml).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534

4.6.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지난 20년간 3년 상승했다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 1995년과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출처: OECD (2018),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http://oe.cd/fdb, based from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ec.europa.eu/eurostat/web/population-demography-migration-projections/population-data/database) and United Nations World Fertility Data 2017 (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dataset/fertility/wfd2017.shtml).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553

이민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연간 새로운 영구 이민자 유입은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한다**(그림 4.7). 2016년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만이 각각 1.5 %와 3.4 %에 달하며, 여러 해 전부터 높은 이민자 유입 비율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독일과 스웨덴에서 영구 이민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운 영구 이민자의 인구 구성 비율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OECD 내 상위 5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EU 내 많은 영구 이민자들은 자유이동권(free mobility arrangement)을 통해 다른 EU 국가로부터 온다. 제3국에서 EU 국가로 유입되는 이민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2010-15년 0.22%에서 2016년 0.36%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OECD 국가에서 영구 이민자 유입은 15% 증가하였다. 증가의 3분의 2는 인도주의 이주, 특히 독일로의 이주 증가에 의한 것이고 4분의 1은 가족 이주, 특히 미국으로의 이주 증가에 의한 것이다. 다른 OECD국가의 경우, 자유 이동 지역(free-circulation areas) 내에서 새로운 노동 이민자 수나 이주의 규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년 예비 수치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유입이 소폭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2017년 OECD 평균적으로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 출생자였다(그림 4.8).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은 호주와 캐나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생자였다. OECD 국가 중 거의 3분의 2가량은 이민자 비중이 인구의 열 명 중 한 명을 넘었다. 외국 출생자의 약 3분의 2는 비 EU 국가 출신이다. OECD 이민자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며 그들은 미국 인구의 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외국 출생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구의 46%가 넘는다. 이스라엘과 발트 3국을 제외하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 출생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했다. OECD 이민자 중 3분의 2 이상이 최소 10년 동안 현 거주국에 살았으며 16%는 최대 5년 동안 거주했다.

EU에서 이민자와의 교류는 직장보다 이웃에서 더 자주 나타나며, 자국 출생자의 44%가 이웃에서, 28%가 직장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비 EU 국가의 이민자와 교류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9). 자국 출생자가 EU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와 가장 많이 교류하는 국가는 남유럽국가, 아일랜드 및 오스트리아이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이민자 동료와의 교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민자 시민 참여 및 사회 통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제5장을 참조.

정의 및 측정

영구적 이주란 노동, 가족, 인도주의 또는 자유이동의 목적으로 외국 국적자가 유입 국가에 장기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입에는 한시적 자격으로 들어왔지만 유입 국가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도 포함한다. 이 표준화된 정의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경우 국가 간 이주의 규모와 구성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민자는 우선 출생 당시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출생 인구는 외국 국적자보다 훨씬 많다. 이민 자녀는 여러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즉, 부모 둘 다 외국 출생자이며 거주국에서 태어난 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생자이며 거주국에서 태어난 자, 외국에서 출생했으며 아동기에 이민 온 자,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으며 성인이 되어 이민 온 자이다.

EU 국가에만 나와 있는 교류에 대한 지표는 자국 출생자와 제3국에서 출생한 이민자와의 교류 빈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평균적으로 이민자와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교류는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것까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직장 및 이웃, 두 가지 유형의 교류를 검토한다. 교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할 때 빈번한 것으로 간주되며,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 드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자료의 조사 대상은 15세 이상 자국 출생자이다.

참고문헌

OECD (201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migr_outlook-2018-en.*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OECD Publishing, Paris/EU, Brussels, *https://doi.org/10.1787/ 9789264307216-en.*

OECD (2019), *Ready to Help? Improving Resilience of Integration Systems for Refugees and other Vulnerable Migrant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11312-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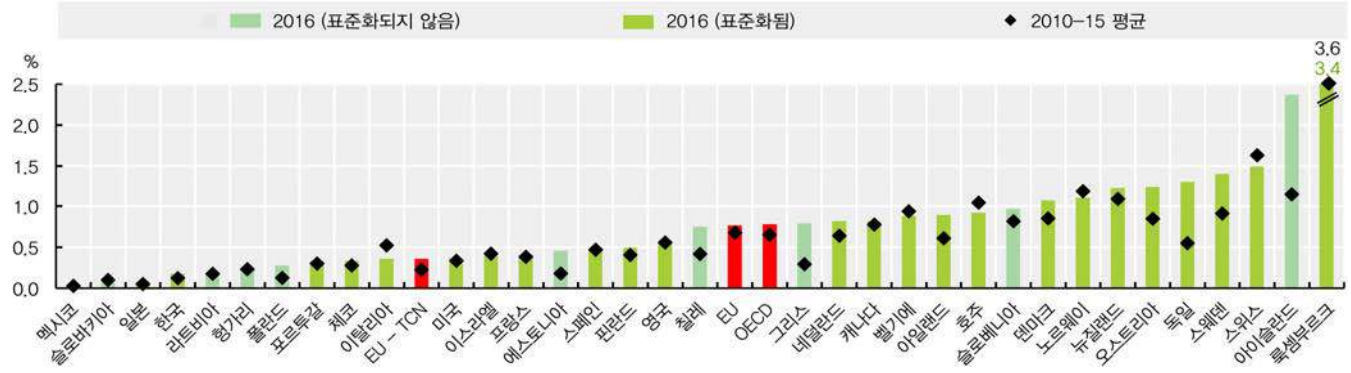
그림 4.7: EU 평균은 차트에 제시된 EU 국가들의 평균이다. EU-TCN은 표준화된 자료가 나와 있는 EU 국가로 제3국 국적자가 들어오는 것을 EU 전체 인구 중 비율로 나타낸다.

그림 4.8: OECD 평균은 가중평균을 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Statlink* 참조.

그림 4.9: 평균은 표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비율을 고려한다. EU-28는 가중평균을 말한다.

4.7.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간 이민자 유입은 인구의 1% 미만을 차치한다

OECD 국가로의 영구 이민자 유입, 전체 인구 중 비율,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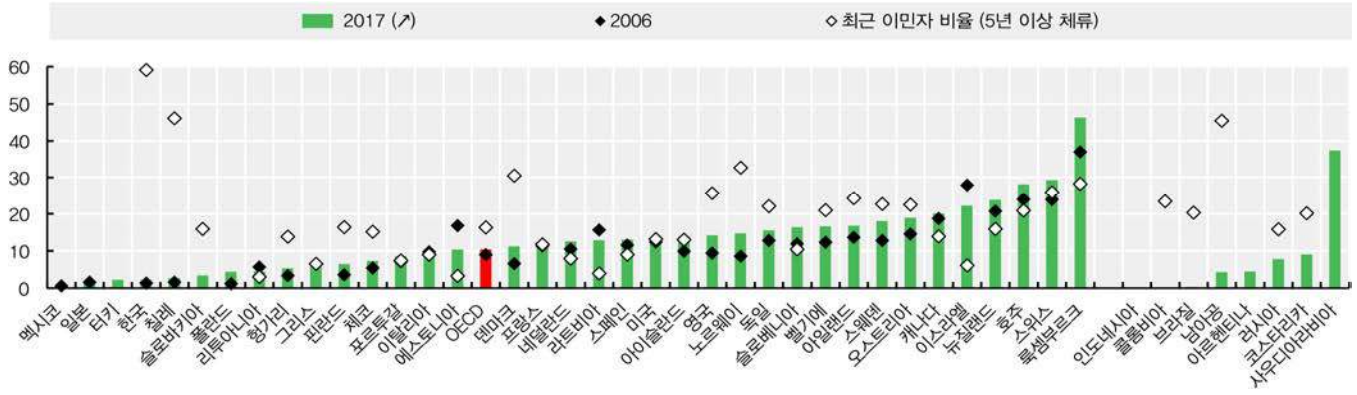


출처: OECD (201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migr_outlook-2018-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572

4.8. OECD 인구의 10분의 1은 외국 출생자이다

전체 인구 중 외국 출생자 비율, 2006년과 2017년 및 최근 이민자 비율, 15–64세, 2015–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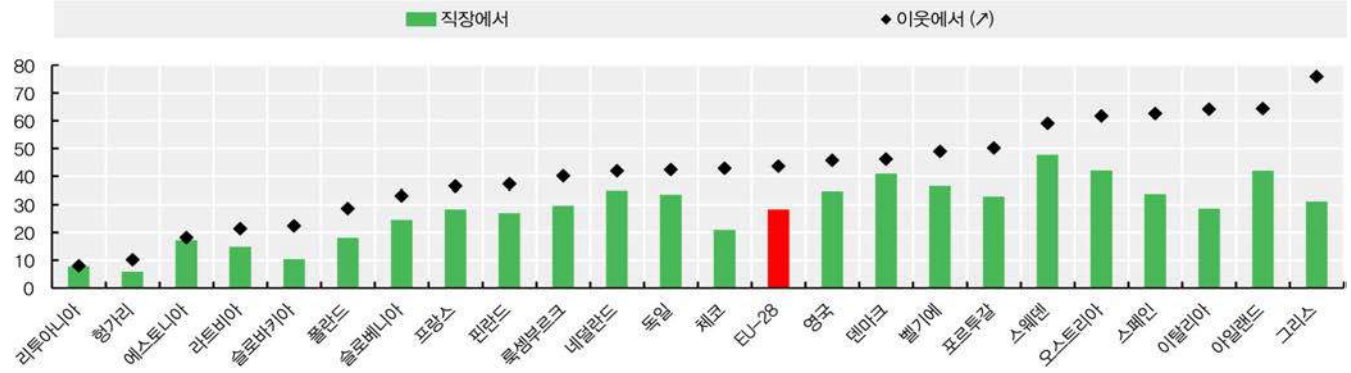


출처: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Immigrant Integration, OECD Publishing, Paris/EU, Brussels, https://doi.org/10.1787/9789264307216-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591

4.9. EU에서 이민자와의 교류는 직장보다 이웃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이민자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류하는 자국 출생자의 비율, 2018년



출처: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OECD Publishing, Paris/EU, Brussels, https://doi.org/10.1787/9789264307216-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610

아동의 거주 형태는 그들의 복지와 빈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OECD 국가에서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가 두 명인 가정에 산다**(그림 4.10). 그 비율은 라트비아와 미국의 70% 미만에서 터키와 그리스의 90%에 이르기까지 OECD 내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그 외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 없이 사는 것 보다는 한 부모와 함께 사는 유형이 더 많다. 라트비아는 28%로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다. 벨기에, 리투아니아, 영국 및 미국에서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동 4명 중 1명은 한부모와 살고 있다.

부모 두 명과 함께 사는 아동 대다수는 동거하는 부모보다는 결혼한 부모와 살고 있다.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미국에서는 모든 아동의 10% 미만이 동거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25% 이상이 동거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여전히 "결혼한 두 명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거 커플과 함께 사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OECD, 2018).

OECD 전역에서 평균 초혼연령은 크게 높아졌다(그림 4.11). 1990년대 초반, OECD 국가에서 평균 초혼연령은 여자 25세, 남자 27세였다. 2016년, 이 평균 연령은 여자 30세, 남자 32세로 높아졌다. 초혼연령 상승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 북유럽 국가는 평균 연령이 매우 높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의 경우,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약 25세, 남자는 28세 미만이다. 국가별 차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다양한 과도기적 여정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의 경우 동거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중요한 형태가 되었으며 파트너십의 기준으로서 결혼을 미루거나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혼연령은 높아지고 결혼율은 감소했으며 이혼율은 안정되었다. 2016년,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천 명당 결혼 3.5-7건 사이로 OECD 평균은 4.8건이었다(그림 4.12).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매우 낮아 천 명당 3.5건 미만을 기록한 반면 리투아니아, 터키, 미국은 두 배 수준이었다. 결혼율은 러시아(천 명당 8.5건)와 중국(천 명당 9.6건)에서 더 높았다. 반면, 1990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결혼율이 천 명당 5-8건이었다. 스웨덴과 터키만이 1990년에서 2016년 사이 결혼율이 상승했다.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s)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2016년, 칠레는 천 명당 0.1건으로 낮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미국은 천 명당 3건 이상이었다. 1990년과 2016년 사이에는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다. OECD 20개국에서는 상승했으나, 16개국에서는 하락했다. 하락은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져 1992년 천 명당 4.8건에서 2016년 3.2건을 기록했다. 증가는 스페인에서 가장 높아 1990년 천 명당 0.6건에서 2016년 2.1건을 기록했다.

2019년 1월 OECD 20개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다(그림 1.8). 동성 결혼/이혼에 관한 자료는 아직 모든 국가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프랑스에서는 3%의 결혼식이 동성 커플 사이에서 올려졌으며, 여성 동성 커플과 남성 동성 커플 사이에서 균등한 비율로 나타났다(INSEE, 2019).

정의 및 측정

아동(0-17세)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가구 내 부모의 존재 여부 및 혼인 상태에 따라 분류된다.

- '두 명의 부모와 거주'는 아동이 아동의 "부모"로 보고된 두 명의 성인이 있는 가정에서 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럽 국가와 일부 비 유럽 OECD국가의 경우, 자료는 '결혼한 두 명의 부모와 거주'와 '동거하는 두 명의 부모와 거주'로 추가 분류할 수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국가마다 실제 관행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결혼한 부모"는 혼인 신고를 한 부모를 말한다.
- '한부모와 거주'는 아동이 "부모"로 보고된 한 명의 성인만 있는 가정에서 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는 아동이 부모로 여겨지지 않는 성인이 있는 가정에서 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평균 초혼연령은 초혼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정의된다. 이 측정지표는 남녀별로 나눔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평균값을 따로 구한다.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천 명당 연간 동성결혼(legal civil union) 또는 결혼 건수로 정의된다.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천 명당 연간 혼인 해소 건수로 정의된다.

참고문헌

OECD (2018), Family Database, http://oe.cd/fdb.
INSEE (2019), Bilan Démographique 2018, Insee Première n° 1730, www.insee.fr/fr/statistiques/3692693.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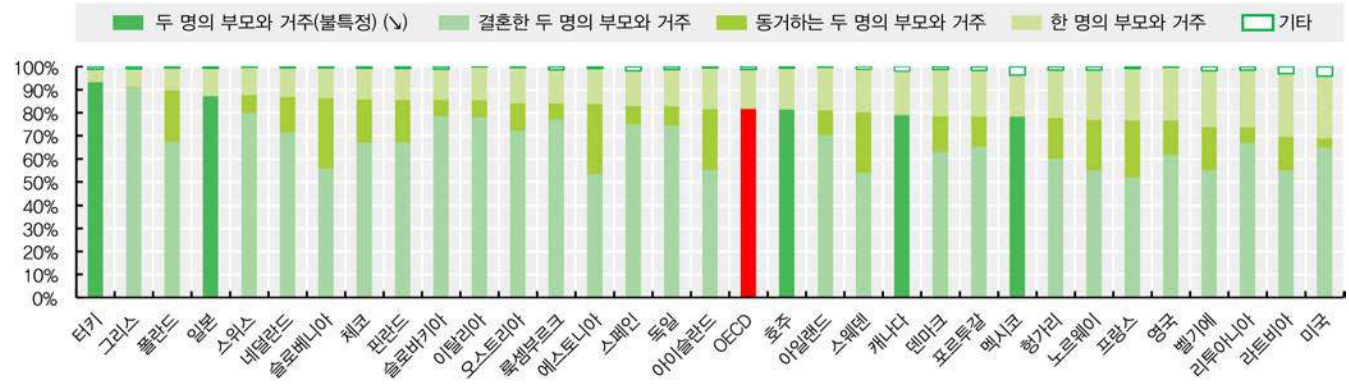
그림 4.10: 일본과 멕시코의 경우 0-14세 자료이다. 멕시코는 2010년 자료, 호주는 2012년 자료, 일본과 터키는 2015년 자료, 크로아티아,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은 2016년 자료이다.

그림 4.11: 2016년의 경우, 벨기에는 2010년 자료, 아이슬란드와 몰타는 2011년 자료, 오스트리아는 2012년 자료, 멕시코는 2014년 자료,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영국은 2015년 자료이다. 멕시코 자료는 초혼이 아니라 모든 결혼을 의미한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자료는 평균 초혼연령이 아니라 초혼 중위연령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자료는 동성 결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4.12: 특정 연도에 대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4.10. 국가에서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가 두 명인 가정에 산다

가구 내 부모의 존재 여부와 혼인상태에 따른 아동 비율(0–17세),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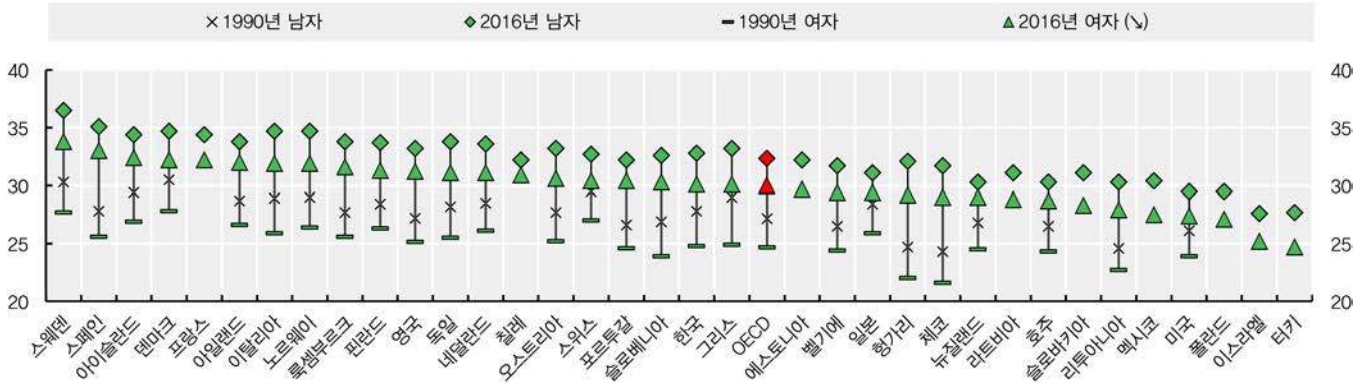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2.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http://oe.cd/fdb.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629

4.11. 1990년 이후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5년 상승했다

평균 초혼 연령, 남녀별, 1990년과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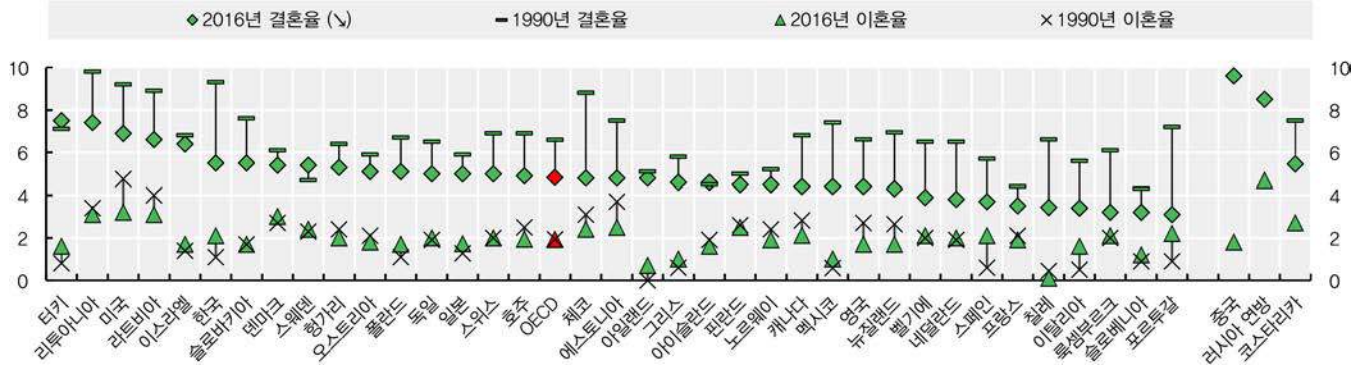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http://oe.cd/fdb.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648

4.12. 지난 수십 년 동안 결혼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은 안정되었다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천 명당, 1990년과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http://oe.cd/fdb.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667

인구 추이

연령 부양비는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해 과거 OECD 국가를 특징지었고 미래에 예상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OECD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2015년, OECD 전역에서 20-64세 인구 백 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 28명으로, 1970년 18명에서 상승했다(그림 4.13). 국가 간 차이는 크다. 2015년 멕시코와 터키의 15% 미만부터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35% 이상, 그리고 일본의 45% 이상까지 분포한다. 2060년이 되면 이 평균 부양비는 OECD 지역에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57%), 한국은 네 배가 된다. 2060년까지 노년부양비는 한국과 일본은 80%에 육박하며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미국은 45% 미만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보건, 장기요양,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청년부양비는 1970년에서 2015년 사이 감소했다. 2015년, OECD 전역에서 20-64세 인구 백 명당 20세 미만 인구는 평균 38명으로, 1970년 70%에서 하락했다(그림 4.14). 2015년, 청년부양비는 독일과 한국의 30%부터 이스라엘, 멕시코의 65% 이상까지 분포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 수치는 하락을 멈추게 되며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를 제외하고는 2060년 평균 39%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청년부양비가 낮아진다는 것은 교육 및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감소세는 노인에 대한 지출 증가세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

신흥 경제국의 경우 노년부양비는 일반적으로 OECD 국가보다 낮은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청년부양비는 더 높다.

그림 4.15는 15-29세 - 노동시장 진입 연령 - 청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이 비율은 1970년 22%에서 2015년 19%로 감소했으며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 국가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평균 부양비는 2060년까지 전체인구의 16%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칠레와 멕시코, 한국, 터키 등 향후 수십 년간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 가장 큰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정의 및 측정

연령 부양비(Age-dependency ratio)는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 노인이건 청년이건 - 개인의 수를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개인의 수에 대비하여 나타낸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청년부양비는 20-64세 인구 대비 20세 미만 인구수다. 그 외에 전체 인구 대비 15-29세 청년 비율도 제시되어 있다.

2015년 이전 추정치와 2060년 예측치는 UN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7년 개정판에서 가져왔다. 여기에 사용된 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중위출산율(medium fertility variant)" 인구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각 인구 구성요소의 수천 건의 예측 궤적의 중위값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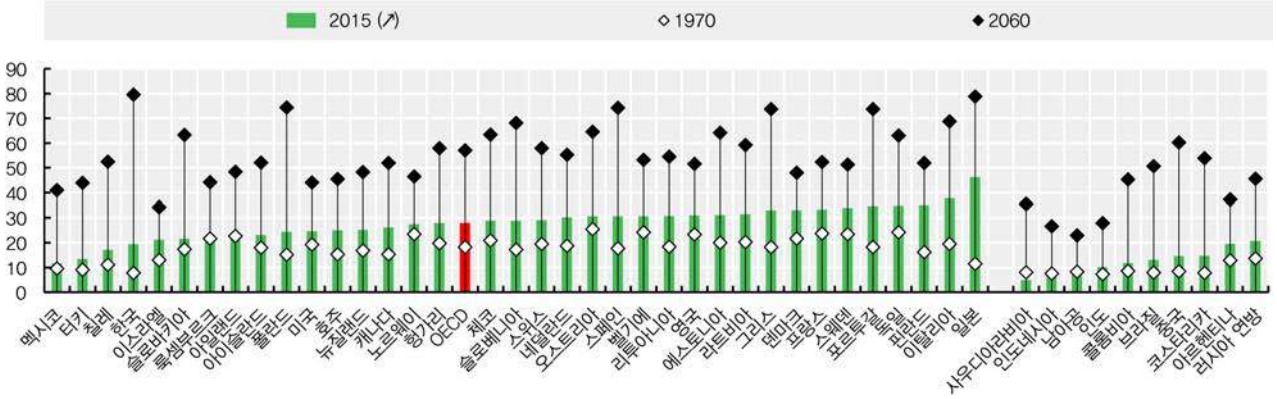
Boulhol, H. and C. Geppert (2018), The effect of population ageing on pensions, VOX, CEPR Policy Portal, *https://voxeu.org/article/ effect-population-ageing-pensions*.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 2017-en*.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Revision, Washington, DC, *http://esa.un.org/unpd/wpp*.

4.13. 노년부양비는 향후 45년간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생산연령(20–64세) 인구 백 명 당 연금수급연령(65세 이상) 수, 1970년, 2015년 및 20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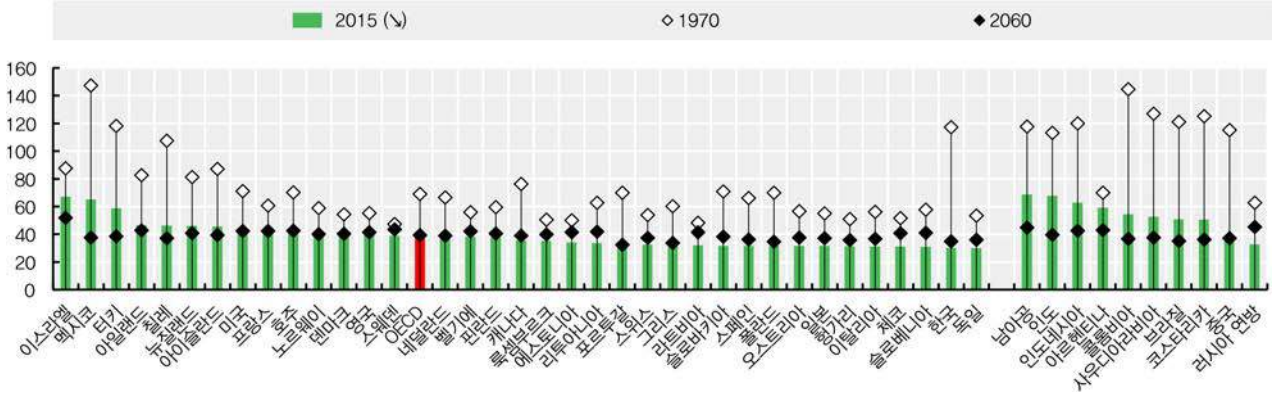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World Populations Prospects: 2017 Revisions.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686

4.14. 청년부양비의 강한 하락은 멈추었다

생산연령(20–64세) 인구 백 명 당 청소년(20세 미만) 수, 1970년, 2015년 및 20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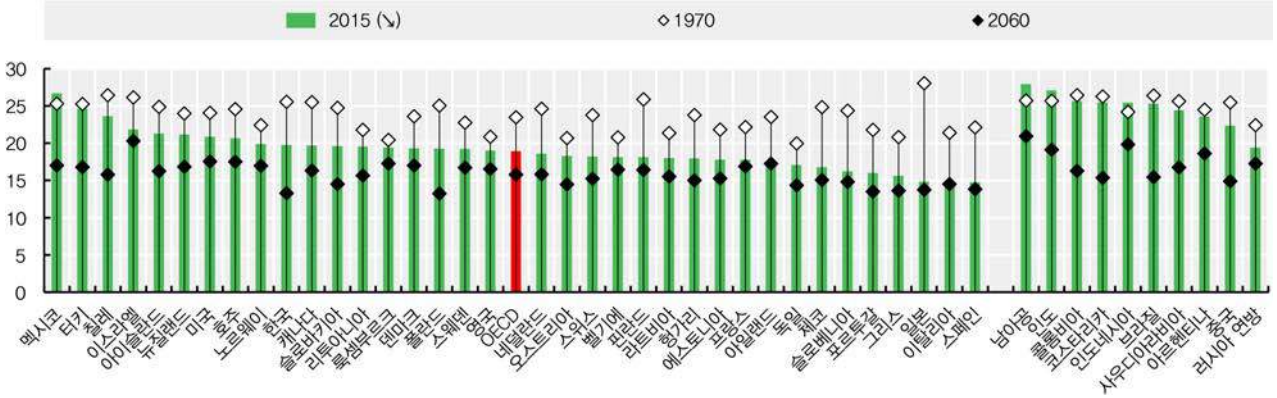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World Populations Prospects: 2017 Revisions.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705

4.15.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청년(15–29세)의 수(%), 1970년, 2015년 및 2060년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World Populations Prospects: 2017 Revisions.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724

5. 자활 지표

고용
실업
기술
교육비 지출
은퇴 후 기대 여명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5. 자활 지표

고용

고용은 자립의 주요 요소이다.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는 생산연령 성인 열 명 중 일곱 명이 고용상태이다**(그림 5.1).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고용상태인 반면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열 명 중 다섯 명이 고용상태이다. 고용 수준은 일반적으로 북유럽 및 영어사용 국가에서 OECD 평균보다 높고 지중해, 남아메리카 및 비회원국(중국 제외)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급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 성별 고용 차이는 몇몇 북유럽 국가,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적다(5% 미만). 이 차이는 멕시코와 터키에서 가장 크며(30% 초과) 칠레와 한국에서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약 20%).

노동시장 상황은 2008~09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강한 영향 이후 일반적으로 계속 향상되고 있다. 2017년 OECD 평균 고용률은 200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거의 2% 포인트 이상 높았다. 고용 수준은 특히 헝가리와 포르투갈에서 상승하였으나(10년 이내 약 10% 포인트) 경제 위기의 타격이 컸던 국가들에서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비전형 고용의 발생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 **2017년 OECD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16%가 자영업자였고 모든 부양 직원의 13% 이상이 임시 근로 계약을 맺었다**(그림 5.2). 자영업은 그리스와 터키에서 비전형 근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임시 고용은 또한 칠레, 폴란드, 스페인에서 부양 고용의 25% 이상을 나타낸다. 비전형 근로는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비전형 근로자가 수입, 직업 안전성, 사회적 보호 및 훈련 기회와 같은 일자리 질 면에서 악화되었다.

디지털화는 일상적인 수동 작업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키고 저숙련 및 고숙련 업무 및 문제 해결과 대인 관계 기술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성인 기술에 대한 OECD 조사(PIAAC)의 최근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 일자리의 14%에서 자동화 위험이 높다**(그림 5.3). 이러한 위험은 국가별로 다양한데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34%, 노르웨이에서는 6%에 이른다. 또한, 일자리의 32%에서 완전 자동화 위험은 낮지만 상당 부분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직업은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업무의 상당 부분은 대체될 것이고 이는 이러한 직업이 수행되는 방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정의 및 측정

주당 최소 한 시간씩 급여, 수익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경우라면 질병, 휴가, 산업 분쟁으로 임시 휴업 중이라 해도 고용상태인 것으로 본다. OECD 국가의 노동력 조사 자료는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조사 기준 주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다. 고용의 기초 지표는 고용 상태인 15~64세 인구의 비율이다.

정규직 직원의 고용 기간이 제한적이지 않은 반면 임시직 직원은 그들의 일자리의 종료일이 미리 결정된 임금 및 봉급 근로자이다. 다음은 임시직 직원 그룹에 포함된다: i) 계절성 일자리를 가진 자; ii) 고용 에이전시 또는 사업체가 고용하여 "작업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3자에 파견한 자; iii) 구체적인 교육 계약(견습생, 훈련생, 연구 보조, 계약의 유예 기간 등을 포함)을 가진 자.

자영업은 보수가 생산된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기인한 수익(또는 수익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일자리이다(이때 자기 소비는 수익의 일부로 간주된다). 자영업은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생산자 협동조합 회원 및 기여하는 가족 근로자를 포함한다.

국가별 정의는 대체로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따르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www.oecd.org/employment/database를 참고한다.

일자리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최소 70%인 경우 일자리의 자동화 위험이 높다. 중대한 변화 위험이 있는 일자리는 자동화 가능성이 약 50-70%인 일자리이다.

참고 문헌

OECD (2018),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8-en.*

OECD (2018),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What works for nonstandard worker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 employment/future-of-work.*

OECD (2018), "Putting faces to the jobs at risk of automation",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mployment/future-of-work.*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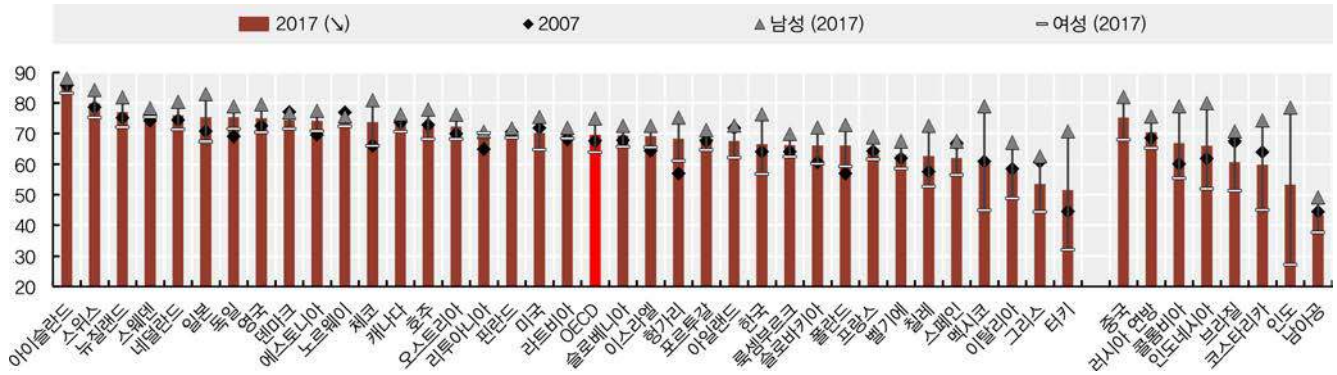
그림 5.1: 중국은 2010년, 인도는 2012년 자료이다.

그림 5.2: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는 자영업 자료가 없다. 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은 임시 고용 자료가 없다.

그림 5.3: 벨기에 자료는 플랑드르 자료이며 영국 자료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자료이다. OECD는 가중 평균을 말한다.

5.1. 고용률은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다

고용률,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 성별, 2007년 및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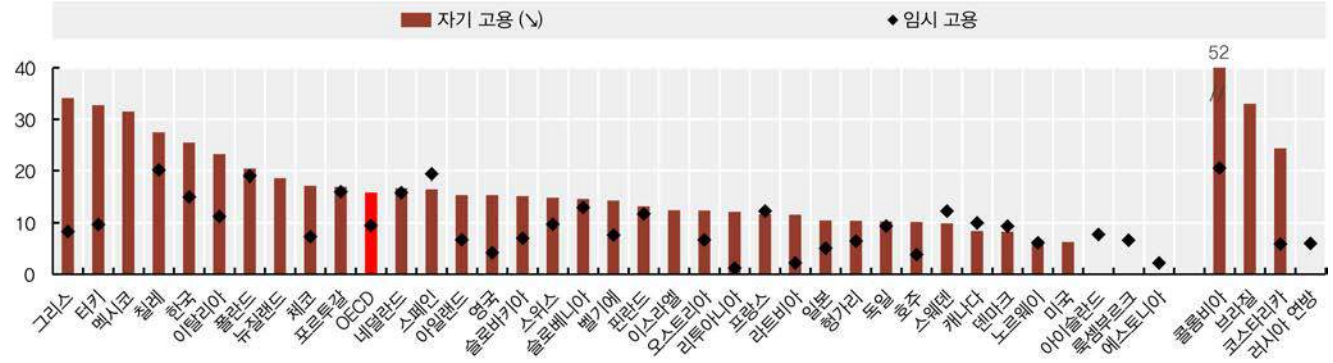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743

5.2. 일부 국가에서 비전형 근로자 비중이 높다

자기 고용 근로자, 전체 근로자 중 비율, 임시 고용 근로자, 부양 근로자 중 비율, 2017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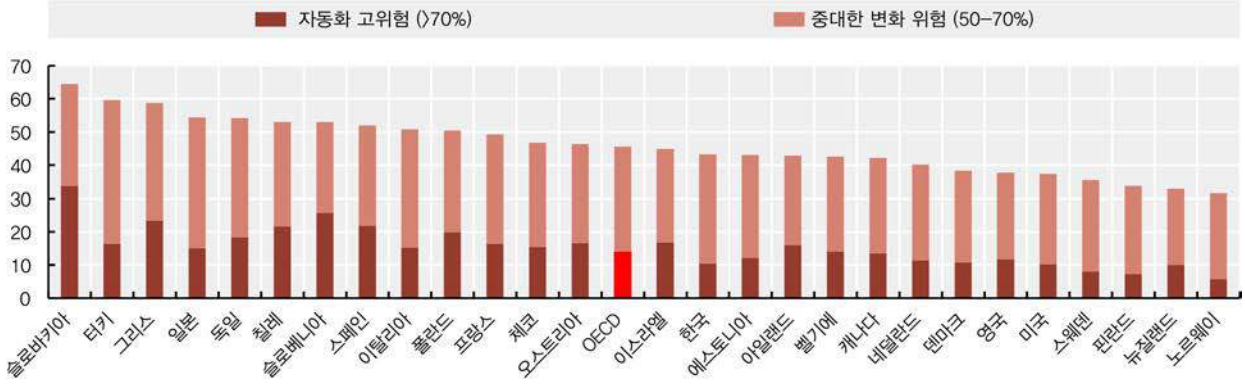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762

5.3. 일자리의 1/3에서 2/3은 자동화 또는 중대한 변화 위험이 있다

자동화 위험 정도별 위험에 처한 일자리 비율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2012); and Nedelkoska, L. and G. Quintini (2018), "Automation, Skill Use and Train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Working Paper No. 202.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781

실업

실업은 가계와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사기를 꺾고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8-09년의 대침체는 OECD 전역에서 기록적인 실업률을 낳았다. 실업률은 많은 국가에서 위기 전 수준보다 낮거나 (이에 근접)하지만, **2017년 OECD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극적 생산연령 인구의 평균 8%는 실업 상태였다.** (그림 5.4).

국가별로 양상은 다양하다. 체코와 일본은 3%로 실업률이 낮은 반면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4% 근방에 몰려 있다. 한편, 실업률은 브라질(13%), 남아공(27%)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남유럽 국가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는 그리스(22%), 스페인(17%), 포르투갈과 이탈리아(11%)이다. 일부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인상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독일과 이스라엘에서 실업률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실업률 하락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인도네시아에서도 두드러졌다.

성별 실업률 차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았으나(3% 포인트 이하), 그리스, 스페인, 터키 및 주요 파트너 국가인 브라질, 코스타리카, 남아공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실업자일 확률이 높았다(3% 포인트 초과). 실업뿐만 아니라 비활동성도 청년을 강타한다. **2017년 고용되지도 않고 교육 또는 훈련 중이지 않은 15-29세의 비중은 OECD 전체 평균 13.4%에 이르렀다**(그림 5.5). NEET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자(실업 NEET)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비활동적 NEET)로 구분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NEET 중 대다수는 직업을 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숙련 기술은 청년들이 실업 및 비활동성에 특히 취약하게 만든다. 중등 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은 대학 수준 학위를 가진 청년보다 NEET가 될 가능성이 3배 높다.

노동 시장 불황의 더 광범위한 기준은 소위 광범위한 노동 저활용이다. 이는 이용 가능한 노동 자원이 활용되지 않거나 (무직) 그들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길 원하고 그럴수 있으나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저활용(불완전 고용)되는 정도를 수량화할 수 있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연령인 평균 4명 중 한 명 이상(26%)이 "저활용" 되고 있다**(그림 5.6). 그 비중은 아이슬란드에서 12%로 가장 낮고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에서 40%를 초과하여 가장 높다. 2007년과 비교하여, 2017년 비율은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4% 높아졌고, 스페인에서 7% 증가하였으며 그리스에서는 11%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체코(-6%), 폴란드(-7%), 독일과 터키(-8%) 및 헝가리와 이스라엘(-10%)에서는 해당 비율이 특히 감소하였다.

정의 및 측정

실업률은 재직 중이거나 실업 상태인 생산연령 인구(15 ~ 64세) 대비 재직 중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하여 취직이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다. 자료는 각 회원국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조사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 기준 주간 중 최소 한 시간도 근로하지 않았으나 현재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며 조사 이전 4주간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신체적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구직의 희망이 없어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용률은 성별에 따라 제시된다.

소위 NEET인구는 고용상태이지 않고 교육 또는 훈련 중이지 않은 청년 인구(15~29세)를 말한다. NEET 비율은 무직 상태(실업 또는 비활동적)를 나타낸다. 자료는 국가 노동력 조사를 기초로 한 OECD 예측치이다.

광범위한 노동 저활용은 15~64세 인구의 비중으로 표현된 15~64세인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무자와 비활동적이고 실업상태인 사람을 더한 무직 및 불완전 고용의 폭넓은 수치이다. 교육 중이며 고용상태가 아닌 청년(15~29)은 분자와 분모에서 제외된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www.oecd.org/employment/ database를 참조한다.

참고문헌

OECD (2018),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8-en.*

OECD (2018),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OECD Jobs Strateg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 10.1787/97892643088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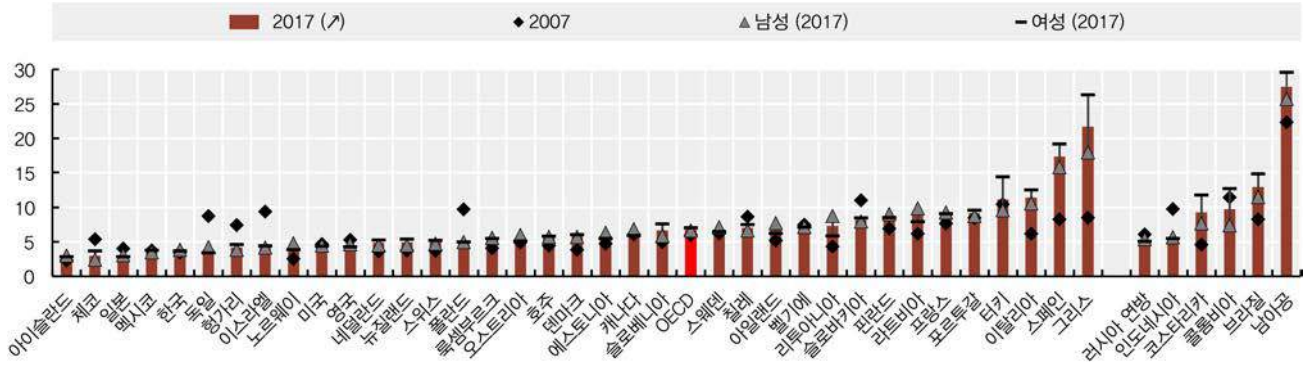
OECD, Investing in Youth Reviews, *www.oecd.org/social/action-plan-youth.htm.*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5: 2017년 자료는 미국은 2016년, 남아공은 2015년, 일본은 2014년 자료이다; 2007 자료는 칠레는 2006년 자료이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러시아, 남아공은 2007년 자료가 없다.

5.4.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은 경제위기 전 수준 이하이거나 이에 근접하다

실업률, 노동력 중 비율 (15–64세), 성별, 2007년 및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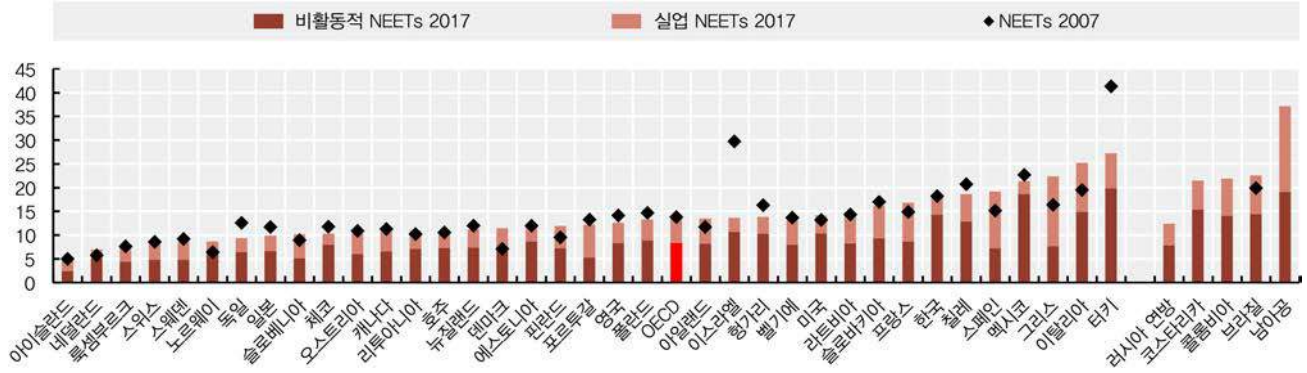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800

5.5. 청년 7명 중 1명 이상이 고용, 교육, 훈련 중에 있지 않다

15–29세 중 NEET의 비율(%), 무직 상태별, 2007년 및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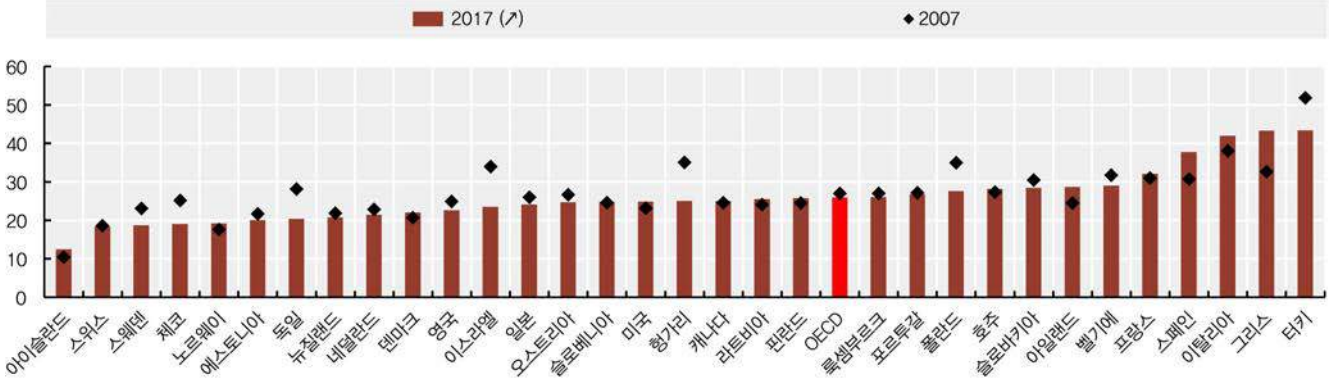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an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819

5.6. 노동력의 1/4 이상이 "저활용"된다

인구 중 비활동적, 실업 또는 비자발적 파트타임 종사자(15~64세)의 비율(%), 교육 중이며 고용되지 않은 청년(15–29세) 제외, 2007년 및 2017년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838

5. 자활 지표

기술

세계화, 기술 진보 및 인구통계 변화는 업무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와 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점점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미래에 근로자가 필요한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 기술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한 결과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5개 이상은 고숙련 직업으로 나타났다(그림 5.7). 이러한 일자리는 관리직부터 헬스케어, 교수 또는 ICT 부분에서의 고숙련 전문직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부족 직업군(OECD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전체 일자리의 약 39%)은 개인 서비스 근로자 또는 전기전자 무역 근로자와 같이 숙련도 중급 직업으로 나타난다. OECD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업 1/10 이하는 숙련도 초급 직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족 직업 집중도는 OECD 내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나라마다 매우 상이하다. 핀란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일자리 9/10 이상이 숙련도 고급 유형이다.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고숙련 전문직 수요가 매우 낮아 부족한 "고숙련" 일자리가 2/10 미만이고 부족한 일자리 중 대부분이 숙련도 중급에서 초급인 직업으로 나타난다.

신흥 메가 트렌드는 점점 특정 유형의 기술에 대한 요구를 재구성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고급 인지 기술에 대한 부족이 증가하고 공급 대비 신체적 역량 및 일상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그림 5.8). 예를 들어, 정보 및 아이디어의 독해, 이해, 처리와 관련된 인지 역량(예. 문서 이해 또는 표현) 또는 특정 문제에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역량(예. 연역적 추리)이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부족분이 증가했던 몇몇 인지 분야 중 하나이다. 전신 체력, 지구력 또는 완력 안전성과 같은 신체적 역량(최근 더 정교해진 기계에 의해 자동화될 위험이 있는 많은 직업에서 주로 사용됨)은 지난 10년 동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 시장에서 역량의 잘못된 할당은 역량 불일치(즉, 근로자가 해당 직업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초과함)를 초래한다. **OECD 평균적으로 근로자의 약 36% 가 역량의 불일치를 보여주며, 역량 미달 및 역량 초과 근로자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각각 19%, 17%에 이른다**(그림 5.9). 이렇게 역량 미달과 초과라는 두 가지 유형의 불일치가 만연하는 상황은, 역량의 불충분한 공급(노동시장의 일부 부문에서 나타나는 자질 부족 초래)과 약한 역량 요구(자질 과잉 현상을 초래)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불일치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한편으로 멕시코와 칠레에서 근로자 2명 중 약 1명은 역량이 불일치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역량이 초과된다. 다른 한편으로 체코에서는 근로자 10명 중 2명 이하가 역량이 불일치하는 데 이 중 오직 8%만이 역량이 초과된다.

정의 및 측정

OECD 직업 기술 데이터베이스(www.oecdskillsforjobsdatabase. org)는 기술을 찾기 어려운 기술(부족) 또는 찾기 쉬운 기술(과잉)로 정의한다.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불균형(부족 및 과잉)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음에 대한 2가지 관련되지만 상이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는 2단계 접근법에 따라 구축된다:

- 기술 부족 및 과잉 – 각각의 기술 측면이 노동 시장에서 찾기 어렵거나 (쉬운) 정도를 측정함.
- 직업 불균형 – 현재 노동 시장에서 기업이 각각의 직업 그룹에서 어떤 일자리를 충원하기 어렵거나 쉬운 정도를 측정함.

직업 부족 지표는 다음 5가지 하위 구성요소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각 국가 내 부족하거나 남는 직업 순위를 정하는 복합 지표이다: 임금 성장, 고용 성장, 근무 시간 증가, 실업률, 자격 미달 변화.

각 직업의 기술 요건에 대한 정보는 800개 이상의 상이한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관한 범주 데이터를 제공하는 O*NET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것이다.

참고문헌

OECD (2018), Skills for Jobs, *www.oecd.org/employment/skills-and- work.htm.*

OECD (2017), *Getting Skills Right: Skills for Jobs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787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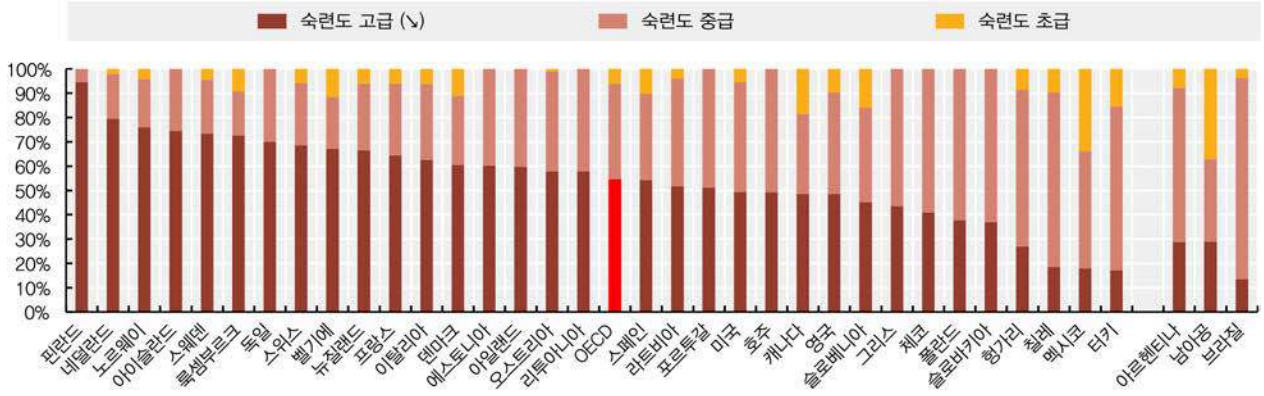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7: 숙련도 고급, 중급, 초급 직업은 각각 ISCO 직업 그룹 1~3, 4~8, 9이다.

그림 5.8: 결과는 최대값이 OECD(31) 국가 전체적으로 관찰되는 가장 강한 부족분 및 기술 측면을 반영하는 규모로 제시된다.

5.7. 인력이 부족한 일자리 5/10 이상은 고숙련 직업으로 나타난다

부족한 고용 비율, 숙련도 수준별, 2015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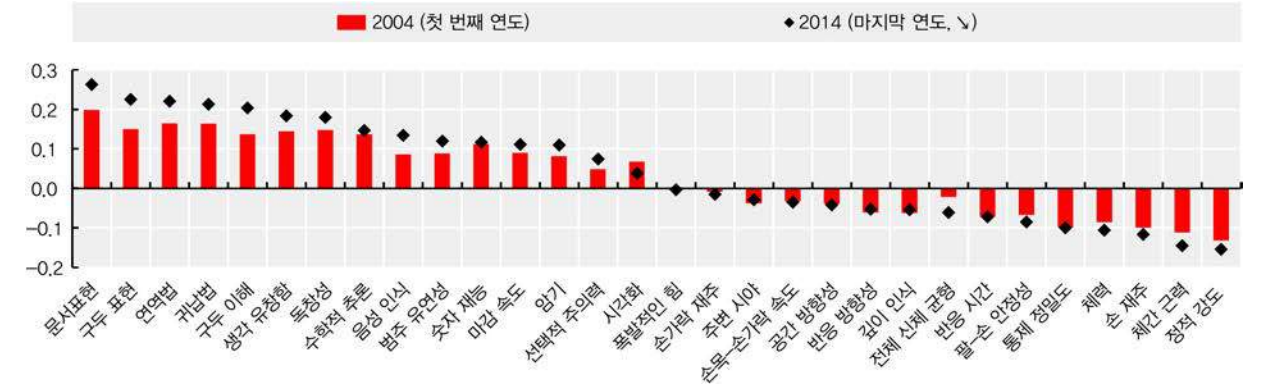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kills for Jobs database (2018), www.oecd.org/employment/skills-and-work.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857

5.8. 고급 인지 기술의 부족 및 일상적인 기술 및 신체 역량의 과잉이 점점 늘어난다

기술 부족 (+) 및 과잉 (–), OECD 평균, 2004년 및 2014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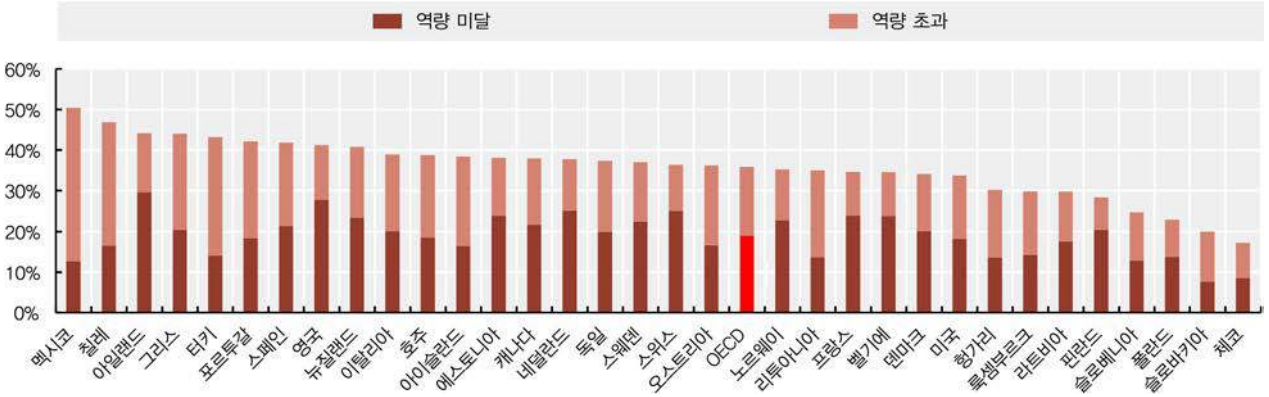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kills for Jobs database (2018), www.oecd.org/employment/skills-and-work.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876

5.9. 약 4/10 근로자가 역량 미달이거나 역량 초과이다

역량 미달이거나 역량 초과인 근로자 비율, 2015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kills for Jobs database (2018), www.oecd.org/employment/skills-and-work.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895

교육비 지출

교육 기관에서 학생당 연간 지출액은 각 학생에게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평균적으로 2015년 OECD 국가에서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학생 한 명당 10,400달러를 지출했다**(그림 5.10). 지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학생 한 명당 22,400달러였으며 미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따랐다. 반대로 멕시코, 터키에서는 지출액이 5,000달러 미만이었다. 비회원국인 브라질과 러시아의 지출액은 교육 지출액이 약 5,000달러인 저지출 OECD 국가보다 약간 높았다. 지출액은 또한 몇몇 동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6,000~9,000달러).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2015년에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초등부터 고등 수준까지 교육기관에 GDP의 5%를 지출했다. 아일랜드는 3.5%를 노르웨이는 6.4%를 지출했다.

2010~2015년에 초등부터 고등 수준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총 지출액이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전역에서 4%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GDP 대비 교육 기관에 대한 공공 지출이 더 천천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그림 5.11).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28개 국가 중 20개 국가에서 지출액이 감소하였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2015년 GDP의 개정으로 인해),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는 가장 큰 부정적 변화를 나타낸 반면 슬로바키아는 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 가장 큰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 면밀히 살펴보면 고등 수준에서는 지출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비고등 수준에서는 6% 이상 감소하였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조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덜 이루어졌다. 유아 및 초등 수준에서 아동 한 명당 지출액은 약 8,500달러였으며 "학사, 석사, 박사" 수준에서는 거의 두 배에 이른다(그림 5.12). 이러한 평균 수치는 국가별 폭넓은 차이를 가린다. 취학 전 교육에서 아동별 지출액은 멕시코 2,700달러에서 룩셈부르크 20,500 달러로 거의 8배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교육에 대한 투자는 형평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 전 교육 및 취약 아동에게 특히 더 많은 자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조치에 관한 OECD 프레임워크(OECD's Framework for Policy Action for Inclusive Growth)"의 주요 권고사항이며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직업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이는 취약 청소년에게 특히 그러하다. 평균적으로 국가들은 후기 중등 교육의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 직업 프로그램에 학생당 거의 2,000달러를 더 많이 지출한다. 이러한 차이는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이중 시스템 견습생 프로그램에 등록수가 높은 국가에서 더 크다. 동시에 호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영국은 일반적인 후기 중등 프로그램보다 직업 교육에 학생당 비용을 더 적게 지출한다.

정의 및 측정

아동별 교육 지출액 자료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총 연지출액을(연구 개발 활동 포함) 해당 전일제 등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림은 공공 지출액과 민간 지출액을 합한 것이며 2015년부터 GDP 구매력 평가에 기초하여 미국 달러로 보고된 것이다. GDP 중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추이는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기인하거나 발생된 지출을 말한다.

교육의 수준은 6개 수준으로 구분한 국제 표준 교육 분류(ISCED 2011)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취학 전(ISCED-0), 초등(ISCED-1), 전기 중등(ISCED-2), 후기 중등(ISCED-3), 중등 후 비 고등(ISCED-4), 단기 고등(ISCED-5), 학사, 석사, 박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ISCED 6-7-8).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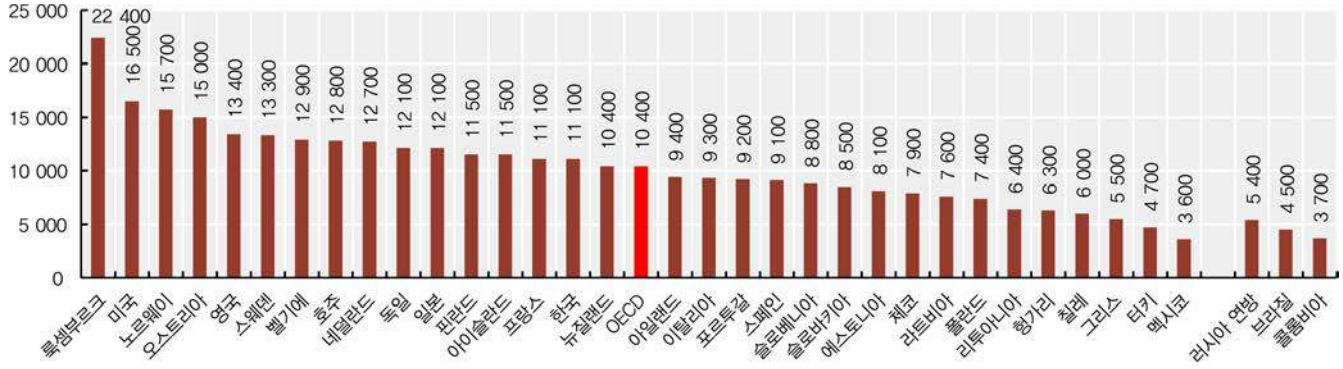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eag-2018-en*.
OECD Child Well Being portal, *http://oe.cd/child-well-being*.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10 및 그림 5.11: 칠레와 콜롬비아는 2016년 자료이다. 캐나다의 경우 초등 교육은 초등 전 교육 및 전기 중등 교육을 포함한다.

5.10. OECD 내 학생당 교육비 지출 차이

초등부터 고등 교육까지 전일제 학생당 교육 기관 연 지출액, GDP 구매력 평가를 이용하여 전환된 미국 달러,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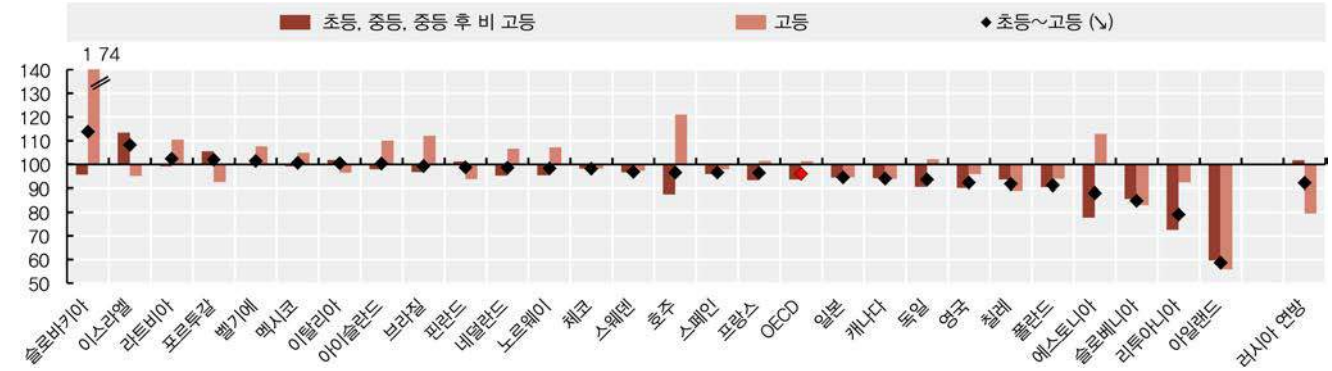


출처: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 Indicator C1 - http://dx.doi.org/10.1787/eag-2018-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914

5.11. 2010년 ~ 2015년 GDP 중 총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감소

GDP중 교육기관 총 지출액 비율 변화, 2015년, 교육 수준별, 2010년에 인덱스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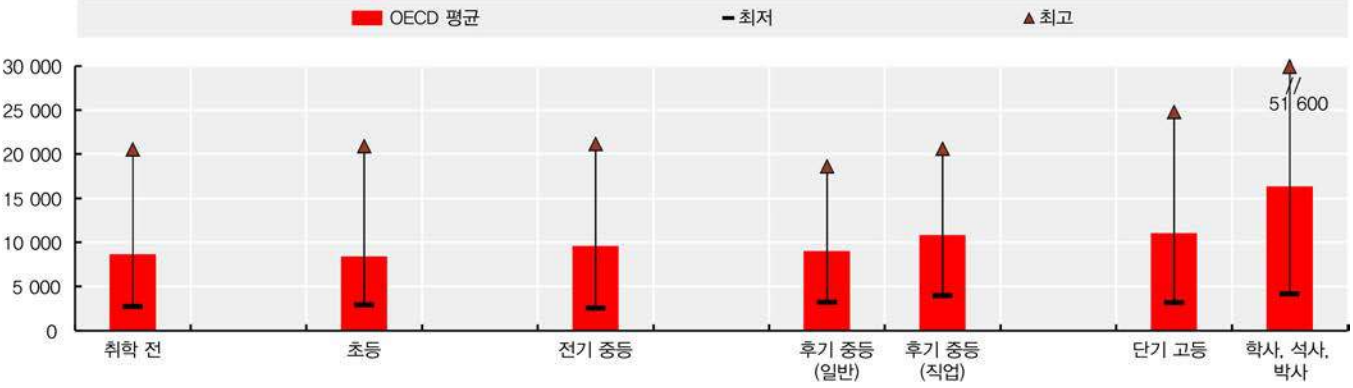


출처: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 Indicator C2 - http://dx.doi.org/10.1787/eag-2018-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933

5.12. 아동별 지출이 교육 수준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 수준별 전일제 학생당 교육 기관 총 지출액, GDP 구매력 평가를 이용하여 전환된 미국 달러, 2015년



출처: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 Indicator C1 and B2.3 - http://dx.doi.org/10.1787/eag-2018-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952

5. 자활 지표

은퇴 후 기대 여명

은퇴 후 기대 여명 지표는 노동시장 은퇴 연령 이후 남아 있는 기대여명의 평균 연도를 설명한다. 해당 지표는 연금 제도가 노동 시장 은퇴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고령화 인구의 맥락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력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은퇴 후 각각 17.8년과 22.5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5.13). 가장 최근의 계산치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 남성의 은퇴 후 기대여명은 20년을 초과한다(그림 5.13, 패널 A). 그리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 여성의 은퇴 후 기대여명은 25년을 초과한다(그림 5.13, 패널 B). 한국과 멕시코에서 남성의 은퇴 후 기대 여명 수는 14년 미만으로 매우 작았고 한국, 멕시코, 터키에서 여성은 20년 미만이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후 거의 5년 이상 더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와 같이 동유럽 및 남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차이는 최소 6년이었다. 은퇴 후 더 길어진 기간은 여성을 고령 빈곤에 처하게 하며 이는 연금 지불금의 가격 연동제가 성별 지급 격차를 확대하는 국가에서 특히 심하다.

신흥국에서 여성의 은퇴 후 기대 여명은 코스타리카의 25년에서 남아공의 18년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는 은퇴 후 13~15년의 여명을 기대할 수 있는 남성에게 덜 하다. 코스타리카에서 노동 인력 은퇴 유효 연령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9년 이상 작은 반면 남아공에서의 차이는 1~2년이었다.

OECD 국가 전체에서 은퇴 후 평균 기대 여명 년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 왔다. **1970년에 OECD 국가에서 남성은 평균적으로 은퇴 후 10년을 보냈으며 2017년에 이 수치는 18년으로 증가하였다**(그림 5.14, 패널 A). 은퇴 후 기대 여명 증가는 여성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970년 평균 14년에서 2017년 22년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5.14, 패널 B).

1970년에서 2017년까지 은퇴 후 기대 여명의 증가는 노동 인력으로부터 실제 은퇴 연령의 하락과 증가된 수명 때문이다. 1970년부터 1990년대말까지 남성 및 여성의 노동 인력 은퇴 유효 연령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몇 년을 보낸 후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2000년대 초부터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7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해 이 연령은 2년 증가했다.

노동 인력 유효 은퇴 연령으로부터의 기대여명 년수는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 있어 특히 두드러졌으며 최근 20년 동안 남성에게도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효 은퇴 연령 이후의 기대여명 증가는 노동 시장의 유효 은퇴 연령의 증가와 꽤 근접해졌으며 은퇴 후 가능 연도가 안정화되었다.

정의 및 측정

은퇴 후 기대 여명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 인력 실제 은퇴 연령 시기 이후 남아 있는 기대 여명을 계산한 것이다.

노동인력은퇴 평균유효연령은 처음에 4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5년 동안 다른 연령의 노동 시장으로부터 (순) 은퇴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 해당 인구의 연령 구조에서 구성적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노동인력은퇴는 노동인력수준보다는 노동인력참여율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5년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진 각 (합성) 그룹에 대해 계산된다. 더 자세한 논의는 OECD (2017)을 참조한다.

추가 수명 연도 수 예측치는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년 개정 데이터셋)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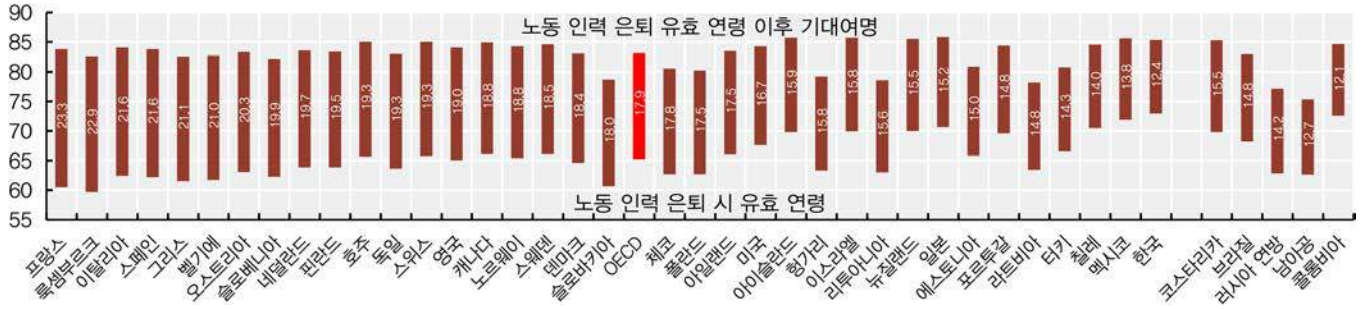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pension_glance- *2017-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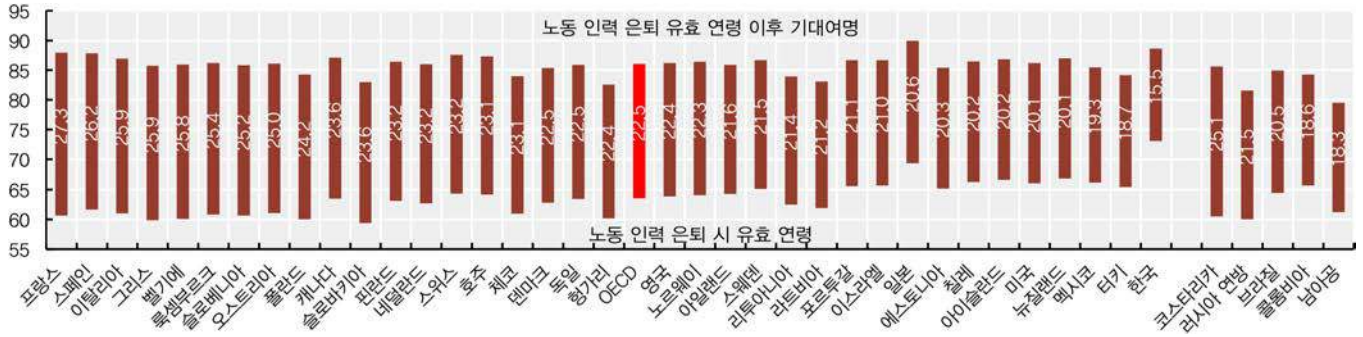
그림 5.14: OECD는 36 개 OECD 국가의 비가중 평균을 말한다; 1970-95 자료는 28개 국가의 자료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정보는 1970년부터 이용할 수 없다.

5.13. 여성은 남성보다 은퇴 후 거의 5년 이상을 더 보낸다

패널 A. 2017년 남성의 은퇴 후 기대 여명



패널 B. 2017년 여성의 은퇴 후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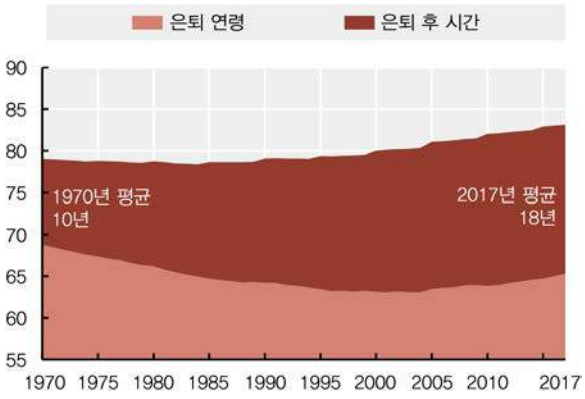
출처: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pension_giance-2017-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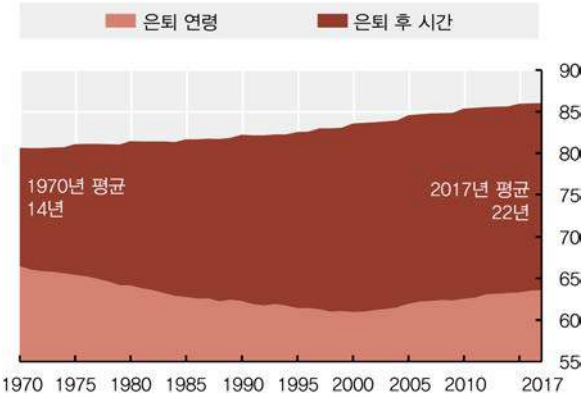
5.14. 남성과 여성은 1970년보다 2017년에 은퇴 후 7.5년 이상을 더 보낸다

노동 시장 은퇴 시 연령 및 은퇴 후 시간의 추세, 1970 ~ 2017, OECD 평균

패널 A. 남성



패널 B. 여성



출처: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8990

6. 형평성 지표

불평등
빈곤
비경제활동 급여
사회 지출
구매 가능한 주택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불평등

소득과 자산과 같은 성과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과 함께 간다. 이는 주로 높은 불평등이 빈곤층 및 열악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이동성 및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16년 지니계수는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0.25부터 거의 그 두 배에 달하는 칠레와 멕시코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그림 6.1). 북유럽 및 일부 중부 유럽 국가는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낮은 반면, 남아메리카 국가, 터키와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의 대안적 지표를 보아도 순위는 비슷하다. 인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소득 격차는 2016년 OECD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9.3대 1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체코, 슬로베니아의 5.2대 1부터 칠레와 멕시코의 20대 1까지(4배 이상) 분포했다. 지난 30년 동안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넓어졌다. OECD 평균 수준이 0.32로 해당 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3포인트 증가하였다.

신흥 경제국은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았으며 중국과 남아공이 특히 심했다. 불평등은 많은 신흥 경제국에서 증가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안정화 신호가 보였고 브라질과 몇몇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자산 분포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79%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6.2). 비교하자면 상위 10% 소득자는 전체 현금 소득의 1/4(24%) 정도를 평균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슬로바키아 20%에서 칠레 36%까지 분포한다. 검토한 모든 국가에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았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해서 자산 집중도가 꼭 낮은 것은 아닌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가 그런 경우이다.

점점 더 커지는 성과 불평등 수준은 소득과 사회 이동성의 장애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소득 분포 하위 10% 가정의 자녀가 평균 소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4~5세대가 걸릴 수 있다**(그림 6.3). 북유럽 국가와 같이 불평등 수준이 낮고 이동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해당 사회의 평균 소득에 근접하기 위해 2~3세대(50~100년)가 소요된다. 신흥국인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공과 같이 불평등 수준이 높고 이동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이동성의 확률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이동은 9세대 이상이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지속성이 가장 강한데,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년이 걸린다.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는 4개의 주요 영역에 집중된 종합 정책 패키지를 채택해야 한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촉진; 고용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양성; 양질의 교육 및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노동 생활 동안 적응;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해 조세 및 수당 시스템 설계 개선. OECD의 포용 성장 계획은 모든 측면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약술한다.

정의 및 측정

소득 분포에 사용된 주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 상태(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인 0부터 "완전한 불평등" 상태(모든 소득이 인구 중 최고 소득층에게 집중)인 1 사이에 분포한다. 지니계수는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 소득(세금 및 사회적 이전 후 소득, 가구 소득을 가구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점수로 상이한 크기의 가구의 필요성의 차이로 조정됨)에 기반하고 있다. 대안적 지표는 S90/S10 소득 십분위 비율로 인구 중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소득 격차를 보여주며, 역시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 자료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을 출처로 한다.

자산 자료는 순 민간가계자산, 즉 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특정 시점의 전체 부채 가치를 뺀 것으로 여기에서는 2015년 전후가 기준이다. 자료는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을 출처로 한다.

세대의 예측 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득 지속성(탄력성) 및 하위 10%와 평균 가구 소득의 현재 수준을 기초로 하며 Bowles and Gintis (2002)에 따라 일정한 탄력성을 가정으로 한다. 저소득 가정은 첫 번째 소득 십분위(인구의 하위 10%)로 정의한다. 이러한 예측치는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하며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저소득 가정 사람이 평균 소득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Balestra, C. and R. Tonkin (2018),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8/0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e1bf673-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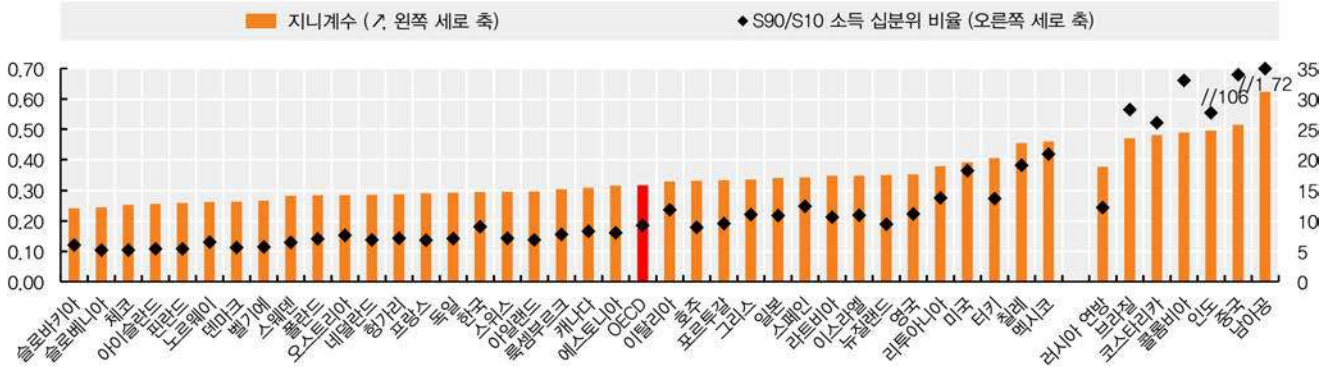
그림 6.1: 코스타리카(2017);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스위스, 터키(2015);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2014); 브라질(2013); 중국, 인도, 러시아(2011) 그 외 모든 국가는 2016년 자료이다. 콜롬비아 자료는 임시 자료이며 가처분 소득은 근로자 사회보장 기여금 후 소득이지만 개인 소득세 후 소득은 아니다.

그림 6.2: 자료는 자산의 경우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비중을, 소득의 경우 상위 10% 개인이 보유한 비중을 말한다.

그림 6.3: 상기 "정의 및 측정" 참고.

6.1. OECD 전역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 차이가 크다

가구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및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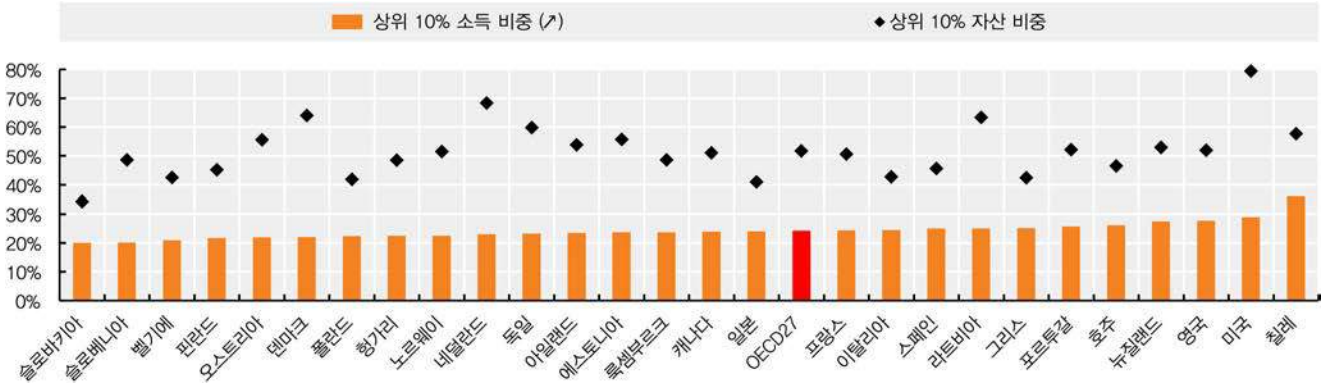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009

6.2. 소득보다 자산이 상층부에 더 집중되어 있다

가구 가처분 소득 상위 10%와 가구 순자산 상위 10%의 비율, 2015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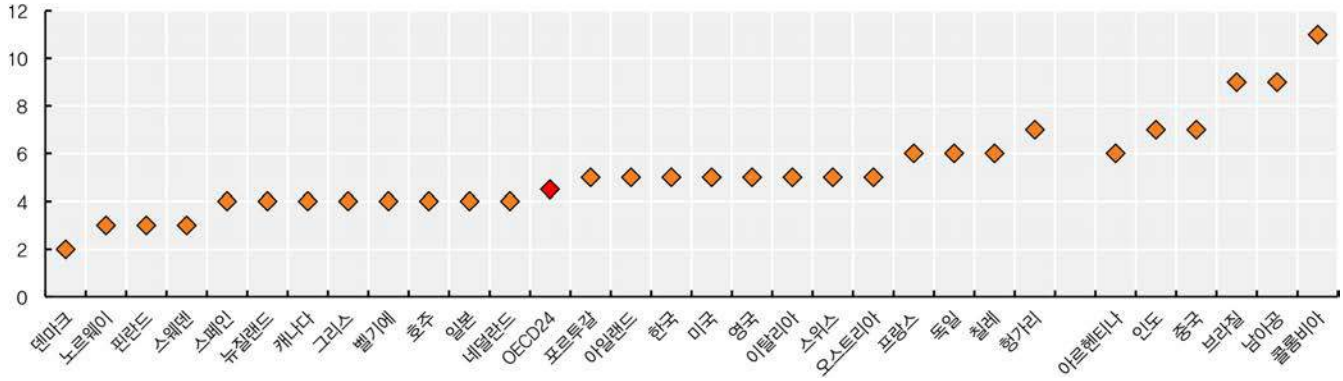


출처: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028

6.3. 세대간 이동성의 현재 수준에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평균 소득에 도달하려면 평균 4~5세대가 소요된다

하위 10% 가정의 자녀가 사회의 평균 소득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상 세대 수



출처: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 Figure 1.5.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047

6. 형평성 지표

빈곤

소득 빈곤율은 소득 분포 하단에 위치한 이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사회의 평등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불우한 이들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빈곤 지표는 소득 불평등 지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인과 아동 등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나 기회가 제한된 특정 집단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진다.

2016년 OECD 평균 상대적 빈곤율(해당 국가에서 중위 가처분 소득 절반 미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비율)은 11.7%였다(그림 6.4). 빈곤율은 이스라엘, 미국에서 약 18%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인구의 5-6%에 불과했다. 지중해 국가, 남아메리카 국가, 발트해 국가에서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흥 경제국도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빈곤 수준이 더 높다. 특히 중국과 남아공의 경우가 그러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여성의 평균 빈곤율은 12.3%이고 남성은 10.9%이다. 여성은 모든 OECD 국가 및 주요 파트너국에서 남성보다 빈곤 위험이 더 높다. 단,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는 예외이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한국에서 가장 큰 성별 빈곤 격차가 관찰되는 데 이곳에서 여성 빈곤율은 남성보다 4~6% 더 높다.

상대적 소득 빈곤의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제한적이었다. 2007년과 2016년 사이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에서만 빈곤율이 3%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그림6.5의 막대). 같은 기간 동안 호주와 핀란드에서는 빈곤율이 떨어졌으며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빈곤율 변화가 2% 포인트 미만이었다. **2005년 관찰된 중위 실제 소득의 절반에 "고정된" 기준선 대비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를 이용함으로써 (즉, 2005년 빈곤선 값을 일정하게 유지) 소득 빈곤의 최근 증가분은 "상대적" 소득 빈곤에 따라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특히 적절하다(그림 6.5의 "기호"). 2007년과 2016년 사이 이러한 국가에서 상대적 빈곤은 많이 증가하지 않거나 떨어지기까지 했으나 "고정된" 빈곤은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러한 국가에서 더 빈곤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 손실을 나타낸다. 오직 칠레에서만 "고정된" 빈곤이 7% 포인트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더 빈곤한 가구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함을 나타낸다.

상대적 빈곤율은 또한 연령 그룹별로 다르다. 국가 평균적으로 빈곤율은 성인에서 10%로 더 낮으며, 아동은 13%, 청년과 노인은 거의 14%로 더 높다. 아동 빈곤율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낮지만 칠레,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미국에서는 가장 높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 5명 중 한 명 이상이 소득 빈곤층이다. 청년 빈곤율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청년이 부모의 집을 일찍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된다. 그러나 빈곤율은 경제 위기 동안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던 스페인에서도 높았다. 몇몇 국가에서 매우 높은 노인 빈곤율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종종 연금 제도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은 최근 연금 제도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한국에서 가장 높았다. 호주와 스위스에서 노인 빈곤율은 많은 연금 수령자가 축적된 연금을 소득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연금식보다는 일시불(현재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음)로 받는다는 사실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멕시코에서 노인의 안전망 혜택의 수준은 매우 낮다.

정의 및 측정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빈곤 측정 역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개념에서 출발한다("가구 소득" 또는 "소득 불평등" 지표의 "정의와 측정" 참고). 빈곤율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의 수이다. 개인의 균등화 가처분 가구 소득이 해당국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그 사람은 빈곤한 자로 분류된다. 상대적 소득 기준의 사용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빈곤 기준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빈곤 기준선이 높다는 것은 빈곤을 피하는 것이 해당국에서 일반적이거나 표준으로 간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역량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포착한다. 연령 그룹별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중위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현재 중위 소득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의 변화는 경기 침체기에는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류층보다 하류층의 소득이 덜 하락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소득 빈곤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거 생활 수준과 연계된 "절대적"인 빈곤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빈곤의 변화는 2005년 관찰된 중위 실질 수준의 절반에 "고정"된 기준 대비 빈곤을 측정한 지표를 이용하여 그림 6.5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idd)을 출처로 한다.

참고문헌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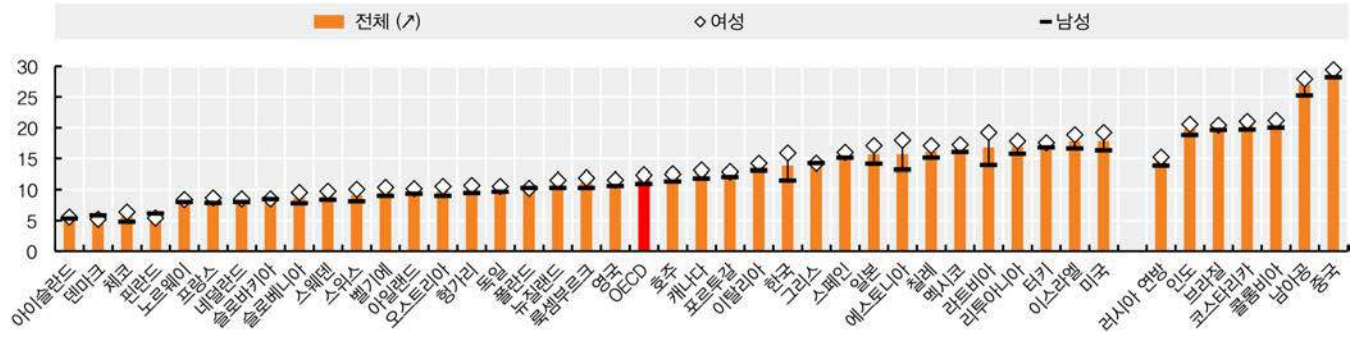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4 및 그림 6.6: 2016년 대신: 코스타리카는 2017년,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스위스, 터키, 남아공은 2015년;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는 2014년; 브라질은 2013년; 중국, 인도는 2011년이다.

그림 6.5: 빈곤율은 2005년 대신 칠레, 일본, 한국, 터키는 2006년에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2007년에 고정되어 있다.

6.4. OECD 전체에서 상대적 빈곤 수준의 차이가 크다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성별,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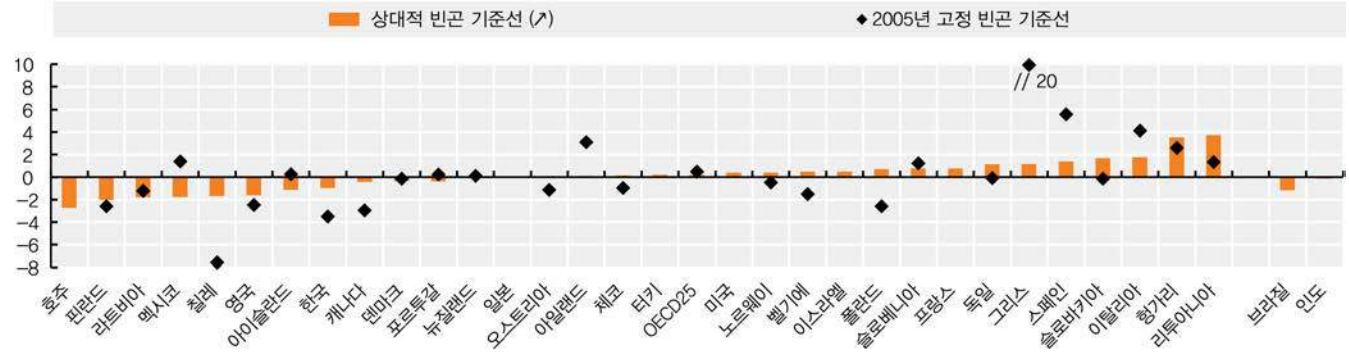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066

6.5. 기준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빈곤의 변화가 달라진다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상대적 빈곤율과 "고정" 빈곤율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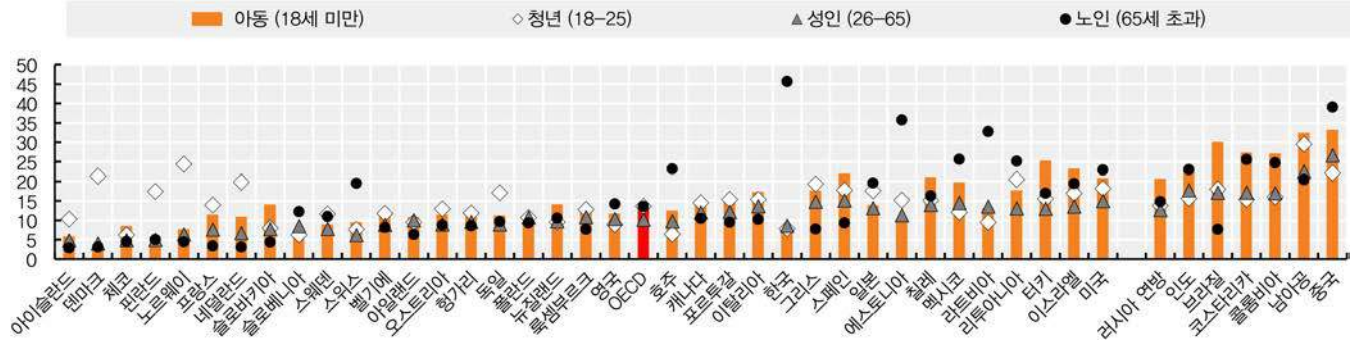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085

6.6. 빈곤율은 아동, 청년, 노인층이 가장 높았고 성인이 가장 낮았다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비율, 연령 그룹별,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104

비경제활동 급여

생산연령 인구에 대한 현금 급여는 실업인 경우 주된 소득 안전망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원의 두 개 층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차적 실업 보험 급여와 보험 급여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이들에 대한 이차적 급여(실업 지원 또는 최저 생계 지원금 등)가 그것이다. 이러한 최저 생계 지원금(guaranteed minimum-income benefits, GMI)은 수용 가능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장기간 실업상태인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2016년 비경제활동 급여(Out-of-work Benefits, Unemployment Benefits(실업급여)보다 넓은 의미)를 수령한 생산연령 수급자의 비율은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에서 1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6.7). 반면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터키에서는 생산연령 인구의 4% 미만이 이러한 지급금 중 최소 한 개를 수령했다. 이러한 수령자 수의 차이는 고용률 차이 뿐만 아니라 급여 자격 규칙상 차이를 반영한다. 수급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는 GMI를 수령하는 자격이 저소득 근로 가정까지 확대된다. 일부 국가에서는(프랑스, 아일랜드 포함) 특정 조건 하에 근로 소득이 실업 보험금과 결합될 수 있다.

2016년 OECD에서 평균적으로 생산연령 인구의 5.8%가 비경제활동 급여를 수령했다. 해당 비율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위기 전 수준보다 여전히 높았다. 특히 2016년 실업률이 여전히 상승했던 국가들(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스페인 포함) 및 자산 조사 급여의 수령자 수가 더 만은 국가들(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에서 그러했다. 그 외 다른 국가(체고, 헝가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에서는 급여 수령 수준이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은 자격 조건을 강화시켰던 정책 변화 또는 더 적은 사람이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게 만든 실업자의 구성에 대한 변화로 인해 실업자들 사이에 급여 보장 범위가 감소한 것을 나타낸다 (OECD, 2018[1]).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일차적 실업 보험 급여의 수준은 GMI 급여 수준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다(그림 6.8). **OECD 평균적으로 자녀가 없고 평균 임금 수준으로 이전 소득을 가진 독신에게 근로 순소득의 58%가 실업 기간의 초기 단계에 유지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장기적으로 실업자가 된 경우 31%까지 떨어진다.**

GMI 급여는 종종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빈곤 기준선보다 상당히 더 낮다(그림 6.9).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 자녀가 없고 비경제활동 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독신은 현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터키는 GMI 급여가 없고 미국에서는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푸드 스탬프" 형식을 취한다. 임대 숙박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임대료 수당과 같이 주택 관련 급여는 전체적인 소득을 빈곤선에 가깝거나 이에 상회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영국).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GMI 급여는 단독으로 빈곤을 피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러한 경우 가족 수입은 주택 및 가족 구성의 유형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정의 및 측정

그림 6.7은 생산연령 인구 중 수령자 수의 비중을 보여준다. 가족 단위로 제공되는 급여(예. 사회적 지원)는 가족당 한 번만 계산된다. 자료는 OECD Social Benefit Recipients Database (SOCR)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40개 EU 및 OECD 국가의 모든 주요 소득 대체 급여를 포괄한다. 각국에서 만든 자료에 따라 SOCR은 취급 건수, 흐름, 평균 급여액을 포함하며 현재 8년(2007~2014)을 대상으로 한다. 일차적 비경제활동 급여는 실업 초기 단계에 일반적으로 수급하는 급여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 보험). 실업 보험이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대신 자산조사에 근거한 실업 지원을 일차적 급여로 운영한다.

순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 NRR)은 실업 시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부분을 측정한다. 이는 실업시 순소득을 근로 시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여기서 제시되는 NRR은 평균 임금 100%를 버는 자녀 없는 40세 독신에 해당한다. 실업의 초기 단계는 대기 기간 후 급여의 두 번째 달을 말하며 장기간 실업은 급여 수령의 60번째 달을 말한다. 가족 소득은 OECD 조세-급여 모델(Tax-Benefit Model)을 이용하여 가정한다 (www.oecd.org/social/benefits-and-uages.htm).

국가의 사회 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중위 가구 소득의 50% 또는 60%인 상대적 빈곤 기준선 대비 순 최소 현금 소득 급여액(주택 지원 포함)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수준은 생산연령 세대주가 있고, 다른 소득 출처가 없으며, 실업 보험과 같은 일차적 급여의 자격이 없는 가족의 모든 현금 급여 자격을 설명한다. 이는 소득세와 사회 기여금이 제외된 금액이다. 중위 가처분 소득(주택비용 이전)은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www.oecd.org/ social/ 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자료이다.

참고문헌

Immervoll, H. and C. Knotz (2018), "How demanding are activation requirements for jobseeke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1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bdfecc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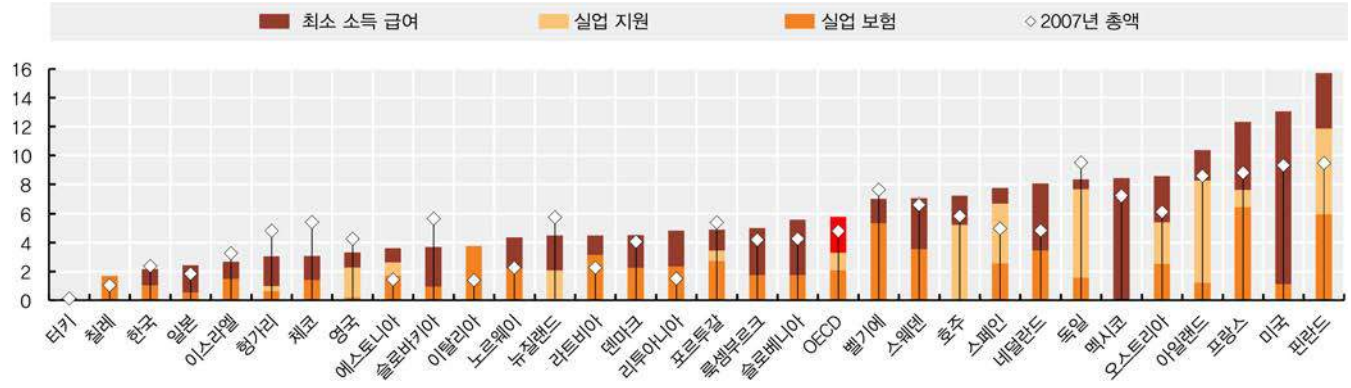
OECD (2018), "Unemployment-benefit coverage: Recent trends and their drivers",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mpl_outlook-2018-9-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7: 그리스는 수령자 건수가 없거나 불완전하다. 비교 가능성 이유로 캐나다, 아이슬란드, 폴란드,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그림 6.8 및 그림 6.9: 칠레와 멕시코 자료는 없다.

6.7. 2007년 이후 OECD 대부분 국가에서 비경제활동 급여 수령자가 증가

생산연령 인구 중 생산연령 현금 이전 비율, 2016년 급여 유형별 분석, 2007년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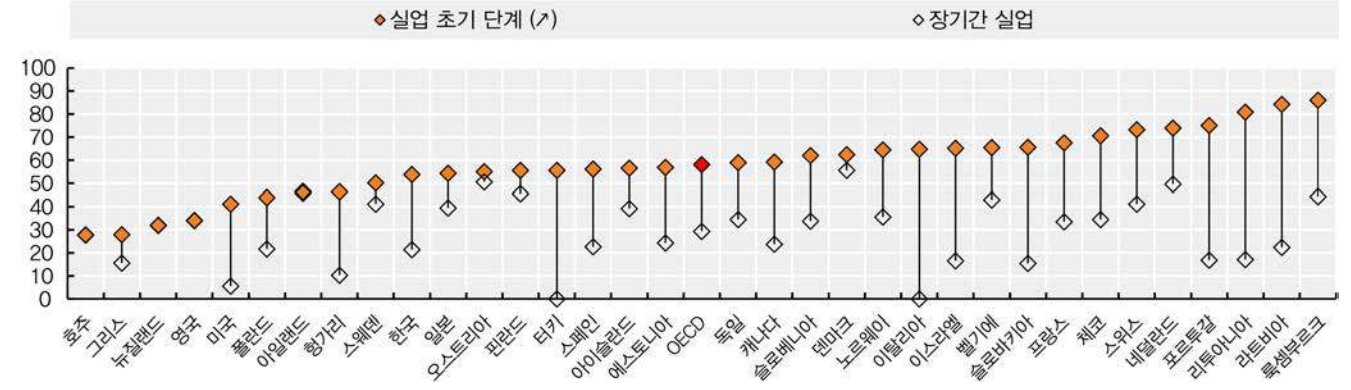


출처: OECD Benefit Recipients Database (SOCR), www.oecd.org/social/recipients.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123

6.8.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 실업상태인 사람들의 급여 소득이 상당히 감소

실업 중 순소득 대비 근로시 순소득의 비율 (NRR), 40세 독신, 2018년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142

6.9. 최소 소득 급여만으로 소득 빈곤을 방지할 수 없다

현금 최소 소득 급여(minimum–income benefit – MIB)에 의해 제공되는 순소득 수준, 독신, 주택 급여(housing benefit – HB) 유무, 중위 가구 소득 중 비율, 2018년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161

2018년 36개 OECD 국가에서 공공 사회 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20% 이상이었다(그림 6.10).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은 프랑스가 GDP의 30%로 가장 높았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GDP의 1/4 이상을 공공 사회 지출에 배정했다. 비율이 낮은 국가는 칠레, 한국, 멕시코, 터키와 같은 비유럽 국가로 공공 사회 지원에 GDP의 13% 미만을 지출했다. 2010년대 초반 신흥국의 사회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인도의 3%부터 브라질 17%까지 분포한다.

경제 대침체 기간 동안 공공 사회 지출은 OECD 평균 GDP의 22%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9년 이후 지출액은 조금씩 감소해 왔다. 그림 6.10은 사회 보호 시스템이 종합적인 복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지만 1990년 이후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은 한국과 터키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OECD 국가 중 몇몇 국가에서(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은 1990년과 같거나 더 낮아졌다. 네덜란드는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이다: 2006년 헬스케어 개혁으로 인해 공공 지출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이후 강제적인 기본 건강 보험이 민간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다.

OECD 평균적으로 연금 및 보건 서비스는 전체 지출액의 2/3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은 가장 큰 지출 분야이다(그림 6.11). 영어 사용 국가 및 유럽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은 공공 사회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 소수의 국가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생산연령 인구의 소득 지원에 사용된다.

세금 및 민간사회급여의 효과를 고려하면 국가 간에 GDP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수렴한다(그림 6.11). 총 순 사회지출은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GDP의 20~27% 수준이다. 미국은 GDP의 30%로 더 높은데, 미국의 경우 민간사회지출액과 세금 인센티브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크다. 해당 수치는 프랑스에서 GDP의 32%로 여전히 가장 높다.

현금 사회 급여는 항상 최빈곤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016년 평균적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수급한 공공 현금 이전의 23%만 소득 분배의 하위 20% 가정에 지급되었으며 19%는 소득 분배의 상위 20% 가정에 지급되었다(그림 6.12). 이러한 비중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한편으로 다양한 소득 조사 급여를 가진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현금 급여의 40% 이상이 최빈곤층 20%에 지급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중해 유럽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와 룩셈부르크와 같이 대부분의 급여가 과거 소득과 관련된 사회 보험 측면이 강한 국가에서는 현금 급여의 15% 미만이 최빈곤층 20%에 지급된다.

정의 및 측정

일반정부부문(일반정부 부문: 정부부문을 고유의 정부 활동과 정부가 행하는 기업적 활동으로 대별할 때의 전자)이 재정 흐름을 통제할 경우 사회 지출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강제적 기여로 재정이 충당되는 질병 수당은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질병 수당은 "사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림 6.10에 나타난 지출은 해당 급여에 부과된 직간접세를 차감하기 전 그리고 사회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지출을 더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조세 제도(전체 순 사회지출)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지출의 영향을 고려한 자료는 그림 6.11에 나와 있다. 일부 연방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공공사회지출 합계는 1980-2015/17년의 상세한 사회지출 자료를 반영한다. 이러한 과거의 시리즈에 맞춰 공공사회지출 합계는 2016, 2017년에 산출되었고 2018년은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최빈곤층 20%"와 "최부유층 20%"는 소득 분배의 하위 및 상위 1/5에서 생산연령 가구가 수급한 공공 현금 이전의 비율을 말한다. 자료 출처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이다.

참고문헌

OECD (2019), Social Expenditure Update 2019, Public Social Spending is High in Many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oe.cd/socx*.

OECD (2017),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mployment/future-of-work*.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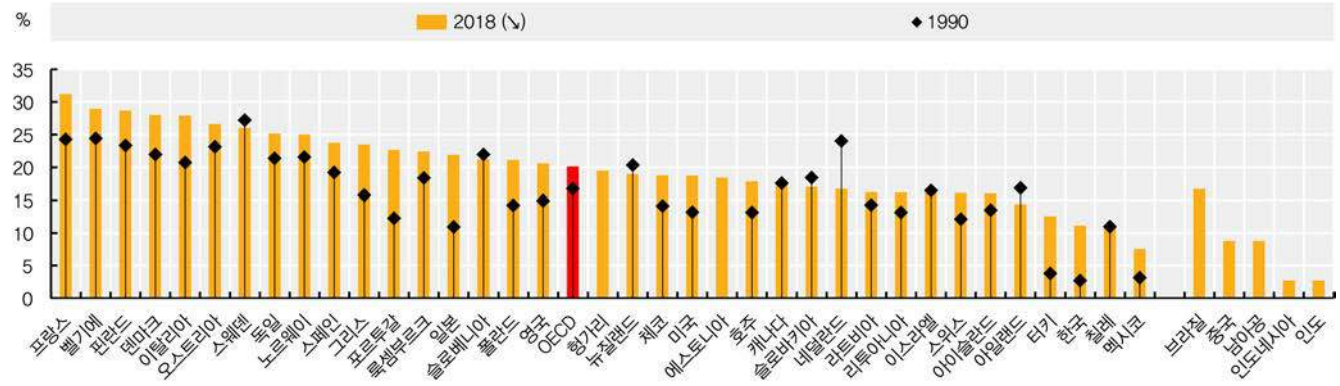
그림 6.10: 2018년 대신,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은 2017년 자료이며, 호주, 멕시코, 터키는 2016년 자료, 일본은 2015년 자료이다. 1990년 대신 칠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는 1995년 자료이며, 슬로베니아는 1996년 자료, 라트비아는 1997년 자료이다. 비 OECD 국가(오른쪽) 예측치는 동일한 방법론을 따르지 않아 해당 자료는 OECD 국가와 완전히 비교 가능하지 않다.

그림 6.11: 칠레, 이스라엘, 한국은 2017년 자료이며,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터키는 2016년 자료이며, 폴란드는 2014년 자료이다. 그 외 국가는2015년 자료이다. 생산연령 인구에의 소득 지원은 다음과 같은 SOCX 현금 범주(무능력 급여, 가족 현금 급여, 실업 및 기타 사회 정책 분야 범주)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기타 사회 서비스는 노인, 유족, 장애인, 가족, 주택을 위한 서비스 및 기타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총 순사회지출 자료는 라트비아에는 없으며 폴란드는 2013년 자료이다.

그림 6.12: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스위스, 터키는 2015년 자료이며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는 2014년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2016년 자료이다.

6.10. 공공사회지출액은 OECD 국가에서 평균 GDP의 20%를 초과한다

GDP에서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1990년 및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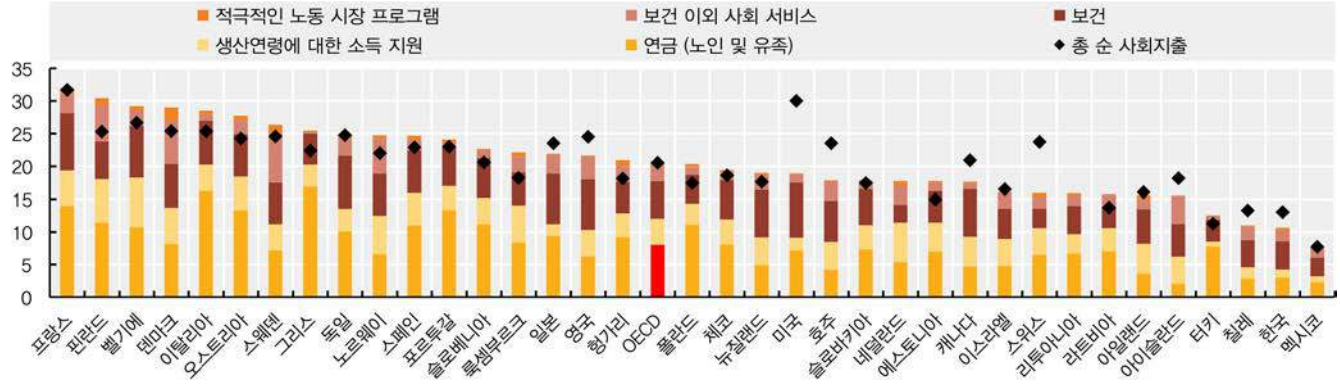


출처: OECD (201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oe.cd/socx and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9, OECD Publishing, Paris.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180

6.11. 대부분의 지출은 연금과 보건에 사용된다

정책 분야별 공공사회지출 및 총 순 사회지출, 2015/17, GDP 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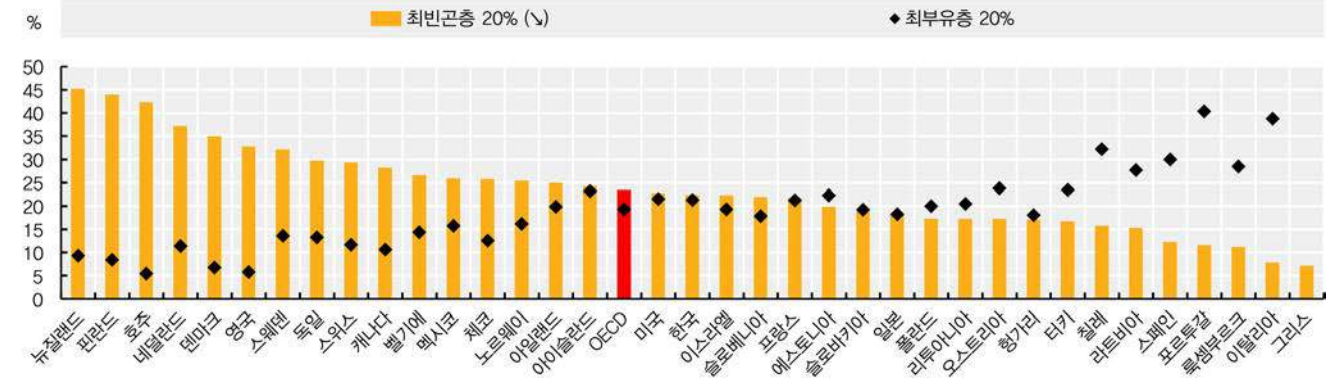


출처: OECD (201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oe.cd/socx.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199

6.12. 현금 지원은 항상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저소득 및 고소득 그룹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수급하는 공공 현금 이전의 비중, 2016년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218

6. 형평성 지표

구매 가능한 주택

양질의 구매 가능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빈곤 위험을 줄이고 평등 기회를 향상시키며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 주택 추이는 보유, 저렴성, 품질면에서 OECD 전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이는 국가별 다양한 역사 맥락, 세대 선호사항, 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보다 더 일반적이다. 2016년 OECD 가구의 거의 70%가 완전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주거지를 소유했으며 26%가 민간 임대 시장 또는 보조 임대 주택으로 주거지를 임대했다(그림 6.13). 많은 동유럽 국가(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포함)가 매우 높은 주택 소유율을 기록했는데 가구 중 70% 이상이 주거지를 완전히 소유했으며 이는 1990년대 정부 소유 주택의 역사적인 판매의 결과이다. 2016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주택 소유자가 완전한 주택 소유자 수를 넘었다.

반대로 2016년 평균적으로 OECD 가구의 1/4 이상만 주거지를 임대했다. 스위스와 독일만이 임대인이 다수인 국가이다(각각 60% 및 55%).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주거지 임대율이 40% 이상을 기록한다. 보조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은 27개 OECD 국가에서 존재하지만, 사회 주택량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2016년 구매 가능한 사회 주택에 관한 OECD 설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에서 사회 주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총 주택량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구매 가능한 주택은 OECD 전체 많은 가구에서 큰 과제이지만 저소득 거주자는 거대한 주택 비용 부담에 직면한다. 16개 OECD 국가에서 2016년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자의 40% 이상이 그들의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에 지출했다. 14개 OECD 국가에서 민간 임대를 하는 저소득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그림 6.14). 그리스와 미국에서 저소득 거주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사한 주택 비용 부담에 직면한다: 두 개 국가에서 2016년 저소득 인구의 반 이상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지출했다.

아동은 특히 열악한 주택에 노출된다. OECD 유럽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0-17세 아동이 과밀 주택에 거주한다. 이 수치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그림 6.15).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모든 아동의 절반 이상이 과밀 주택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수치가 8% 미만이다. 자료가 제공되는 모든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고소득 가구 아동보다 과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

정의 및 측정

구매 가능한 주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지표는 종종 주택 비용과 가구 소득 간의 비율에 집중한다. 2개의 일반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다: i) 주택 비용 부담(여기서 사용됨), 가처분 가구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 및 ii) 가구의 전체 최종 소비 지출 대비 주택 관련 지출 비율(주택, 수도, 전기, 가스 등). 다른 지표는 거주지의 난방을 적절히 유지할 능력이 없는 가구의 비율과 같이 주택 구매력의 다른 측면을 측정한다.

공공 임대 주택으로 규정되는 보조 임대 주택은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며 특정 규칙에 따라 할당되는 거주 임대 시설로 정의된다(Fitzpatrick, S. and H. Pawson, 2014 참조). 민간 임대 시장은 임대 시장의 영리 부문이며 이곳에서 임대 주택은 시장 요율로 제공된다.

EU에서 합의된 정의(Eurostat)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소 수의 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구는 과밀로 간주된다: 가구당 방 1개; 가구 내 성인 커플당 방 1개; 18세 이상의 독신 1인당 방 1개; 12~17세 동성인 독신 2명당 방 1개; 12~17세이며 이전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독신 1인당 방 1개; 12세 미만 아동 2명당 방 1개.

방법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http://oe-cd/ahd)를 참조한다.

참고문헌

Salvi del Pero, A. et al. (2016), "Policies to promote access to good- quality affordable housing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m3p5gl4djd-en.*

Fitzpatrick, S. and H. Pawson (2014), "Ending Security of Tenure for Social Renters: Transitioning to 'Ambulance Service' Social Housing?", *Housing Studies*, Vol. 29/5, pp. 597-615, *http://dx.doi.org/10.1080/02673037.2013.803043.*

Scanlon, K. (2014), Social *housing in Europe*, John Wiley & Sons, *https://doi.org/10.1002/9781118412367.ch1.*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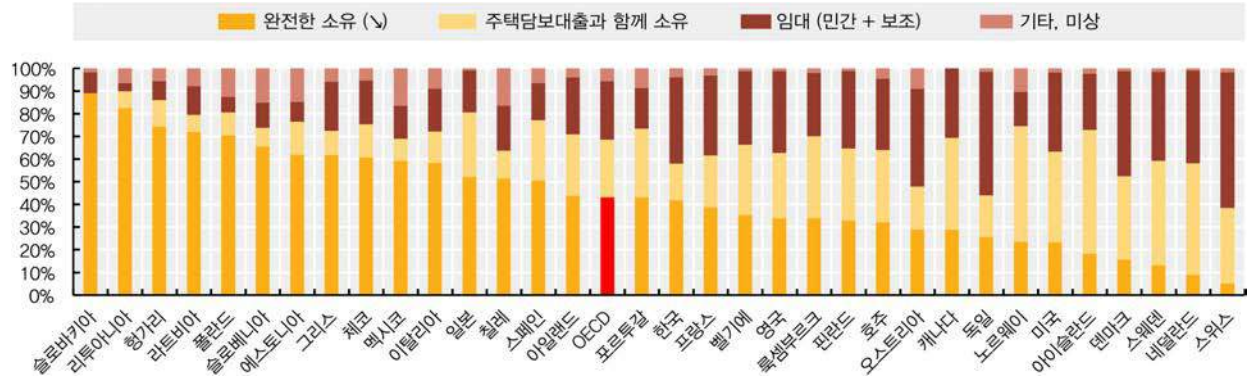
그림 6.13: 일본은 자료상 한계로 인해 응답자 수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정확한 연도는 Statlink를 참조.

그림 6.14: 하위 1/5은 소득 분배의 하위 20%를 말한다. 자료상 한계로 인해 터키에 관한 정보가 없다. 자료상 한계로 인해 칠레, 멕시코, 한국, 미국에서는 가처분 소득 대신 총 소득액이 사용된다. 자료상 한계로 인해 덴마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가 없다. 관찰수가 최소 30개로 구성된 범주인 경우에만 결과가 나타난다. 3. 자료상 한계로 인해 일본 자료는 응답자 수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정확한 연도는 Statlink를 참조한다.

그림 6.15: 자료상 한계로 인해 호주, 칠레, 독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미국의 정보가 없다.

6.13.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보다 더 일반적이다

상이한 보유 유형별 가구 비율, %, 2016 또는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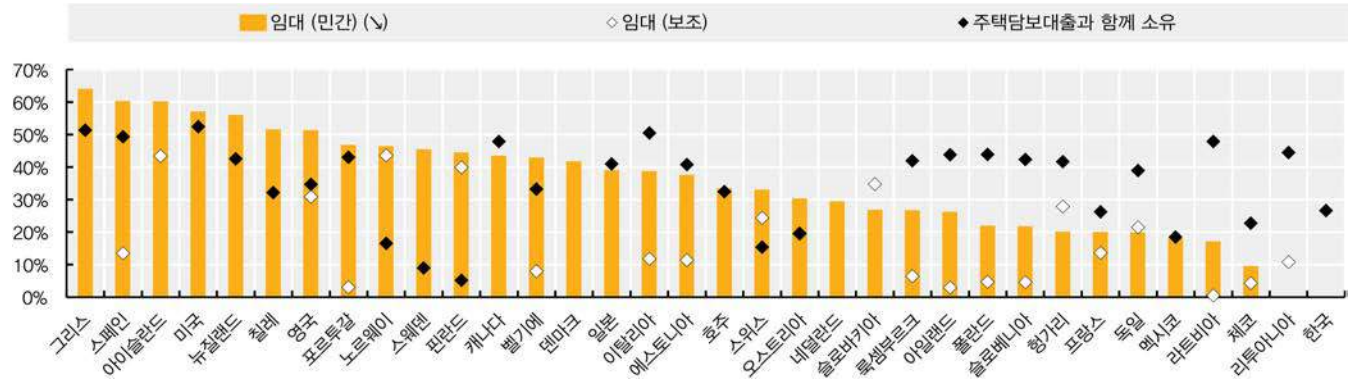


출처: OECDAffordable Housing Database - HM1.3 Housing tenures and HC1.2 Housing costs over income, http://oe-cd/ah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237

6.14. 저임금 거주자는 상당한 주택 비용 부담에 직면한다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료에 지출하는 소득 분배 하위 1/5에 있는 인구 비중, 보유별, 비율, 2016/17 또는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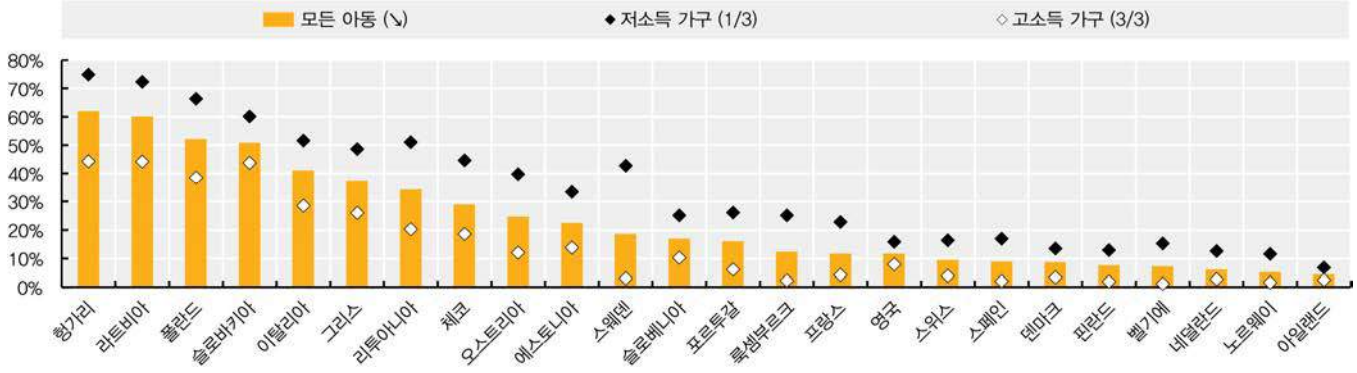


출처: OECDAffordable Housing Database - HM1.3 Housing tenures and HC1.2 Housing costs over income, http://oe-cd/ahd.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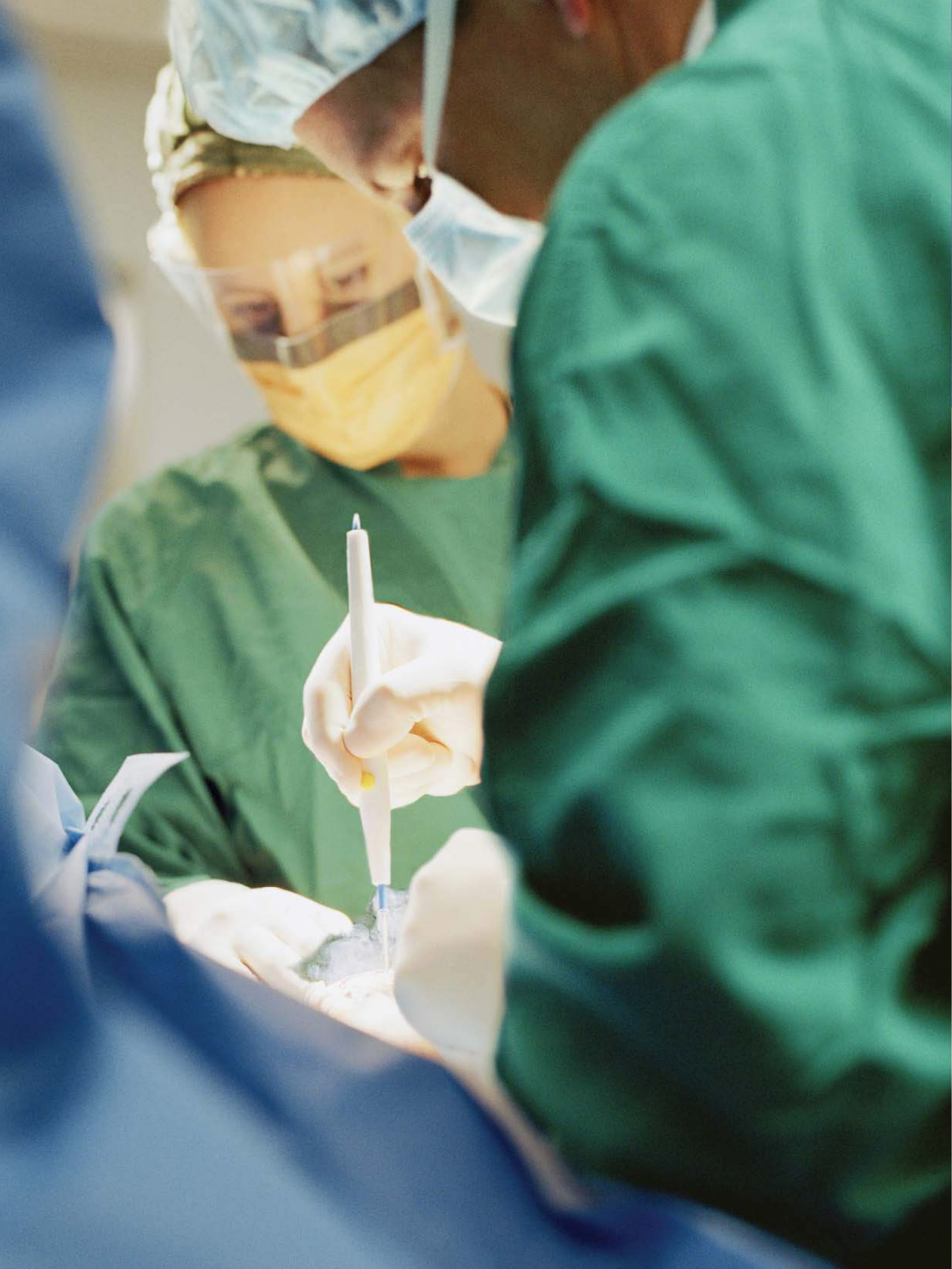
6.15. 아동은 특히 열악한 주택에 노출된다

유럽 OECD국가에서 과밀 주택에 사는 아동(0–17세)의 비율, 소득 그룹별, %, 2016



출처: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CWB9 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OECD calculations based on EU-SILC survey, http://oe.cd/child-well-being.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275



7. 보건 지표

기대여명
보건 지출
HIV/AIDS
자살
흡연 및 음주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대여명

2016년 OECD 국가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은 평균 80.6세로 1970년 이후 10년 이상 증가한 것이다(그림 7.1). OECD 회원국의 2/3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이 80세를 초과하며 이 순위의 선두에는 일본, 스페인, 스위스가 있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및 많은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는 기대 여명이 75세에서 80세 사이이다. OECD 국가 중 기대여명이 가장 짧은 곳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로 75세에 약간 못 미친다.

수명 연장은 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개선된 라이프스타일, 더 나은 근무 환경 및 교육을 포함하여 다수의 요인들에 기인한다.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OECD 파트너 국가들도 지난 10년 동안 수명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국가의 기대여명도 OECD 평균을 향해 급격히 수렴하고 있다. 성과가 다른 국가에 크게 못 미친 국가는 남아공(HIV/AIDS의 창궐로 인해)과 러시아(주로 1990년대 경제 과도기의 영향 및 남성들의 위험한 행동 증가 때문)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OECD 국가가 기대여명이 약간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그러한 걱정스러운 추세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북아메리카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이 최근 감소한 것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가 안정화되고 오피오이드로 인한 약물 남용 사망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NCHS, 2018). 영국 및 다른 유럽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감소한 것은 부분적으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량이 둔화됨과 동시에 겨울 동안 (겨울 독감의 영향으로) 고령자의 사망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Public Health England, 2018).

출생 시 기대여명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2016년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83.3세이고 남성이 77.9세였다(그림 7.1). 남녀 차이는 평균 5.4세였다. 2016년 OECD 국가의 여성 기대여명은 헝가리, 라트비아, 멕시코에서 80세 미만이었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에서 85세 이상이었다. 남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슬로바키아에서 75세 미만이었고 호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에서 80세 이상이었다.

기대여명은 예를 들어 교육 수준과 같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그림 7.2). 학력이 높으면 사람들이 생활하고 근로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수단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생활방식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자료가 나와 있는 25개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30세 시점의 최고 학력을 가진 여성과 남성이 최저 학력자보다 기대여명이 4~7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에 따른 기대여명의 차이는 특히 남성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이 격차가 평균적으로 7년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서는 고학력 남성과 저학력 남성 간의 기대여명 차이가 10년 이상이었다. 캐나다, 스웨덴, 터키에서는 이 격차가 덜 두드러졌다.

1인당 보건지출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출생 시 기대여명이 더 길었다. 다만 이 상관관계는 1인당 보건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는 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7.3). 각국의 보건지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일본, 한국, 스페인은 비교적 기대여명이 길었고 러시아와 미국은 비교적 짧았다.

정의 및 측정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출생 집단의 실제 연령별 사망률을 미리 알 수는 없다.

만일 연령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면(수십 년 간 그랬던 것처럼), 실제 기대여명은 현재 사망률로 산출된 기대여명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기대여명 산출에 사용된 방법론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1년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모든 OECD 국가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의 비가중 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교육수준별 기대여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구체적인 사망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사망률 자료에 교육 관련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그림 7.2에 제시된 국가의 수가 줄어든다.

1인당 보건 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 지출" 지표를 참조한다.

참고문헌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OECD (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9087-e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18),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2017. NCHS Data Brief, No. 328, *www.cdc.gov/nchs/data/databriefs/db328-h.pdf*.

Public Health England (2018), A Review of Recent Trends in Mortality in England,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cent-trends-in-mortality-in-england-review-and-data-pa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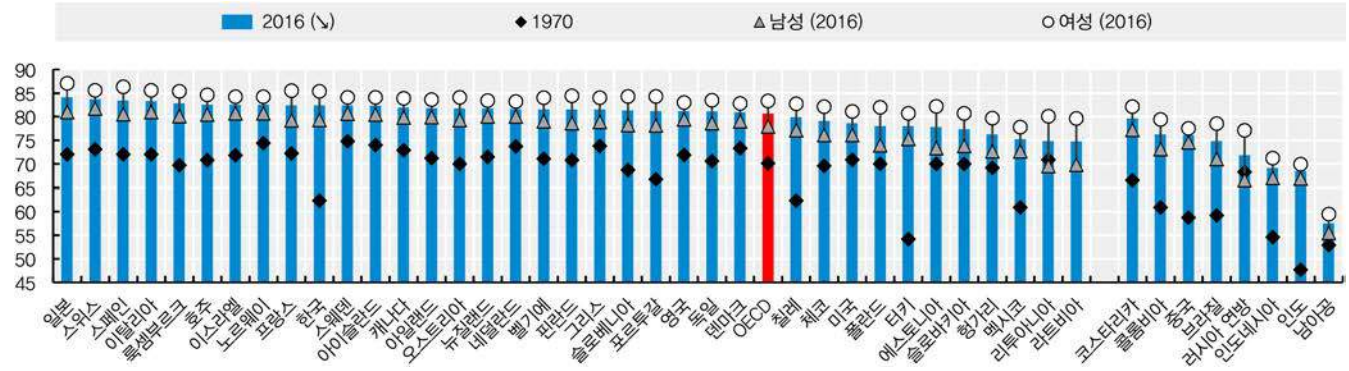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 및 그림 7.3: 2016년 자료는 캐나다, 칠레, 프랑스,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에서 2015년 자료를 말한다; 1970년 자료는 캐나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에서 1971년 자료를 말한다; 라트비아는 1970년 자료가 없다.

그림 7.2: 2016년 자료는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에서 2015년;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2012년; 호주, 벨기에, 라트비아, 영국, 미국에서 2011년; 캐나다에서 2010년 자료를 말한다.

7.1. 지난 10년 동안 기대여명은 증가해 왔으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출생 시 기대여명, 성별, 연령, 1970년 및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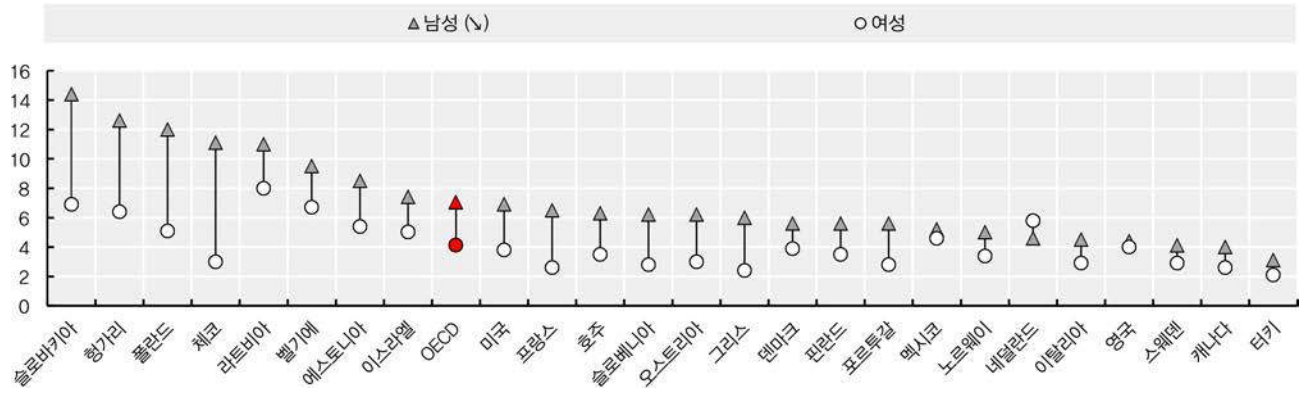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294

7.2. 최고 학력 수준을 가진 여성과 남성은 최저 학력자보다 4~7년을 더 사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졸자와 고졸 미만인 30세의 기대여명 격차, 성별,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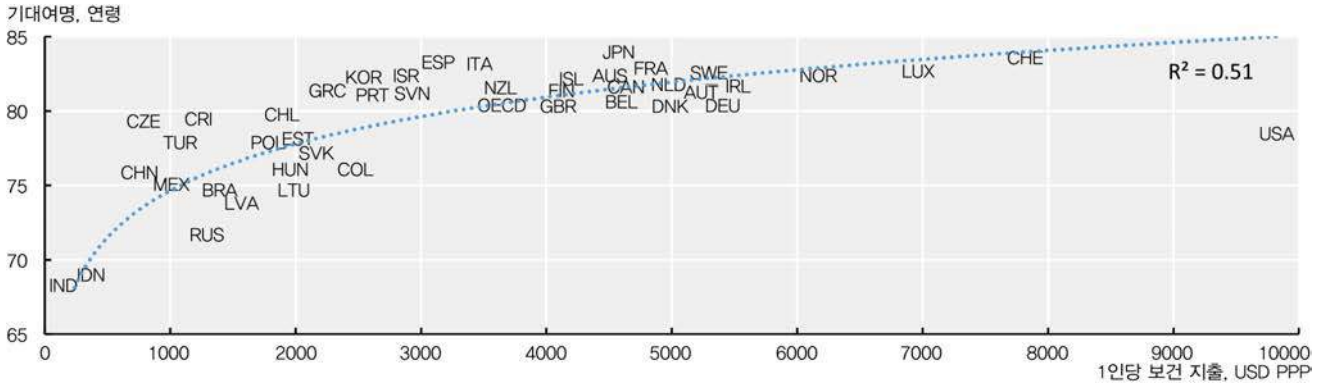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database complemented with OECD Statistics Directorate data and national data for Israel, Mexico and the Netherlands.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313

7.3. 보건 지출이 클수록 기대여명은 길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보건 지출이 높을수록 둔화된다

출생 시 기대여명(연령)과 1인당 보건 지출(USD PPP),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332

보건 지출

각국이 보건에 얼마나 지출하며 이러한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비율은 각각 보건 시스템의 다양한 재정 및 조직 구조뿐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 및 사회적 요인을 반영한다.

2017년 미국은 다른 OECD 국가들을 계속해서 큰 차이로 앞지르며 1인당 10,000달러를 기록했다(그림 7.4). 이러한 수준의 보건 지출은 OECD 평균(4,000달러)의 2.5배이며 미국 다음으로 지출이 큰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보다 각각 25%와 40% 높은 수준이다. 국가들의 3/4 정도는 1인당 보건지출이 2,000~6,000달러이다. 지출액이 2천 달러 미만인 국가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중앙 유럽과 남아메리카 국가와 터키이다. 1인당 보건 지출액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인당 1,030달러이다(OECD 평균의 26%).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는 각각 OECD 평균의 19%, 10%, 6%를 2017년 1인당 보건지출액으로 사용했다.

그림 7.4는 1인당 보건 지출을 정부 출처 또는 일종의 강제적 보험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자발적 건강 보험 또는 가구의 직접 지급과 같은 자발적 수단을 통해 지급했는지를 기초로 하여 구분한다. 보건 지출의 대부분은 정부 제도(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영국) 또는 일정한 형식의 강제적 보험(체코, 독일, 프랑스, 일본, 슬로바키아)으로부터 나온다. 평균적으로 자발적 수단을 통한 보건 지출은 총 지출의 약 25%를 차지한다. 지출의 다른 출처에 기초로 한 순위는 1인당 총지출을 기초로 한 순위와 광범위하게 비슷하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보건 지출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2.7%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림 7.5). 2017년 잠정적 예측에 따르면 보건 지출은 약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건 지출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었다. 2009~2017년 OECD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1인당 보건 지출은 실질 기준으로 연간 1.7%씩 증가하였다(그림 7.6). 반면 2003~2009년 기간 동안 연간 실질 증가율은 평균 3.7%에 이르렀다. 3개국(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는 2009~17년 기간 동안 마이너스 평균 연간 성장률을 보여줬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는 그 정도가 더 작았다. 오직 3개국(헝가리, 아이슬란드, 스위스)에서만 해당 연도 전보다 2009년 이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보건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에는 공공 보건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통제, 채용 중단 및 보건 인력의 실제적 감축, 의료 제공자에게 지급 가능한 수수료 삭감, 약품에 대한 지출 억제가 포함된다 (Morgan and Astolfi, 2014). 한국과 칠레는 연간 5% 이상으로 OECD 내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은 2009~2017년 실질 보건 지출이 매년 평균 8%, 9%, 11% 각각 증가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에 비해 훨씬 낮다.

정의 및 측정

보건 지출은 보건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공공 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 및 관리와 함께 의료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재원에 의한 지출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본 형성에 대한 지출(인프라, 기계 및 장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은 제외된다.

국가 간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인당 보건 지출을 공통 통화(미국 달러)로 환산했으며 구매력 평가(PPPs) 환율을 사용하여 각국 통화의 상이한 구매력을 고려하도록 조정했다.

실질 기준의 성장률 산출을 위해 경제 전체의 디플레이터를 사용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예. 프랑스와 노르웨이), 국가적 방법론에 의거한 보건용 디플레이터가 존재하지만 국가 간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Morgan, D. and R. Astolfi (2014), "Health Spending Continues to Stagnate in Many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6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 5jz5sq5qnwf5-en.*

OECD (2018), Focus on Spending on Heath: Latest Trends, *www.oecd.org/health/health-expenditur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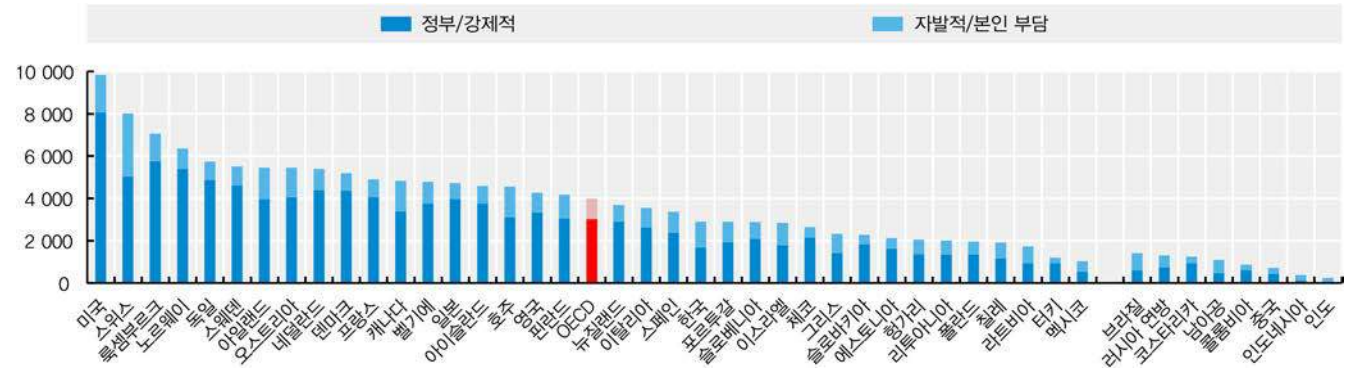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4, 그림 7.5, 그림 7.6: 2017 년 자료는 해당 국가가 제공하거나 OECD가 예측한 잠정적 수치를 기초로 한다. 미국(그림 7.4만), 코스타리카, 러시아는 2016년 자료이다; OECD 비회원국은 2015년 자료이다.

7.4. OECD 전역에서 보건 지출의 차이가 크다

출처별 1인당 보건 지출, USD PPP, 2017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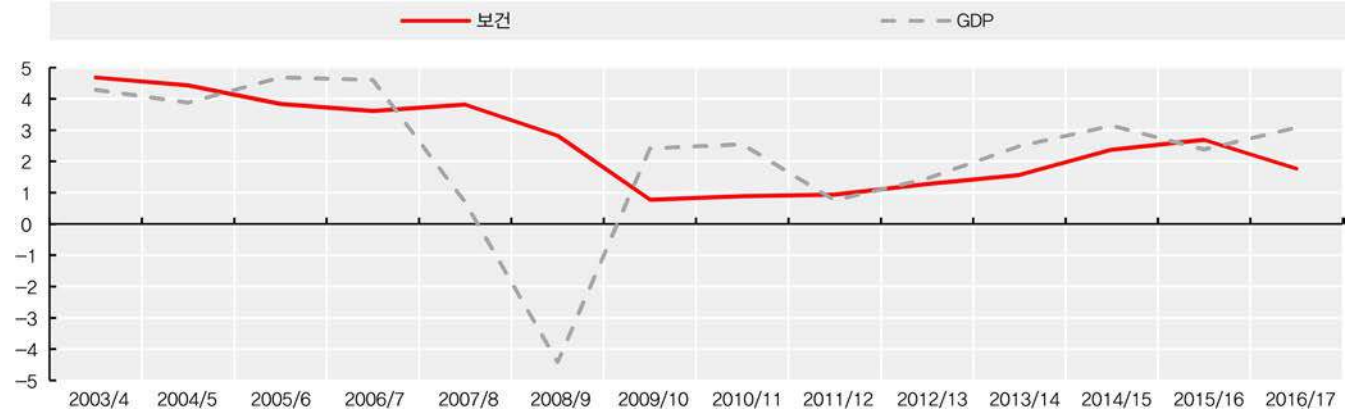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351

7.5. 평균적으로 보건 지출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

1인당 보건 지출 및 GDP의 실질 연평균 증가율, OECD 평균, %, 2003–17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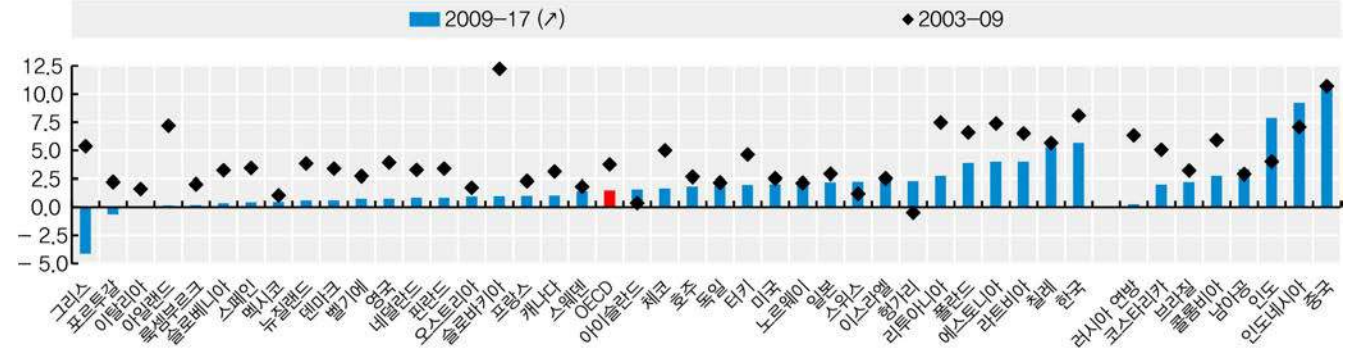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370

7.6.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건 지출의 증가율은 줄어들었다

1인당 보건 지출의 실질 연평균 증가율, %, 2003–09 및 2009–17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389

HIV/AIDS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주요 공공 보건 문제로 남아 있는데 2017년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자는 약 3천7백만 명이며, WTO에 따르면 이 중 2천7백만 명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28개 유럽 OECD 국가에서 2016년 거의 32,000명이 새롭게 진단받았으며 이는 HIV 신규 감염 사례가 10만 명당 6.4건임을 말한다**(그림 7.7).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신규 HIV 감염률이 가장 높았으며(인구 10만 명당 17~18건), 아일랜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따랐다(인구 10만 명당 10~11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인구 10만 명당 약 2건으로 신규 감염률이 가장 낮았다. OECD-유럽에서 지난 10년간 HIV 신규 진단 건수의 연 평균율은 꽤 안정적이었으나 이러한 평균은 국가 간 달라지는 추이를 감추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에서 감염률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초기 수준은 오히려 낮았으나 아이슬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는 감염률이 2배로 증가하였다. 남성이 HIV 신규 진단 건수의 3/4을 차지한다.

HIV의 주요 전염 방식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것이며(40%; 이 중 99.7%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과 관련이 있다), 이성간 접촉이 그 뒤를 따른다(32%). 주사를 통한 약물 사용이 HIV 전염의 또 다른 일반적인 방식이다(ECDC and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7).

HIV 감염은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 발병의 원인이 된다. AIDS는 면역 시스템이 신체를 방어할 수 없어 다른 감염 및 종양에 걸리기 쉬울 때 폐렴 및 결핵과 같은 많은 다른 질병을 통해 나타난다. HIV 감염, AIDS 진단과 사망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이는 치료법에 따라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OECD 국가에서 AIDS의 신규 보고율은 인구 10만 명당 1.5건이었다(그림 7.8). 1980년대 초 처음으로 AIDS를 보고한 이후 신고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 인구 10만 명당 거의 4건이 되었고 1990년대 중반 최고 수치가 되었다. 공공 인식 캠페인이 1990년대 하반기에 HIV/AIDS 신규 건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에 기여했다. 해당 질병의 발병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이 개발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신규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2016년 OECD 국가 중 멕시코가 AIDS 보고율이 가장 높았으며(인구 10만 명당 11개 신규 건수), 칠레, 라트비아, 미국이 그 뒤를 따랐다(인구 10만 명당 약 6개 신규 건수). 일부 국가의 낮은 비율은 불완전한 보고 때문일 수 있다.

HIV/AIDS 사망률 또한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HIV/AIDS 때문에 사망한다. 2015년 OECD 국가에서 18,000명이 HIV/AIDS로 인해 사망하였다.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건에 해당한다(그림 7.9). OECD 국가 중 라트비아와 멕시코에서 인구 10만 명 중 4~5명이 사망하여 HIV/AIDS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HIV/AIDS 사망률은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에서 약간 높았으며, HIV-AIDS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사망한 남아공에서는 매우 높았다.

정의 및 측정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과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의 발생률은 진단 연도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건수이다. 그러나 신규로 보고된 HIV 진단이 수년 전에 감염된 사람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는 실제 발생률을 나타내지 않는다.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고 진단하는 것이 발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보고된 건수의 40%만큼만 나타낼 수 있다(ECDC and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7).

사망률은 주어진 연도의 한 국가에 등록된 HIV/AIDS 사망자 수를 해당하는 인구수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한다. 사망률은 국가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한 상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2010 OECD 인구에 연령을 표준화했다 (*http://oe.cd/mortality에서 이용 가능*). HIV/AIDS 사망률 출처는 WHO Mortality Database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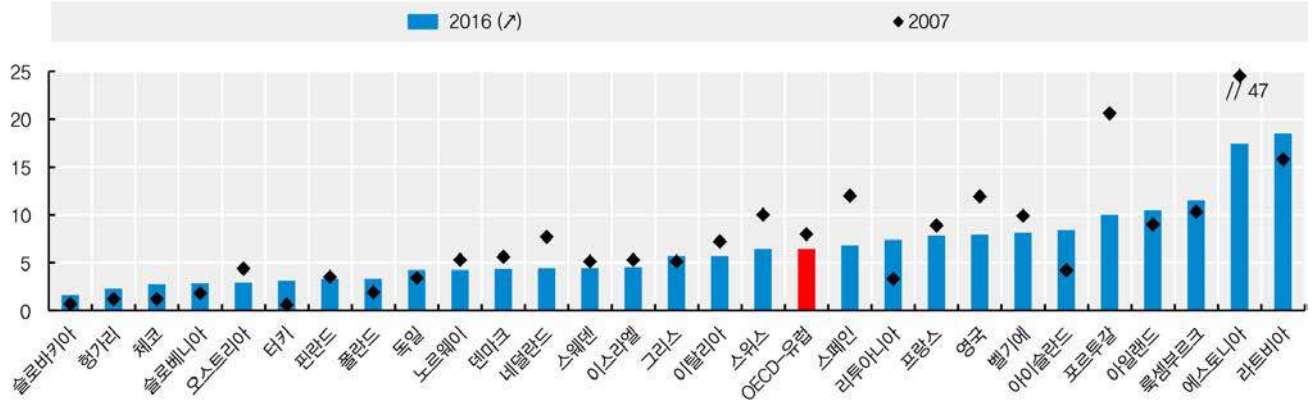
ECDC and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7), HIV/AIDS surveillance in Europe 2016.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8 및 그림 7.9: 정확한 연도는 Statlink 참고.

7.7. 지난 10년 동안 HIV 보고율은 유럽 OECD 국가에서 꽤 안정적이었다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신규 보고 건수, 인구 10만 명당, 2007년 및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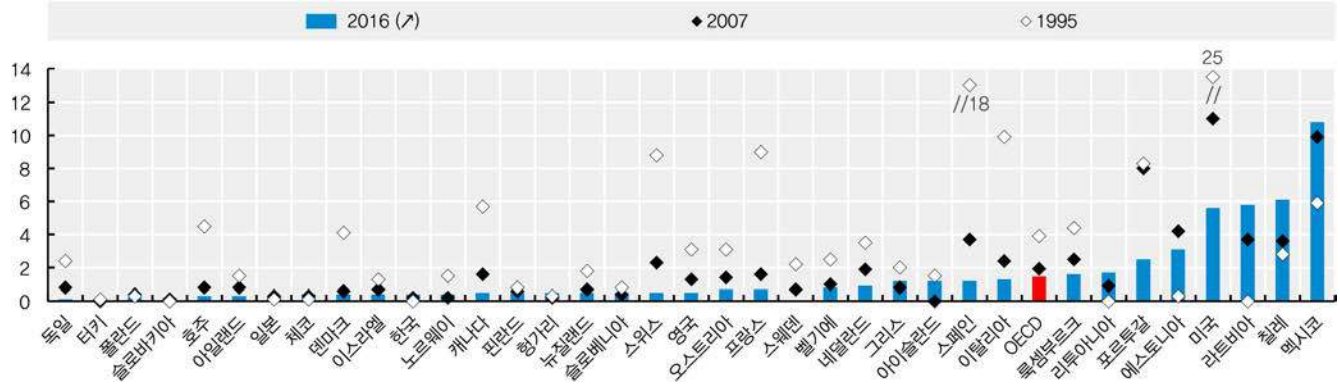


출처: ECDC and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7), HIV/AIDS surveillance in Europe 2016.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408

7.8. 1990년대 중반 이후 AIDS 보고율이 감소해 왔다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신규 보고건수, 인구 10만 명당, 1995년, 2007년 및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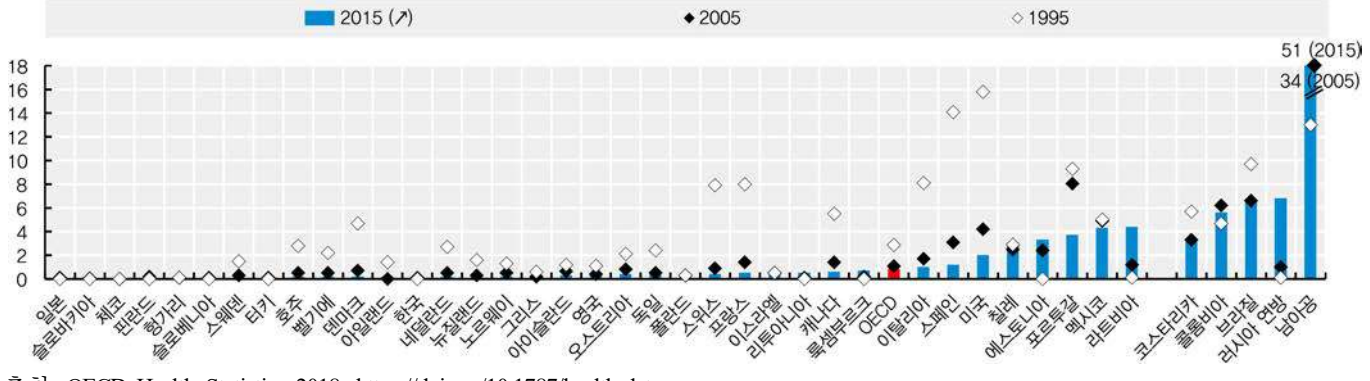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427

7.9. 지난 20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HIV/AIDS 사망률이 감소했다

연령 표준 HIV/AIDS 사망 수, 인구 10만 명당, 1995년, 2005년 및 2015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446

자살

자살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주된 사망요인 중 하나이며 2016년 152,000명 이상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즉, 10만 명당 12명이 자살한 셈이다.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며 자살을 시도하도록 하는 다수의 위험 요인이 있다.

2014년 자살률은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남아공에서 10만 명 중 5명 이하로 가장 낮았다(그림 7.10).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한국, 리투아니아, 러시아는 인구 10만 명 중 18명 이상으로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와 가장 높은 리투아니아 간에 열세 배의 차이가 났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서너 배 높다(그림 7.10). 아이슬란드와 폴란드에서는 남성이 자살할 확률이 여성보다 최소 7배 이상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더 작지만, 남성 자살률은 여전히 여성 자살률보다 최소 2배 높다.

자살률은 1970년대에 증가했고 1980년대 초반 정점에 이르렀다(그림 7.11).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약 1/3가량 감소했으며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 두드러진 감소율을 보였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던 시기와 함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 수년간 감소하기 시작했다. 다른 일부 국가에서 최근 10년간 자살률이 증가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살률은 2000년 10만 명당 11.2명에서 2015년 13.8명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자살 수와 자살율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NCHS, 2018). 유사한 경향이 멕시코와 포르투갈에서도 관찰된다. 핀란드는 자살 방지 캠페인의 실행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자살율이 상당히 감소했던 국가의 모범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살율은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다(OECD/EC, 2018).

평균적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으며, 인구 10만 명당 70세 이상 노인 20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는 10명이다 (그림 7.12).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OECD 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한국은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의 예시이다. 연령에 따라 자살률이 가장 많이 높아진 국가는 한국으로 최고령자 집단의 자살률이 10대 자살률의 거의 13배에 이른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와 같은 OECD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노인보다 자살할 확률이 더 높다. 30대 미만 자살률은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에서 청년 10만 명당 15명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해당 자살률은 지중해 유럽국가 및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낮다.

남녀 간 자살률 차이는 80세부터 특히 중요해지는데, 이 시기에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5배이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의 경우 오랜 파트너와 이별한 후 사회적 고립성이 더 심각한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질병 발생률이 높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정의 및 측정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완전히 인지하거나 예상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으로 자살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 간 자료 비교는 개인의 자살 의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망 확인서 발행 책임자는 누구인가, 법의학적 조사가 실시되는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는가 등 여러가지 보고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국가 간 차이를 해석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서 자살자 수는 자살로 인한 낙인이나 보고 기준 관련 자료 문제로 인해 실제보다 축소된 것일 수 있다.

사망률은 한 해에 한 국가에서 등록된 사망자 수를 해당 인구 규모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한다. 사망률은 국가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한 상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2010 OECD 인구에 연령을 표준화했다. 사망률 자료 출처는 WHO Mortality Database이다.

참고문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18), Mortality in the 미국, 2017, NCHS Data Brief, no. 328, *www.cdc.gov/nchs/data/databriefs/db328-h.pdf*.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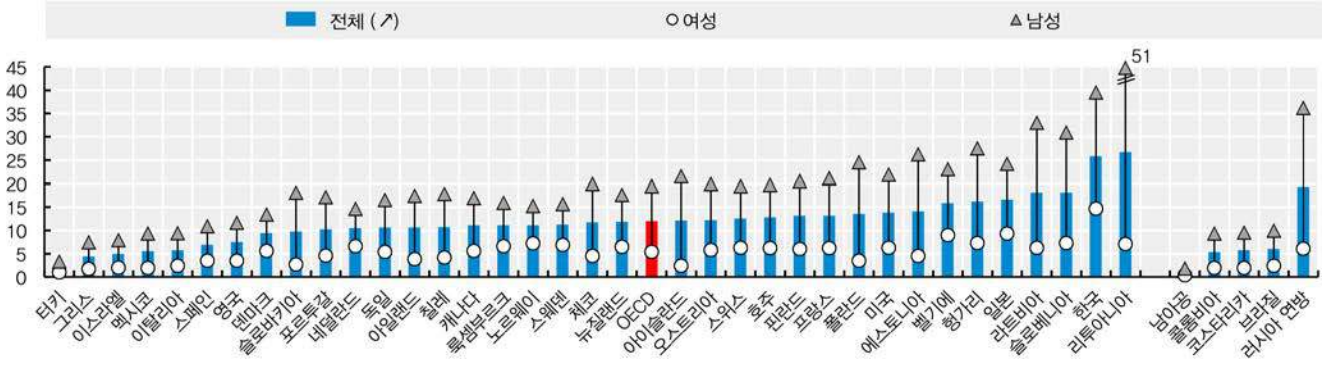
OECD/EU (2018),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8: State of Health in the EU Cycle*, OECD Publishing, Paris/EU, Brussels, *https:// doi.org/10.1787/health_glance_eur-2018-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0 및 그림 7.12: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확한 최근 자료는 Statlink 참고.

7.10.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3~4배 더 높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 성별,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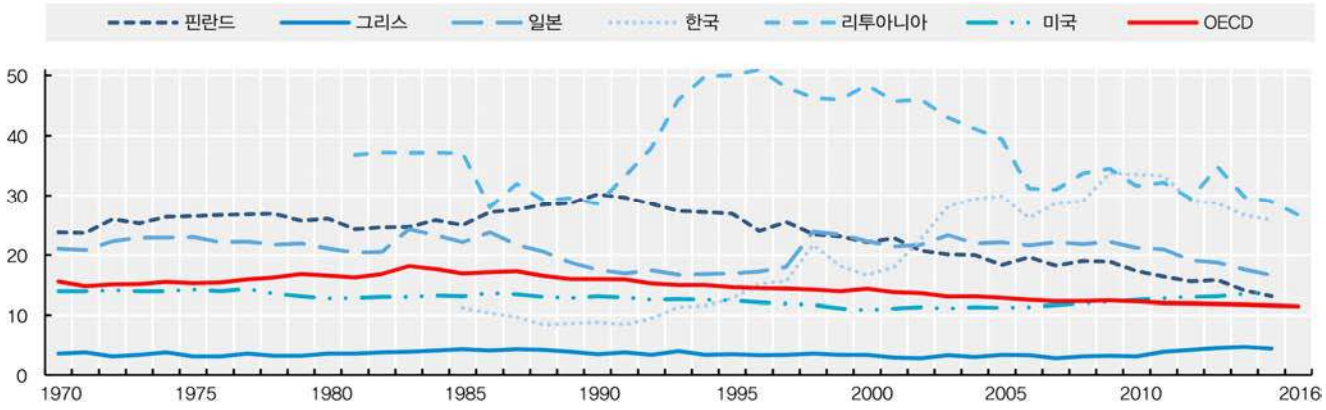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939465

7.11. 자살률은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 추이, 일부 OECD 국가, 197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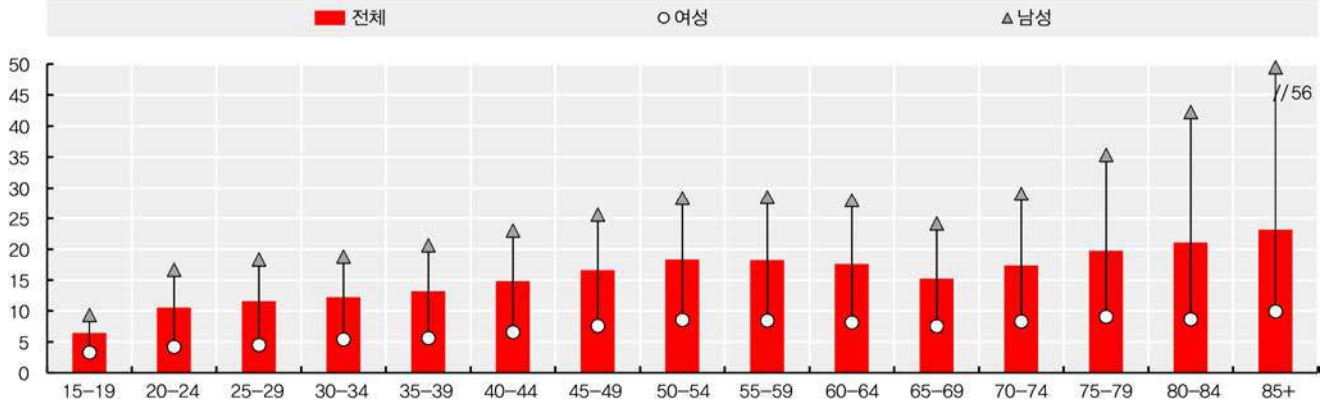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484

7.12. 자살률은 은퇴 초반 몇 년을 제외하고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연령 그룹 및 성별, OECD 평균,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and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from WHO Mortality database, www.who.int/healthinfo/mortality_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503

흡연 및 음주

흡연과 음주는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2가지 주요 원인(심혈관 질환과 암)에 대한 주된 위험 요인이다.

2017년 평균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18%가 매일 흡연했다(그림 7.13). 측정 문제를 유념해도 OECD 국가 전체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흡연율은 멕시코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낮았으며(인구의 10% 미만) 그리스, 헝가리, 터키에서 가장 높았다(25% 초과).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흡연율이 더 높다. 다만,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예외적으로 성별 차이가 1% 미만이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서 지난 18년 동안 흡연율이 크게 하락했다. OECD 평균적으로 흡연율은 2000년 26%에서 2017년 18%로 1/4 이상 감소했다. 특히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OECD 파트너 국가 중 흡연율은 브라질에서는 낮았지만(7%)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에서는 높았다(30% 초과).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음주량은 기록된 연 매출 자료로 측정했을 때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성인 한 명당 8.8리터 수준이었다(그림 7.14). 체코, 프랑스, 리투아니아는 연간 성인 한 명당 11.5리터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음주량이 적은 곳은 터키, 이스라엘, 그리고 신흥국인 인도네시아, 인도로 일부 인구 집단에서 종교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음주가 제한된 곳들이다. 2000년 이후 많은 OECD 국가에서 평균 알코올 소비량이 약간 감소했지만(평균적으로 성인 한 명당 약 0.7리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주요 파트너국인 중국, 인도에서는 2리터 이상 증가하였다. 개인 수준 자료를 기초로 한 OECD 분석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보다 더 폭음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엔 그 반대인 것으로 관찰된다(OECD, 2015).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빨리 중독되며, 정기적 흡연 및 음주는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저해뿐 아니라 교육 성과 저하, 폭력, 상해, 약물 사용, 위험한 성적 행위와도 관련성이 높다(OECD, 2015).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8명 중 1명이 최소 주 1회 흡연한다고 보고했다.** 청소년 흡연율은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서 5% 미만부터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약 20%까지 분포되어 있다(그림 7.15). 핀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러시아에서는 남성 청소년의 흡연율이 훨씬 높은 반면, 체코, 룩셈부르크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이 최소 2회의 음주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음주율은 이스라엘 10%부터 덴마크, 헝가리, 리투아니아 35% 초과까지 분포한다(그림 7.16).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음주 확률이 높다. 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스위스에서 특히 그러하다. 영국은 여자 청소년 음주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유일한 국가이다.

정의 및 측정

매일 흡연하는 이들의 비율은 매일 흡연한다고 보고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 OECD 국가들의 건강 인터뷰 조사에서 흡연 습관 측정방식이 제대로 표준화되지 않아 국가 간 비교가 제한적이다.

조사된 연령 집단, 질문의 표현 방법, 응답 카테고리, 조사 방법에 있어 차이가 관찰된다(예. 많은 국가에서 흡연을 매일 하는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가로 질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응답하는 조사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왜곡이 있고 이는 국가 간 비교를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음주는 15세 이상 1인당 순수한 알코올(리터 단위)의 연 매출로 정의된다. 그러나 알코올 음료를 순수 알코올로 전환하는 방법론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는 가정에서 담근 술 등 기록되지 않은 알코올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 생산은 일부 국가에서 더 흔할 수 있다.

남녀별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과 음주율은 2013/14년 학령기 아동의 건강 행동(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조사를 출처로 하며, 이는 26개 OECD회원국 청소년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회 경제적 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여기에서 남녀별로 나타난 지표는 최소 주 1회 흡연하고 지금까지 2회 이상 음주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참고문헌

Inchley, J. et al. eds. *Growing up unequal: Gender and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6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7), *www.hbsc.org/publications/international*.

OECD (2015), *Tackling Harmful Alcohol Use: Economics and Public Health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 9789264181069-en*.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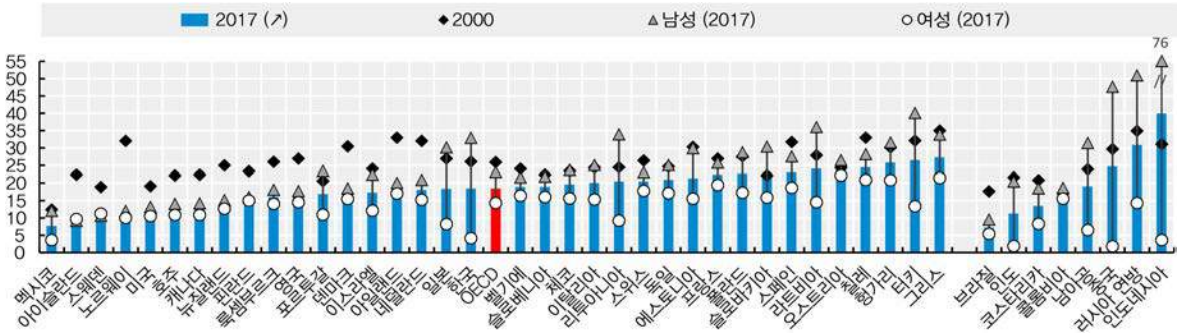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3 및 그림 7.14: 정확한 연도는 Statlink 참고.

그림 7.15 및 그림 7.16: 벨기에 자료는 플레미시(60%)와 프렌치(40%) 인구 비율을 이용해 산출된 것이다; 영국 자료는 잉글랜드(85%), 스코틀랜드(9%), 웨일스(5%)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산출했다.

7.13.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성인 흡연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매일 흡연하는 15세 이상 인구 비율, 성별, 2000년 및 2017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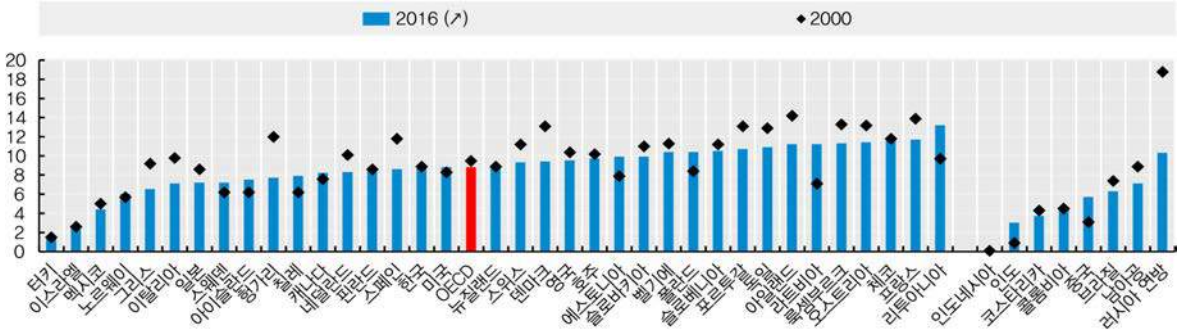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522

7.14. 많은 OECD 국가에서 성인 음주량이 약간 감소하였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리터), 2000년 및 2016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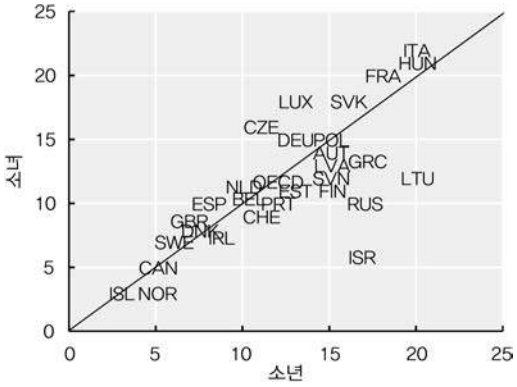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541

7.15. 15세 청소년 8명 중 1명이 최소 주 1회 흡연함

주 최소 1회 흡연하는 15세 청소년 비율, 성별, 2013/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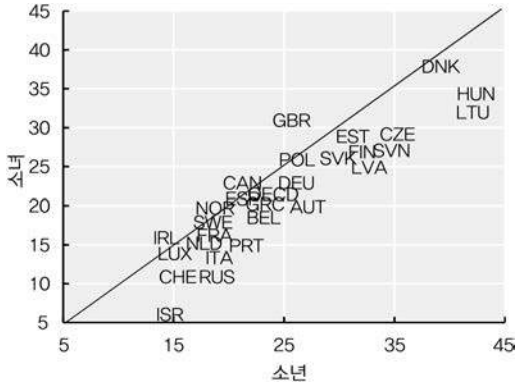


출처: Inchley, J. et al. eds. Growing up unequal: gender and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Copenhagen,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6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Adolescents, No. 7), www.hbsc.org/publications/international.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560

7.16.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이 지금까지 최소 2회 음주한 경험이 있음

2회 이상 음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청소년 비율, 성별, 2013/14년



출처: Inchley, J. et al. eds. Growing up unequal: gender and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Copenhagen,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6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7), www.hbsc.org/publications/international.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579

8. 사회 통합 지표

삶의 만족도
기관에 대한 신뢰
여성에 대한 폭력
투표
온라인 활동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며 삶의 질에 대한 더 객관적인 지표를 보충하는 주관적인 지표이다.

0 ~ 10점으로 삶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라고 요청했을 때, OECD 사람들은 2016-17년에 평균적으로 6.7점을 부여하였다(그림 8.1).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전체에서 고르게 공유되지 않는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들의 만족도 점수는 7.5점 이상으로 그들이 삶에 가장 만족했으며 다른 북유럽 국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그 뒤를 따랐다. 북유럽 국가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보다 2.5단계 더 높았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다른 국가에는 터키, 포르투갈, 헝가리, 에스토니아, 한국이 포함된다. 신흥국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컸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의 6 이상부터, 인도와 남아공의 5 이하까지 분포했다.

2016-17년의 OECD 평균 삶의 만족도는 2006-07년 수준과 유사하다(그림 8.1). 36개 OECD 국가 중 9개국에서만 삶의 만족도가 하락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는데 이들 3개국은 2008-09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이다. 반대로 라트비아, 헝가리, 아이슬란드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다르다(그림 8.2).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고한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다.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고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고했다.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노인 그룹보다 청년 그룹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의 청년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그리스의 50세 이상 사람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고한다. 전일제 직업, 높은 교육 수준, 높은 수입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도시 대 시골)가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와 체코에서 삶의 만족도는 도시 지역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상당히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모든 신흥국들과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에서는 지역별 만족도가 그 반대로 나타난다.

그림 8.3에서는 갤럽의 긍정 및 부정적 경험 지수를 이용하여 사람의 일상적인 느낌과 감정을 보여준다. OECD 국가 중 **"긍정적 경험" 종합 지수는 멕시코, 노르웨이에서 가장 높고 터키에서 가장 낮다. 반면 "부정적 경험" 지수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 전체에서 높은 긍정적 경험 지수와 높은 삶의 만족도 점수는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 경험 지수와 부정적 경험 지수 간에 음의 상관관계는 약간 존재한다.

정의 및 측정

갤럽 세계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11개의 계단이 있는 사다리가 있다고 하자. 맨 아래 계단(0)은 최악의 삶이고 맨 위 계단(10)은 최상의 삶이다. 현재 당신은 개인적으로 몇 번째 계단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섹션에 사용된 주요 지표는 국가 평균 점수이다. 갤럽 세계 조사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공통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표본은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대표하며 확률에 기반하여 선정된다. 이러한 자료 출처를 통해 국가 간 비교는 쉬워지지만 결과는 표본 추출 및 비표본 추출 오류와 응답률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료는 일부 사회인구통계학 그룹별로 이용할 수 있다.

갤럽 세계 조사는 또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지수를 제시한다. 긍정적 경험 지수는 5가지 질문(응답자가 많은 즐거움을 경험했는가, 미소 짓거나 많이 웃는가, 잘 쉬었다고 느끼는가,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뷰 전날 흥미로운 무언가를 했는가)에 대한 국가 전체 응답의 평균값이다. 부정적 경험 지수는 5가지 질문(응답자가 많은 신체적 고통, 걱정, 스트레스, 슬픔, 화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국가 전체 응답의 평균값이다. 해당 지수 점수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모든 유효 긍정 응답의 평균에 100을 곱한 값이다.

참고문헌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9165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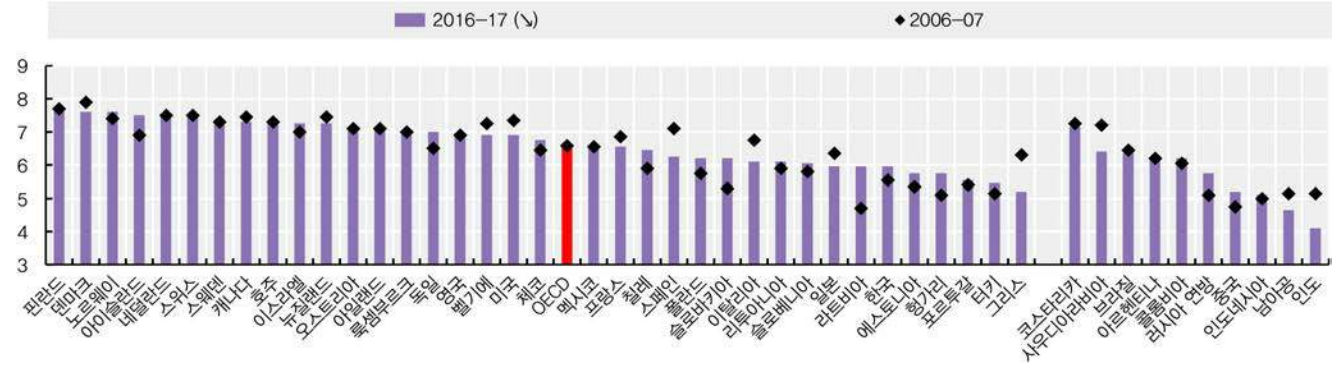
OECD (2017), How's Lif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1, 그림 8.2, 그림 8.3: 결과는 연도별 변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개년 기간 동안 평균화한다.

8.1. 삶의 만족도의 수준 및 추이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0 ~ 10 등급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평균 점수, 2016–17년 및 2006–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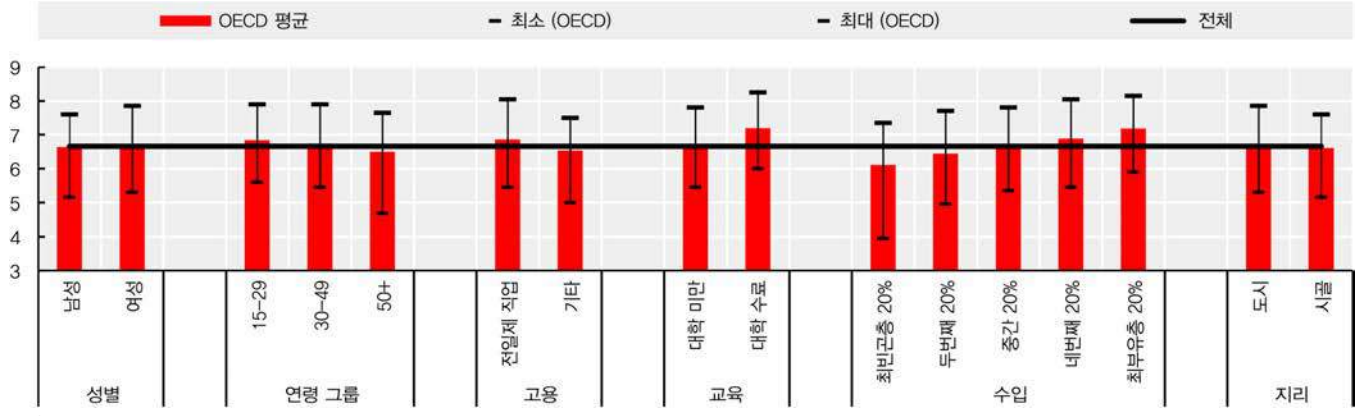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598

8.2. 삶의 만족도는 사회 인구통계학적 그룹별로 다르다

0 ~ 10 등급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사회 인구통계학적 그룹별, OECD 평균, 2016–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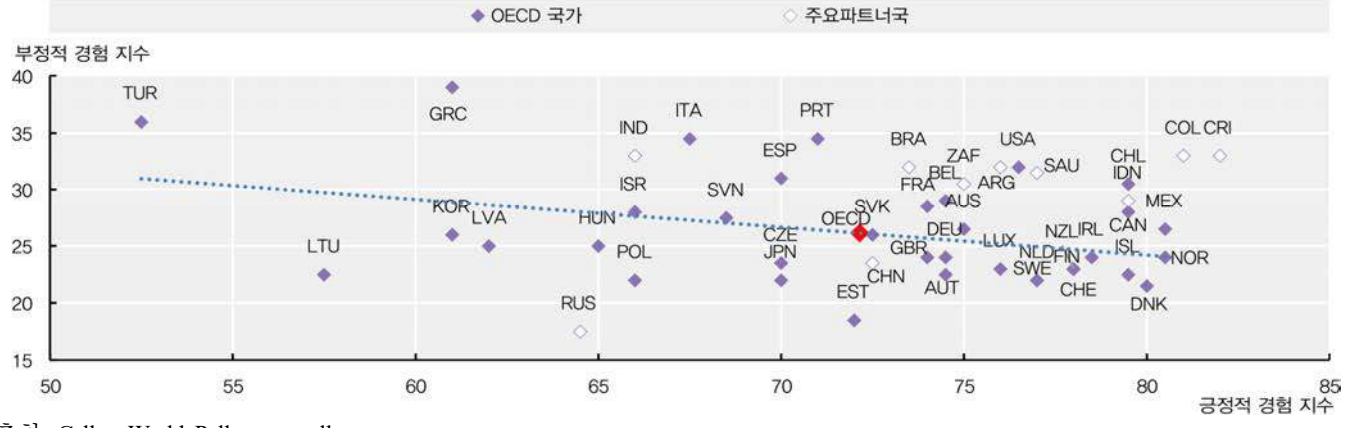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617

8.3. 사람들의 일상적인 느낌 및 감정

긍정적 경험 지수와 부정적 경험 지수, 2016–17년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636

기관에 대한 신뢰

통합된 사회는 시민들이 공공 기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사회 경제 기관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는 곳이다. 확신과 부패 문제(Confidence and corruption issues)는 사회적 신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들에 속한다.

OECD 국가에서 2016-17년 평균 **인구의 절반 미만(43%)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보고했다**(그림 8.4).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의 경우 국민의 2/3 이상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보고해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인구의 1/3 미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보고했다. 스위스와 그리스의 차이는 6배에 이르고 이 두 국가가 각각 가장 높은 신뢰도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스위스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다.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나 그리스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인구의 최빈곤층 1/5보다 최부유층 1/5에서 더 높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OECD 4개 회원국(프랑스, 그리스, 터키, 미국)과 일부 주요 파트너국(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공)에서 최빈곤층이 최부유층보다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율을 보고한다.

지방 경찰 및 군대에 대한 신뢰는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상당히 더 높다. 2016-17년 OECD 인구의 74% 및 73%가 각각 지방 경찰과 군대에 대한 신뢰를 보고한다(그림 8.5). 사람들은 또한 사법 제도(OECD 평균 52%)와 금융 제도(46%)에 대해 더 높은 신뢰도를 보고한다. 그러나 신뢰 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율은 칠레와 한국에서 약 20%이고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약 85%에 이른다. 모든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2006-07년보다 2016-17년에 더 높은데 금융 기관은 예외이다. 이는 2007-07년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일으켰던 금융 위기의 결과이다.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였으나 그 하락 폭이 칠레와 그리스에서 가장 컸다(약 30% 포인트). 2014-15년 이후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시 상승하였고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러하다.

갤럽 세계 조사는 또한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 자료를 보여준다(그림 8.6). 2016/17년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54%) 정부의 광범위한 부패를 인식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고한 반면(20% 미만) 체코,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은 80%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부패에 대한 인식은 주요 파트너국 모두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남아공에서는 80%를 넘는다. 지난 10년간 부패에 대한 인식이 칠레,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악화된 반면 독일, 폴란드에서는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정의 및 측정

기관에 대한 신뢰 자료는 갤럽 세계 조사를 출처로 한다. 이는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되며, 공통 설문지를 기초로 하며,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표본은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대표하며 확률에 기반하여 선정된다. 이러한 자료 출처를 통해 국가 간 비교는 쉬워지지만 결과는 표본 추출 및 비표본 추출 오류와 응답률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연도별 변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개년 기간 동안 자료를 평균화한다. 자료는 일부 사회인구통계학 그룹별로 이용할 수 있다. 신뢰에 대한 자료는 다음 양자택일 질문을 기초로 한다: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는가: 중앙 정부, 금융 기관 또는 은행, 사법 제도 및 법원, 지방 경찰력, 군대.

부패 인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 양자택일 질문을 기초로 한다: "귀국의 정부 전체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참고문헌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gov_glanc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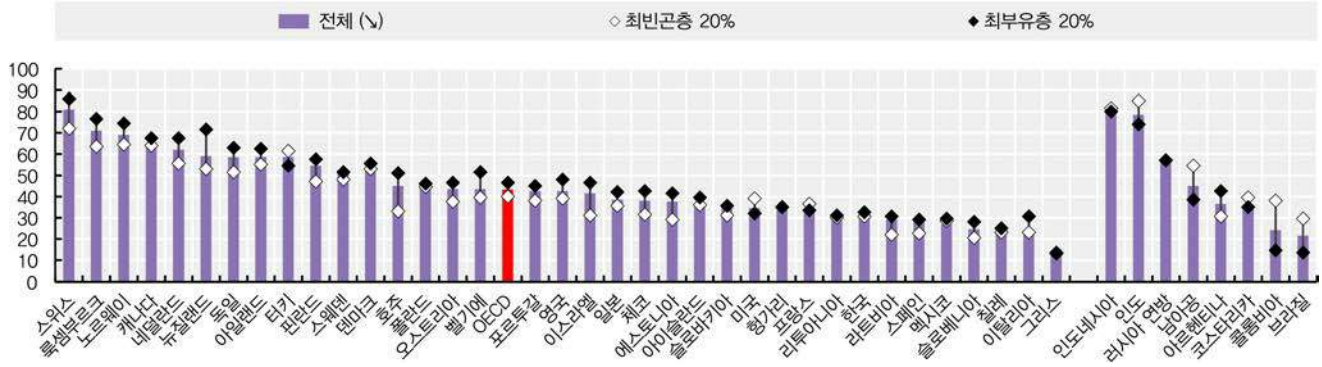
OECD (2017), *How's Lif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6: 2008 자료는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 2006/07년 자료로 대신된다.

8.4.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OECD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앙 정부를 신뢰한다고 보고하는 사람의 비율, 가구 수입별, 2016–17년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655

8.5. 사람들은 지방 정부와 군대를 가장 많이 신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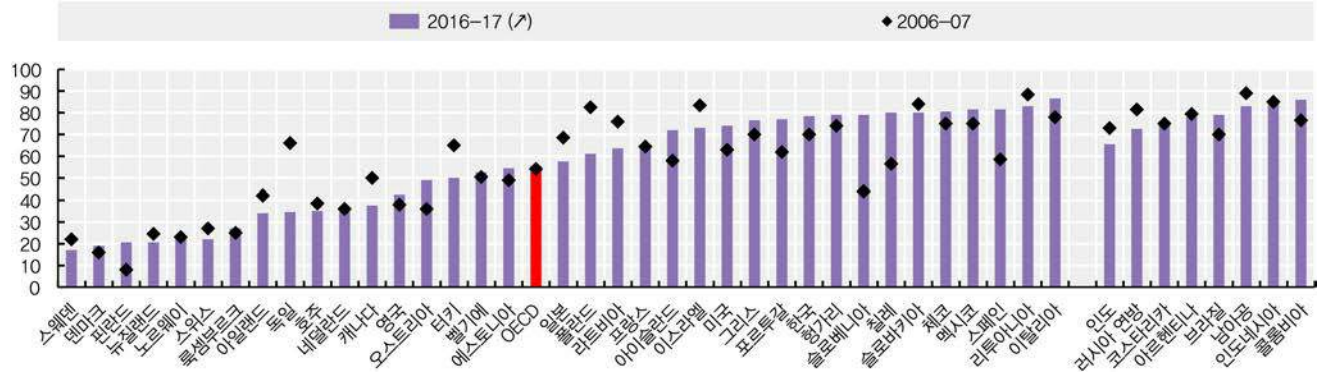
특정 기관을 신뢰한다고 보고하는 사람의 비율 추이, OECD 평균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674

8.6.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 부패를 인식한다

부패가 정부 전체에 만연하다고 보고하는 사람의 비율, 2016–17년 및 2006–07년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693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AW)은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 이는 모든 형태의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및 학대,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괴롭힘을 포함한다. 다른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괴롭힘, 강간, 기타 형태의 공격, 아동 혼인, 인신매매, 여성 생식기 절단, 재생산권 부족,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 규범, 여성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차별적 법률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보고한 여성의 수와 지난해 폭력을 보고한 여성의 수는 많은 국가에서 많다. **OECD 국가 전체에서 여성의 22%가 지금까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며 여성의 4%가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뉴질랜드, 미국, 터키에서 여성의 1/3 이상이 파트너로부터 대인간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그림 8.7). 물리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들이 아는 사람이다.

OECD 사회 기관 및 젠더 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2019에 따르면 사회 규범 및 법적 체제가 사회 변환 과정을 구동하거나 여성의 권한 부여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여성의 물리적 무결성을 보호하려는 수년간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법적 진보는 OECD 국가에서 균일하지 않다. 14개국에서 법적 체제가 여성을 법적 예외 없이 폭력(친밀한 파트너 폭력, 강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한다. 16개 OECD 국가에서 폭력 생존자는 법적 장애물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한 국가는 여전히 소위 명예 범죄의 경우 경감 처벌을 허용한다; 4개국에서는 가정 폭력은 형사 범죄가 아니다; 11개국에서는 법률이 성희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형사적 처벌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 규범 또한 여성이 신고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수단을 추구하는 데 강력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여성 자신의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용인은 법적 체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SIGI 2019에 따르면, OECD 국가 내에서 **여성의 8%가 남편이 그의 아내를 치거나 때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수치는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1% 미만부터, 한국 18%와 독일 20%에까지 이른다**(그림 8.8). 신흥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훨씬 더 많이 용인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의 34%, 남아공에서는 여성의 61%가 배우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유엔 약물 및 범죄국(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의 최근 살인에 대한 글로벌 연구(Global Study on Homicide)에 따르면, 남성이 살인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살해된 여성은 전체 여성 살인 희생자 중 58%에 이른다. 젠더 관련 여성 및 소녀 살인은 글로벌 현상이다. 국제적으로 여성 및 소녀 살인율은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다.

여성은 또한 집 밖에서 폭력 및 괴롭힘에 직면한다. 2018 국제 교통 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물리적 또는 언어 공격, 성희롱 및 다른 형태의 폭력 또는 개인적 스트레스 및 물리적 위해를 초래하는 반갑지 않은 행동에 노출된다고 느낀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거의 여성 3명 중 1명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남성은 5명 중 1명이 그러하다**(그림 8.9).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에서 여성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 5명 중 1명 미만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성 10명 중 약 6명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브라질과 남아공의 여성은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고한다.

정의 및 측정

그림 8.7 은 지금까지 친밀한 파트너의 물리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던 여성의 비율과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의 물리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던 여성의 비율은 나타낸다. 그림 8.8은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과 논쟁을 하거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외출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성관계를 거절하는 등 특정 이유 중 최소 하나로 인해 아내를 치거나 때린 데 대해 남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5~49세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는 젠더, 기관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 2019(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2019)를 출처로 하며 이는 180개국에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법률, 사회 규범 및 관행에 있어 젠더 기반 차별에 대한 국가 간 복합 기준인 OECD 사회 기관 및 젠더 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2019에 사용된 자료를 포함한다.

그림 8.9 는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게 느낍니까?"라는 갤럽 세계 조사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갤럽 세계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지표인 "삶의 만족도"를 참고.

참고문헌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2018), *Women's Safety and Security: A public transport priority*, OECD Publishing, Paris, *www.itf-oecd.org/sites/default/files/docs/womens-safety-security_0.pdf*.

OECD (2019), *SIGI 2019 Global Report: Transform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c56d212-en*.

OECD (2018)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IDDB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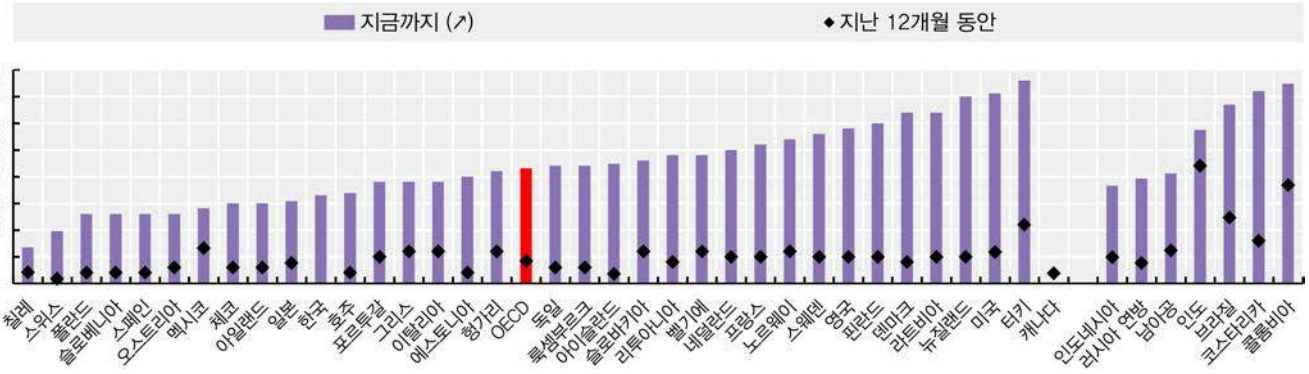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8), Global study on homicide: Gender-related killing of women and girls, UNODC, Vienna, *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GSH2018/GSH18_Gender-related_killing_of_women_and_girls.pdf*.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7: 캐나다에 대한 평생 자료가 없다.

8.7. OECD에서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의 물리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최소 한 번 경험했다고 보고한 여성의 비율, 201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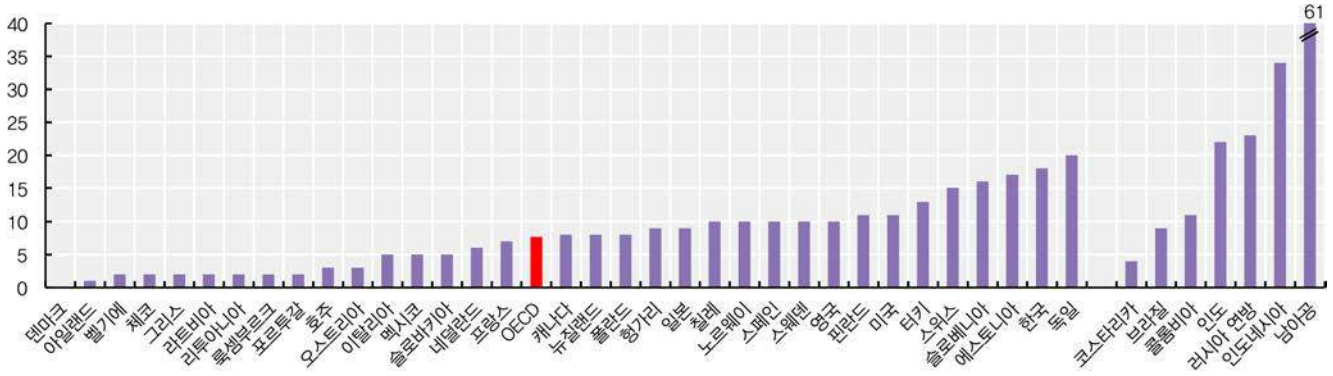


출처: OECD (2019),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oe.cd/ds/GIDDB2019.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712

8.8. 일부 여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용납한다

2010–17년 아내를 치거나 때린 것에 대해 남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5~49세 여성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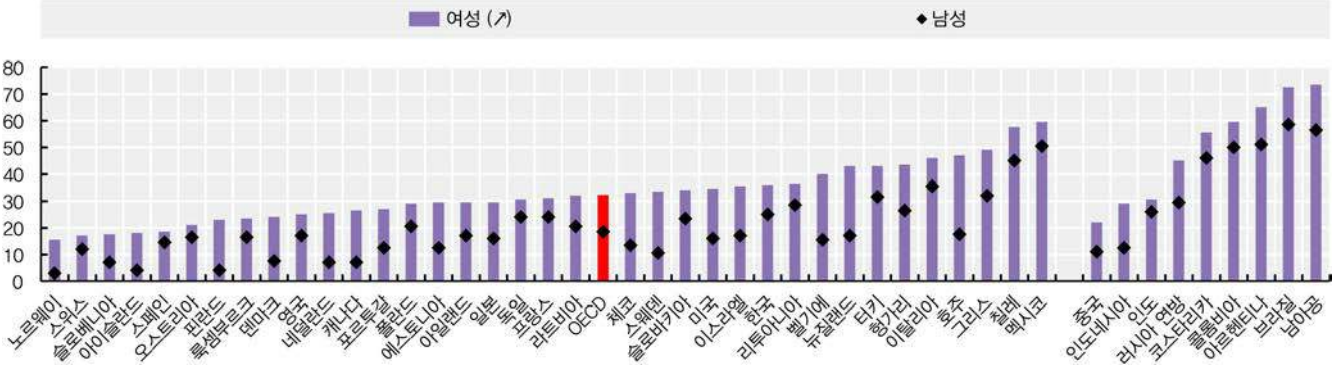


출처: OECD (2019),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oe.cd/ds/GIDDB2019.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731

8.9. 여성은 남성보다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덜 느낀다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 또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성별, 2016/17년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750

투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인이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걱정하고 사회의 정치 생활에 행위자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치인의 주요 과제이다.

투표율은 OECD 내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높은 투표율은 국가 정치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벨기에, 덴마크, 터키, 스웨덴에서 80% 이상이지만, 칠레,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는 50% 미만이다 (그림 8.10).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많은 잠재적 유권자들이 등록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30년 동안 선거 참여율이 하락해 왔다.** 1990년대 초반과 2010년 말기 사이의 OECD 전체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은 평균적으로 75%에서 65%로 감소하였다.

OECD에서 청년 4명 중 한 명은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모든 연령 그룹에 있어서는 5명 중 한 명이다(그림 8.11). 15~29세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50% 이상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고한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높다. 청년 무관심 비율이 북유럽 국가 및 독일에서는 10% 미만이다.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는 전체 인구에서 정치 무관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 북유럽 국가, 독일은 무관심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해당국의 국적을 가진 이민자의 3/4이 가장 최근 국가 선거에 참여했다(그림 8.12). 이러한 OECD 평균 비율은 해당국 토박이의 참여율보다 약간 낮다(각각 74% 대 80%). 연령과 교육을 고려해도 투표 참여에 있어 토박이와 이민자의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민자의 선거 참여율은 해당 국가 토박이의 참여율보다 낮다. 단,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예외이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이민자의 투표율은 덴마크와 벨기에 (양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투표하는 것이 공식적인 의무이다)에서 가장 높고(약 90%), 체코, 스위스, 아일랜드에서 가장 낮다(60% 미만). 투표율 순위는 토박인 참여에서도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 격차는 12~20포인트로 북유럽 국가, 남부 유럽,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정의 및 측정

의회 선거에 대한 투표는 지역사회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선거 과정에의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투표 연령 인구 투표율"

정의 및 측정 (계속)

즉, 투표 연령 인구(VAP) 중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로 회원국의 행정 기록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VAP는 투표 연령에 속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값이다.

투표율 자료의 국가 간 비교는 법정 투표 연령, 투표 등록 시스템(자동 또는 잠재적 투표자의 조치 요구) 및 투표가 강제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OECD 및 유럽 국가에서 국가 선거의 법정 투표 연령은 18세이나, 오스트리아와 브라질에서는 16세, 그리스와 인도네시아에서는 17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국가마다 제도적 구조 및 지리적 관할지에 따라 선거 유형이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과 지방 선거 투표율이 의회 선거 투표율보다 높은데, 아마도 이러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이들이 헌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운영에 좀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표율 자료는 민주주의 선거지원 연구소(Institute for Democratic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에서 관리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 자료는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s, ESS8-2016)와 세계 가치 조사 6차(Word Value Survey Wave 6: 2010-14, WVS)에서 추출했다. 두 조사 모두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묻고 있으며 응답자는 매우 관심 있음, 상당히 관심 있음, 거의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의 네 개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다. 자료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가장 최근 선거에서 외국 출생 및 본토 출생 인구의 자기 보고 참여율 자료(그림 8.12)는 (유럽 사회 조사, 글로벌 사회 조사, 현재 인구 조사 등) 설문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그림 7.10에 제시된 IDEA 자료와 다르다.

참고문헌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OECD Publishing, Paris/EU, Brussels, *https://doi.org/10.1787/ 978926430721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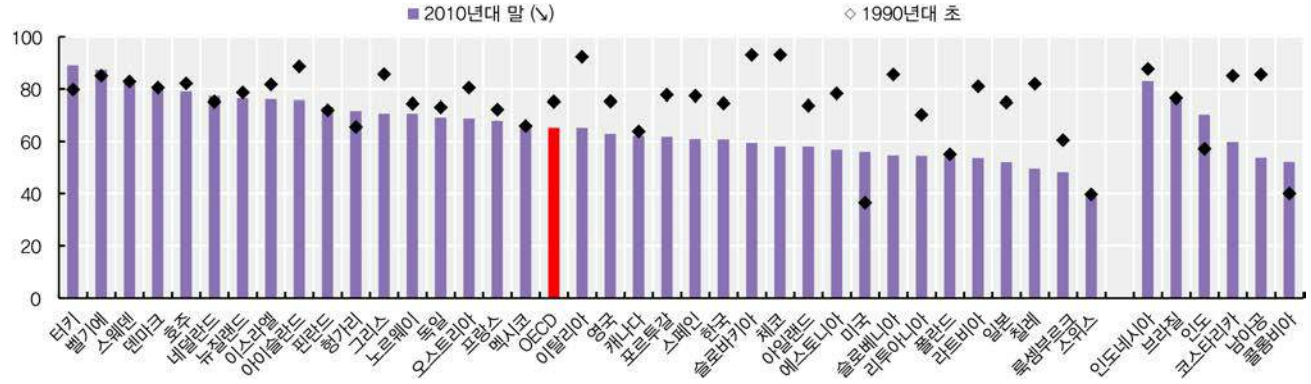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10: 투표 연령 인구 (VAP) 투표율 통계는 총투표수를 예상 투표 연령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다. 투표 연령 인구 (VAP)는 법정 투표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을 포함한다. 자료는 의회 선거 자료이다. 단, 참여율이 더 높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는 예외이다. 선거일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tatlinks*를 참고한다.

그림 8.11: 캐나다,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는 자료가 없다.

8.10.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선거 참여율은 감소해 왔다

가장 최근 의회 선거의 투표율, 1990년대 초 및 2010년대 말, 투표연령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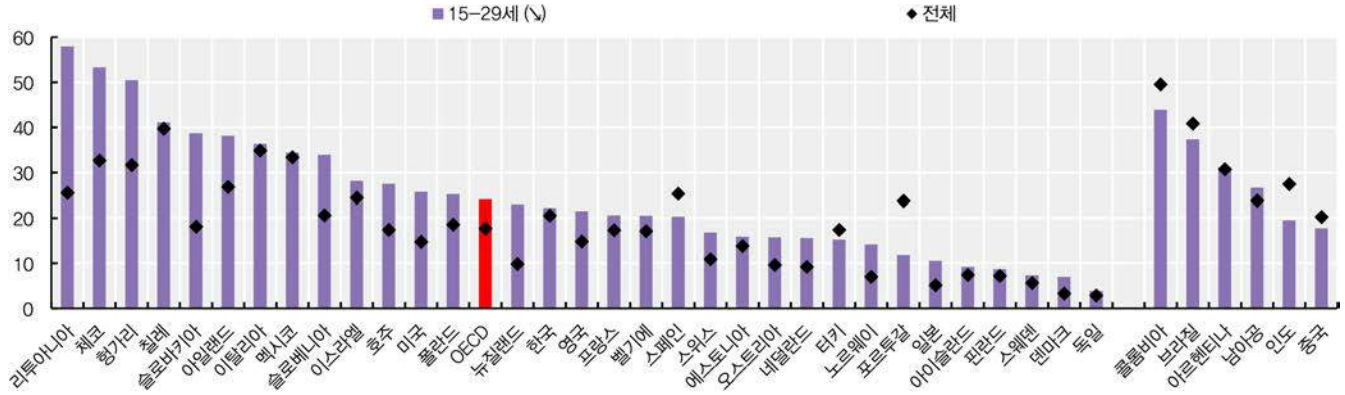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Assistance (IDEA), Voter Turnout database, www.idea.int.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769

8.11. OECD에서 청년 4명중 1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연령 그룹별, 2016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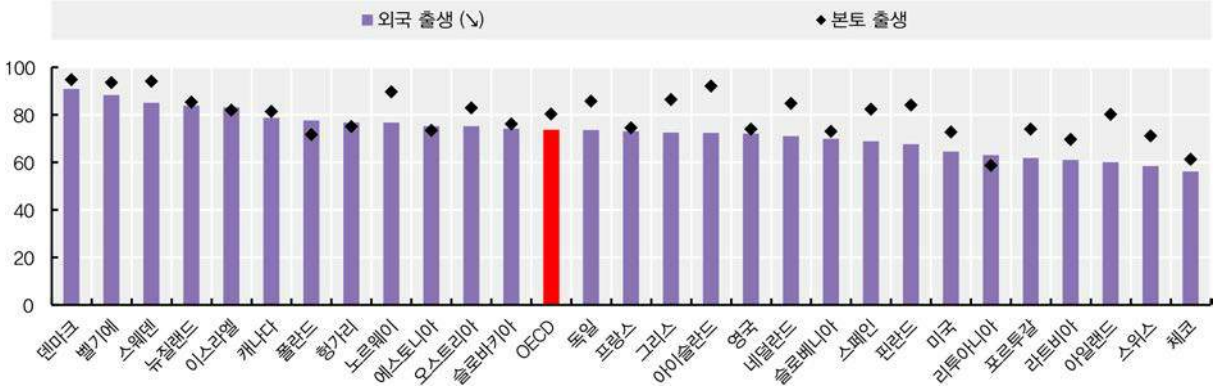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Social Survey ESS8-2016, ESS7-2014 andWorldValues SurveyWave 6: 2010-2014.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788

8.12. 선거 참여율은 외국 출생 인구에서 약간 낮다

스스로 보고한 가장 최근 선거 참여율, 18세 이상 해당국 국적을 가진 인구 중 비율, 2008–16년



출처: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lmmigrantIntegration, OECD Publishing, Paris/EU, Brussels, https://doi.org/10.1787/9789264307216-en, Chapter 5: Immigrant civic eng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807

온라인 활동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사용이 규칙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이용률은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회 그룹별로 많이 차이가 난다. 2018년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성인 인구의 97%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했으나 멕시코에서는 65%가 이용했다(그림 8.13). 인터넷 이용률 차이는 주로 연령과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며 종종 수입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은 거의 보편적이나 노인 세대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OECD 평균적으로 2018년 16~24세 인구의 97%가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이는 55~74세 인구의 약 67%와 비교된다. 16~2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거의 100%이다. 단, 멕시코와 터키(90%), 이스라엘과 미국(85-87%)은 예외이다. 반대로 55~57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국가별로 여전히 매우 다르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는 90% 이상이지만 그리스에서는 40%, 터키에서는 31%, 멕시코에서는 28%로 보고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시간은 인스턴트 메시지 보내기와 소셜 네트워킹에 사용된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2016년 14세 이상의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매일 3~4시간을 소비하며 그 시간은 젊은 사람들(14~24세)에게서 매일 4.5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림 8.14). 연령별 차이는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과 같이 인터넷을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국가에서 더 높다. 지속적인 연결성은 사람들의 개인 생활에서 태도 및 행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회관계의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전되며 업무와 레저 시간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OECD 전체적으로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고 보고한다. 이는 메시지 또는 그림에 의한 폭력을 말한다(그림 8.15). OECD 국가 중 사이버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거의 4명 중 한 명)와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사이버 폭력을 보고하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영국(스코틀랜드)이다. 해당 비율은 청소년의 5%만이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보고한 그리스에서 가장 낮다.

디지털 공간은 젊은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위험과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폭력(예. 공격적인 메시지 또는 의견의 빠른 생성 및 공유, 루머 확산, 피해자를 온라인 그룹에서 제외, 다른 형태의 괴롭힘)에의 노출은 우울증, 약물 사용, 관념화(ideation) 및 자살 시도를 포함하여 폭넓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 (OECD Brief Children & Young People's Mental Health in the Digital Age, Shaping the Future).

10대 소녀가 10대 소년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보고한 비율이 높다. 성별 차이는 특히 아일랜드, 영국에서 컸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소녀를 상대로 한 사이버 폭력 발생률이 소년에 대한 발생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스페인에서만 소년의 사이버 폭력 발생률이 소녀보다 3% 포인트 더 높다.

정의 및 측정

인터넷 사용 자료는 OECD 가구 및 개인의 ICT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모델 조사(OECD Model Survey on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http://oe.cd/hhind*)의 두 번째 개정 본을 기초로 하여 선택된 지표를 제공하는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 및 이용(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3개월의 회상 기간 동안 정의된다.

인터넷상 소비한 일일 시간에 대한 자료는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를 출처로 한다. 이는 2001년에 설립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실시되는 학술적인 국가 간 조사이다. 2년에 한 번씩 새로 선정된 섹션별 표본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실시된다. 해당 조사는 3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인구의 태도, 신념, 행위를 측정한다(*www.europeansocialsurvey.org/*).

사이버 폭력에 대한 자료는 메시지 또는 사진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전혀 없음"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에 이르는 답변 선택지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고 답변했던 11세, 13세, 15세 청소년의 비율을 말한다.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13세, 15세 젊은이를 말한다. 자료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 행동(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세계보건기구 공동 국가 간 조사(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 2013-14(*www.hbsc.org/*)를 바탕으로 한다.

참고문헌

OECD (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11992-en.*

OECD (2019), *Going Digital: Shaping Policies, Improving Liv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12012-en.*

OECD (2019),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People's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11800-en.*

OECD (2019), Children & Young People's Mental Health in the Digital Age, Shaping the Future, *www.oecd.org/els/health-systems/Children-and-Young-People-Mental-Health-in-the-Digital-Ag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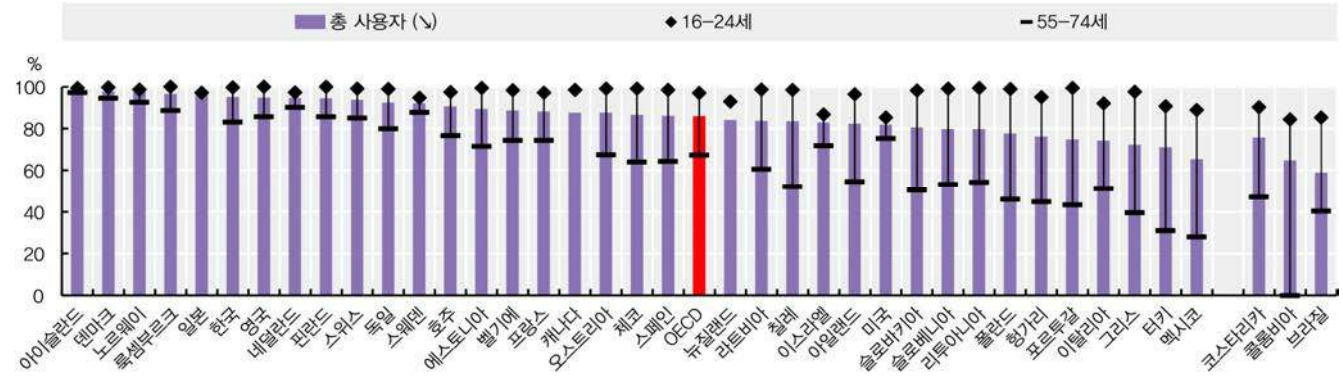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13: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인터넷 사용자는 3개월의 회상 기간 동안 정의된다. 캐나다와 일본의 회상 기간은 12개월이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2012년 자료이며, 호주, 이스라엘, 일본은 2016년, 칠레, 한국, 멕시코, 스위스, 미국은 2017년 자료이다. OECD 자료는 자료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균을 바탕으로 한다.

그림 8.15: OECD는 벨기에(플레미시), 벨기에(프렌치), 영국(잉글랜드), 영국(스코틀랜드), 영국(웨일스)을 제외한다.

8.13. 세대 간 인터넷 사용에 있어 차이가 크다

연령별 인터넷 사용자, 각 연령 그룹 인구 중 비율,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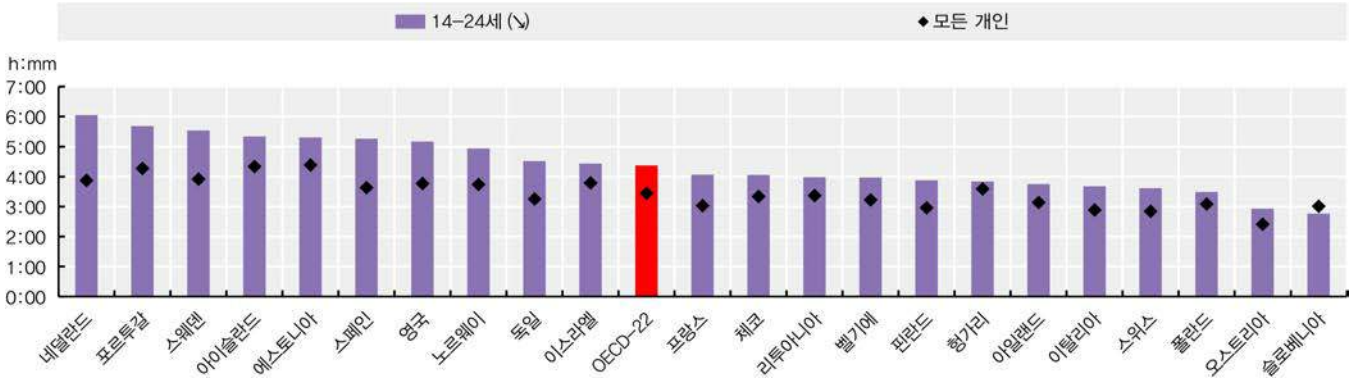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database), http://oe.cd/hhind (accessed February 2019).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826

8.14. 젊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매일 4시간 이상을 보낸다

젊은 사람과 모든 개인의 일별 인터넷 사용 시간,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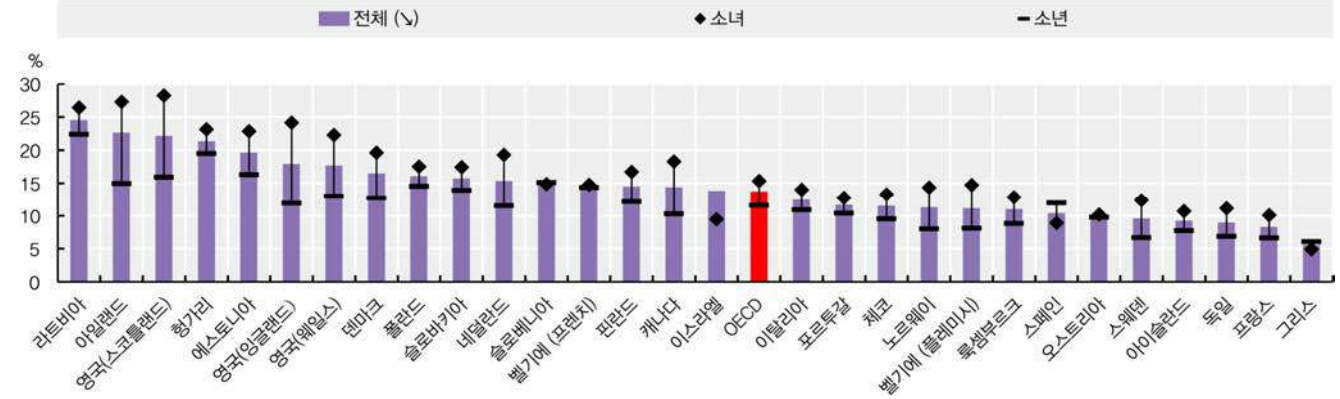


출처: OECD (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forthefutu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11992-en; OECD calculations based onThe European Social Survey microdata (2016 edition).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845

8.15. 10대 소녀가 소년보다 더 자주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고 보고한다

최소 한 번 메시지 또는 사진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의 비율, 성별, 2014년



출처: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http://oe.cd/child-well-being;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the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 2013-14, www.hbsc.org/.

Stat 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39864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또한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인구 노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연합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는 출판물을 통해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OECD Korea Policy Centre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이다. 2005년 설립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RCHSP: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는 2008년 다른 세 개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통합되면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주요 기능은 국제조세, 경쟁, 공공 거버넌스, 사회정책 분야에서 OECD 회원국의 국제적 기준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료 및 전문가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보건사회정책 분야에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정책적 대화와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의 업무는 크게 다음의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통계(ILO, ADB와 공동작업), 보건의료비 지출 및 재원조달 통계(WHO와 공동작업) 그리고 연금정책(ADB, WB와 공동작업)이다. 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제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발 행 일 : 2020년 6월

원 저 : OECD

번역 · 발행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 3702 7144 Fax. 02 3210 1313

www.oecdkorea.org

인 쇄 : 주식회사 월드프린테크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OECD 사회 지표

이 보고서는 격년으로 발행되는OECD 사회 지표 개관 보고서의 아홉 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복지 현황의 정량적 증거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몇가지 새로운 지표를 포함한 25개의 지표를 다루며 36개 OECD 회원국과 자료 수집이 가능한 주요 파트너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과 기타 G20 국가(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료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인 성 소수자에 집중하여, 그들의 수, 경제 및 복지 현황, 성소수자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특별 장에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사회 및 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위험 해결 범위에 대한 2018년 설문조사(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를 기초로 한 특별 섹션을 포함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독자들이 OECD 사회 지표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OECD 웹페이지(*http://oe.cd/s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출판물의 영문 원본 pdf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9-en
본 국문 번역본 pdf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oecdkorea.org – 자료실 – 발간도서

비매품/무료
93330
9 791186 043257
ISBN 979-11-86043-25-7